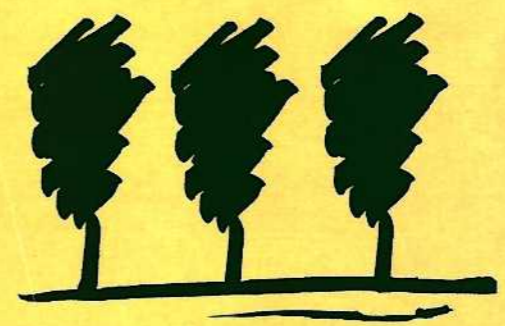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R1.1.7

인권하루소식

합본Ⅶ호
(96년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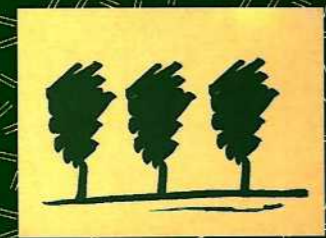
민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 (17권후 96) 호파출판

인권정보자료실
R1.1.7

민권운동사랑방



민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96년 10월분 총목차(735-756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746	10/17	1	승덕공고생 노조활동 이유로 강제 퇴사-고교실습생 직업선택권 보장 등 대책마련 시급/한총련 공판 방청기-검찰, 박수를 찬양·고무로 둔갑시키다
		2	"도대체 뭘 말할 수 있나"-교내 낙서판 게재에 국보법 적용/동국대 신문 <소나기>코너 전문 게재/근조! 명동성당-신자들, 전해투 농성장 강제철거/OECD, 한국노동법개정 감시기구 설치
747	10/18	1	국보법 구속 남편과 이혼해야 교사 임용-경기도 교육청, 차정원 씨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경찰, 추모비 사건 수사의지 있나?-사건발생 26일, 항의농성 24일제/민운탄대책위 성명, 노진추 탄압중 단축구/피해자진술권 허용 촉구, 민변 등 재항고장 제출
		2	인권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③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간사 정유진 씨/행사와 동정
748	10/19	1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온 국민 동참을-시민연대 발족, 과거청산 촉구·기금마련 계획/고려대, 문화계 행사 <희망> 불허
		2	울지병원 해고자 단식 18일째 실신-병원측, 복직조건으로 반성문 요구/인권영화제 작품소개①<도둑맞은 아이들>/인권간행물
749	10/22	1	안하무인 공권력, 고개 숙인 대화-청년 문화행사 빈번이 원천봉쇄/다시보는 국정감사-수사기관의 인권침해
		2	"21세기형 통제 반대", 전자주민카드 철회 운동/노골화되는 경찰폭력-경찰, 영광분당 신부 구타연행/한총련 사건 공판안내/주간인권호름
750	10/23	1	'국민인권기구' 설치 연구검토중-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계획없다"/국민인권기구란?/학교가 추모비 탈취, 경찰 공식발표 예정/다시보는 국정감사-공안관련사범 구속자 현황
		2	"철거에 앞서 주거권 보장하라" 방배4동 철거, 주민 8개월째 대항/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가두서명/인권영화제 작품소개②-<망각에 반대하며> <불굴> <유령을 부르며>
751	10/24	1	한국후꼬꾸, 노조끼기 혈안-노조방침, "때리면 맞겠다"/다시보는 국정감사-시위 관련 구속자 현황
		2	노인복지는 시혜 아닌 권리-노령수당 65세 이상 지급 판결/6월항쟁 10주년 기념공연 <96 당당하게>/지하철노조협의회, 유덕상 위원장 석방 촉구/한권의 책-「가내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행사와 동정
752	10/25	1	길가던 대학생 강제연행, 4시간 감금-광주북부경찰서, 한총련 수배자로 오인/한국후꼬꾸, 안전장치 제거하고 작업 강행, 산재 발생/당정, 집회강제해산 법제화 기도-국민 기본권 억압 우려/천주교 전국사제단, 사제 구타사건 강력 항의
		2	<자료 전문> ILO가내노동자의 권리 조약(1996년)/인권영화제 작품소개③-<숨겨진 이미지> <어느 관료의 죽음> <우리는 왜 노래하지 않는가>
753	10/26	1	안산 후꼬꾸, 노조 고문변호사 출입금지, 회장실 다녀왔다는 이유로 징계회부/전국연합, 대공수사권 부활 비판,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다시보는 국정감사-법무부
		2	"방어 위해 돌을 던졌을 뿐", 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공판/교육개혁연대회의, 교육기본법 등 제·개정 국회청원/제1회 인권영화제 상영시간표
754	10/29	1	검·경 인권교육 실상 공개 논의 요망, 일선 교육 9백회에도 인권유린 줄지 않아/경원대생 명동성당 농성 돌입, 학원자치·추모비 사건 처벌 요구/다시보는 국정감사-환경노동위
		2	23일 부산 송당마을 강제철거 과정에서 철거장패 흉기에 맞아 주민 중태/KNCC, 11월 한달간 외국인노동자 선교실무자 교육/주간인권호름
755	10/30	1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열려/다시보는 국정감사-환경노동위/한총련 사건 공판안내
		2	벡타이부대, 노동법 개악 저지 나서-사무노련 명동성당 결의대회/경원대생 연행 시도, 천주교인권위 중재로 실패/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제10회 인권상 후보 추천/인권영화제 작품소개④-<플로 콘템플라시온 이야기> <진실을 말하고 뛰어라> <평화의 가장자리에서>
756	10/31	1	12년전 군의문사, 자살 아니다-국민고충처리위, 허원근 씨 사건 재수사 지시/공산주의자연합 결성 혐의, 경찰 직장인 등 8명 구속/추모비 학교측 또 부인-경원대 학생과장, 소환 불응
		2·3	인권하루소식 10월분 총목차(735-756호)

인권하루소식

96년 11월

(제757호 - 제778호)

D-1일 전
제1회 인권영화제
일시 : 11월 2-8일
장소 : 이화여대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성희롱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 서광프라자 여직원 7명...성폭력금지 조항 신설돼야

직장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려 온 여성노동자들이 회사에서도 쫓겨나는 등 이중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수년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직장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서광프라자 부천매장에 근무해 온 정미화(35)씨 등 여직원 7명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이 아무개 소장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해 왔다. 이 소장은 성적, 모욕적 언어를 비롯해 신체를 만지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여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며 9월 25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

피해 여직원 사직서 제출 이후 여성단체의 항의가 잇따르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가해자인 이 소장이 회사를 사직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회사가 피해 여성들의 사표를 수리해 버린 뒤, 원상복구를 거부함으로써 제2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회사측은 "이들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피해여성들에겐 또한 번의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회사는 사표가 제출된 직후 곧바로 새 직

원을 채용하기 시작했고, 일주일도 안돼서 빈 자리를 모두 채웠다고 한다.

회사측 측은 직원채용 동료들의 복귀를 원하는 한 여직원은 "본인들이 원해서 사표를 제출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회사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들의 상담을 맡았던 인천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들도 피해자들의 원상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회사를 상대로 한 항의 작업을 계속 벌일 예정이다.

한연숙 인천여성노동자회 부회장은 "직장내 실질적인 차별에 대해 개인적으로 항의하고 남성의 의식변화만 요구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이라며 "남녀고용평등법 내에 성폭력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여성민우회·전국사무노련 등 여성·노동단체들은 남녀고용차별 철폐 및 성폭력 방지 등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남녀고용평등법 내에 직장내 성폭력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준비가 되는대로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일맛이가 이사했습니다.
주소: 성북구 동소문동 1가 42번지 정화빌딩 402호
전화:762-8201전송:764-8364

자녀 성교육 강좌 개설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소장 이상덕)는 11월8일부터 12월10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자녀 성교육을 위한 어머니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엄마가 먼저 아는 성"이란 제목아래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25명의 어머니를 모집해 여성학 강사와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가 집단상담, 토론, 경험나누기와 강의형식을 혼합해 진행될 예정이

다. 매주 화,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여성평화의 집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회비 5만원. 문의: 269-2965(조유경)

미아 7동 생가 철거 주민 등 76명 연행

29일 오전 미아 7동 재개발지구에서 강제철거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생가 두 채가 파괴되고 주민 6명이 부상을 입어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샀다.

또한 재개발조합(조합장 이기태)에 항의차 찾아간 주민 52명이 북부경찰서로 연행됐으며, 이들을 면회하러 가던 24명도 전원 연행됐다. 연행자 가운데 15명 연립 김진홍 대표 등 7명이 구류를 받아 서울시내 경찰서에 분산 수용됐다.

다시보는 국정감사 노동부

원진레이온 직업병자에 대한 후속관리 현황

1. 연도별 직업병 발생 환자수 (단위:명)

연도	계	87	이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계	637	1	3	17	14	34	42	96	110	45	178	97	

2. 환자별 요양현황(단위:명)

총요양승인환자수: 637명
-요양환자수:614명
-사망자수:23명
(업무상:13명, 업무외:9명, 미청구:1명)

구분	계	입원	통원
계	614	8	606

3. 치료종결후 재취업 현황

이황화탄소중독증의 경우 현행 의학상 완치가 불가능하고 다만 합병증의 악화를 방지하는 보존적인 치료만 가능하며 직업병으로 판정되어 요양중인 자 614명 전원 현재 까지 치료중에 있음. 따라서 치료종결후 재취업한 환자는 없음

전자주민카드 철회!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전자주민카드사업의 전면 철회를 위해 지난 10월초 구성된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통합 전자주민카드시행반대공동대책위)는 정부가 추진중인 전자주민카드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11월2일 오후2시 대학로 홍사단 강당에서 연다.

통합 전자주민카드시행반대공동대책위는 정부가 95년 4월부터 추진한 전자주민카드 시행사업은 보안시스템을 안기부에서 담당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21세기형

국민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국민의 사적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의 문제점과 국민의 사적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공론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조명해 본 정보화 시대와 전자주민카드(강내회, 중앙대 영문학) △국민의 사적 권리를 중심으로 본 정보화사회의 법률과 제도(임영화 변호사) △전자주민카드는 보안기술상에 있어 완전한가?(양기창 컴퓨터 보안전문가) △전자주민카드를 중심으로한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사회단체의 역할(김형준 바른정보 대표) 등이다.

인권영화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개막제

1부: 개막식
2부: 인권회복을 위한 진혼극 "마른잎 다시 살어나"
일시: 11월 2일(토) 오후 2시
장소: 이화여대 이화광장
출연: 연희극패 맘판, 녹색여성단 금수강산, 희망새 대학생 노래패, 이화여대풍물패 100여 명등

⇒ 폐막제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노래공연
"진혼에서 부활로, 인권을 노래하라!"
일시: 11월 8일(토) 오후 7시
장소: 이화여대 이화광장
사회: 최광기/ 출연: 정태춘, 박은옥, 안치환, 최도은, 희망의 노래 꽃다지, 노래를 찾는 사람들, 메이데이, 희망새, 노래마을, 가극단 금강, 솔샘 에기방 청소년 울동패, 서울대병원 노래패 넝쿨, 서울지역대학생 노래패협의회등

첫날 상영시간표

- 4:00-5:50 잊지 말자(110분)
- 6:10-6:20 불굴(10분)
- 6:20-6:50 악마의 자식들(30분)
- 6:50-7:50 유령을 부르며(60분)
- 8:10-10:10 플로론편플라시온 이야기(120분)

*인권운동사랑방 운영·자문위원, 하루소식 독자께서는 안내석으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 ---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⑤

<하비 밀크의 시간 (The Times of Harvey Milk)>

Robert Epstein/미국/ 1984/ 나레이션: 하비 피어스타인/ 87분
85년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작
하비 밀크는 게이 활동가로서는 최초로 샌프란시스코의 시청감시관(Supervisor)에 선출된 인물이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자신이 게이임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진보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그의 노력은 수많은 편견과 장애물에 부딪치게 되고, 결국 그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 8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독립 다큐멘터리로, 감독 로버트 엡스타인은 게이들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던 좌파 운동가의 고백으로부터 하비가 살해당한 바로 그 날 조직된 4만5천 명의 촛불 시위 장면이 이르기까지, 주변 인물의 인터뷰 및 방대한 자료 화면을 동원하며, 새로운 세상을 갈구한 사회 운동과 게이 액티비즘에 대한 면밀한 케이스 스터디와도 같은 작품을 만들어냈다.

→상영시간: 3일(일) 오후 7:05-8:32(학관 110)/ 7일(목) 오후 8:40-10:07 법정대 강당

<미국의 꿈 (American Dream)>

Barbara Kopple/ 미국/ 1989/ 100분
91년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작
레이건 시대의 개막은 미국의 노동자 계급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았다. 신보수주의로 불리워지는 그의 정책의 핵심은 노조의 무력화에 있었고, 그러한 정책의 여파는 84년 미네소타 오스틴의 호텔사 노동자들에게도 예외없이 돌아다녔다. 거대한 다국적 햄 제조 기업인 호텔사는 83년도에 2천9백만 달러의 순익을 남겼지만, 노동자들은 시간당 임금을 10.69 달러에서 8.25 달러로 삭감할 것을 강요당했다. <미국의 꿈>은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려는 호텔 노동조합의 장기간에 걸친 파업투쟁에서 보이는 노동자들의 희망과 좌절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있다. 여성 감독 바바라 코플은 이미 77년에 켄터키 지역 탄광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록한 <할란 지역 Harlan County, U.S.A.>로 한차례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상영시간: 3일 오후 3:30-5:10(학관 414)/ 4일 오후 6:30-8:10(가정관 318)

<여방의 여인들 (The Women Outside)>

박혜정 & J T Takagi/ 미국/ 1995/ 60분/ 기록영화
이 다큐멘터리는 전통적으로 한국여자들을 읊어대 왔던 '좋은 여자'에 대한 유교적 관념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좋은 여자'란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줄 아는 여자'라는 어려운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회복 과정을 여성의 눈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담론과 민족담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2중의 고통을 끌어 안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삶이 그들 자신의 입을 통해서 기술되어 있다.

가난한 농가의 딸들이, 어려운 여성노동자들이 기지촌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들의 기지촌에서의 고통과 희망 이야기를 축으로 하여, 주둔군으로서의 미군과 한국인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 기지촌에서의 미군의 매매춘에 대한 상반된 견해, 기지촌 여성들의 공동체인 두레방, 윤금이 씨 살해사건, 송중순 씨 사건 등등에 관한 인터뷰와 기록 필름 등에 이르기까지 6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는 담아내기 힘든 내용들이 능률적으로 응축되어 있다. →상영시간: 3일 오후 8:40-9:40(학관 414)

'기막' 제1회인권영화제

인권하루소식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장소: 이화여대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집회부터 일일주점까지 모두 안돼!

한총련 빌미 기본권 통제...제한선이 없다

한총련 사태를 빌미삼은 정권의 극우경화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아 왔다. 최근 정부는 집회·시위는 물론, 통신공간·진보적 출판물·문화행사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0일 경찰청은 '공산주의자 연합'이라는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7명을 구속했다. 모임은 올해 초부터 몇차례 세미나를 한 것 외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강령과 규약의 내용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

단체 결성 혐의를 적용했다.

'안기부 비판' 안된다!

컴퓨터통신에 대한 통제도 예외는 아니다. 컴퓨터 동호회 '희망터' 회원인 윤석진(27) 씨 등 2명이 지난 31일 통신 상에 불온한 글을 띄웠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이들의 글이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혐의를 씌우고 있지만, 윤 씨가 올린 글은 '무장공비'에 대한 은정적 시각을 나타낸 것일뿐 이적 의도와는 무관한 글이었다(관련기사 2면).

또한 31일 정보통신위원회는 10월 22일자로 천리안 '희망터'에 실린 전국연합의 글(4524번), "매려잡자, 안기부"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삭제를 요청해 왔다. 이 글은 전국연합이 펴낸 「안기부법 개악저지를 위한 간부 결의대회」 자료집으로서 최근 정부와 여당의 안기부 수사권 강화 지침을 비판하며, 안기부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로, 고문당한 손병선 씨 등의 피해사례를 실고 있다.

전국연합과 '희망터'측은 정보통신위원회의 삭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

다.

월간 사회평론<길> 수거 한편, 31일 광주북부경찰서 보안과 형사들은 "기사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광주신국체서점에 진열된 월간 사회평론<길>지 한 권을 수거해 갔다. <길>지 측은 이를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공안당국의 해명과 수거해간 책자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최근 상지대와 동국대 신문사 등 대학신문 기자에 대한 구속, 「희망」 「청년 문화제」 등 문화행사의 불허, 그리고 2일 건국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농민회 주최 일일주점 불허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의 자유권 제한은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영화제 행사 연락처: 법학과학생회실 360-3570 이대 총학생회 360-3281

인권영화제가 바로 오늘 시작됩니다

1부: 개막식
2부: 인권회복을 위한 진혼극 "마른잎 다시 살어나"
일시: 11월 2일(토) 오후 2시
장소: 이화여대 이화광장
출연: 연희극패 맘판, 녹색여성단 금수강산, 희망새 대학생 노래패, 이화여대풍물패 100여 명등

상영시간표

- 첫날(2일): 법정대 강당
- 4:00-5:50 잊지 말자(110분)
 - 6:10-6:20 불굴(10분)
 - 6:20-6:50 악마의 자식들(30분)
 - 6:50-7:50 유령을 부르며(60분)
 - 8:10-10:10 플로론편플라시온 이야기(120분)

*인권운동사랑방 운영·자문위원, 하루소식 독자께서는 안내석으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날(3일): 학관

- 1:30-3:15 평화의 가장자리에서(103분)
- 1:30-3:20 진실을 말하고 뛰어라(110분)
- 3:30-5:10 미국의 꿈(100분)
- 5:10-6:45 숨겨진 이미지(92분)
- 5:45-7:50 지하의 민중(125분)
- 5:45-6:45 배신의 시간 속에서(60분)
- 7:10-7:36 하늘(26분)
- 7:40-8:35 전장의 여인들(55분)
- 8:40-9:40 이방의 여인들(60분)
- 7:05-8:32 하비 밀크의 시대(87분)

셋째날(4일): 법정대강당, 가정관

- 4:30-6:02 우리는 왜 노래하지 않는가?(92분, 법정대)
- 6:30-7:57 어느 관료의 죽음(92분)
- 6:30-8:10 미국의 꿈(100분, 가정관)
- 8:20-8:32 새벽-혹은 부시의 마약전쟁(12분, 법정대)
- 8:32-9:32 한 국가의 탄생(60분, 법정대)
- 9:32-10:00 비상사태-LA경찰의 내막(28분, 법정대)
- 8:30-10:02 숨겨진 이미지(92분, 가정관)

공안탄압, 안기부 수사권 확대 반대 AI, 고문방지위원회에 호소

국제앰네스티(AI)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남한정부의 민주운동탄압과 안기부수사권 확대 방침 등을 반대하며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AI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연세대 시위를 이른바 좌파 그룹에 대한 집중탄압의 구실로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AI는 "8월 이후 남한정부가 좌파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탄압하기로 함에 따라, 정치범의 숫자는 최근 몇 달 동안 급속하게 증가했다"며 비폭력 혐의로 구금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구타, 성희롱, 불법연행 및 구금, 부상자 방치 등 한총련 대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대우를 지적하며, 남한정부의 책임있는 조사와 경찰교육의 재고 등을 촉구했다.

AI는 2주후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서 대학생들에 대한 부당대우의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AI는 "정부가 피의자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도 없이

안기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정부에 오히려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기부·집시법 개악저지 전국연합, 오늘 결의대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는 오늘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안기부법·집시법 개악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다.

전국연합은 "개정된 3년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정권계장출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와 신한국당은 남북대치국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강조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인권을 탄압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뒤 참가자들은 종로1가 제일은행 본점까지 거리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전노련, 가혹수사 제기 노점상 2명 서초서 연행

전국노점상연합회는 1일 서초경찰서로 연행된 회원

서진국 씨와 한충기 씨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로 걷어 채이고 뺨을 얻어 맞는 등 2시간 가까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PC통신 천리안 '희망터'에 게재된 글과 관련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윤석진 씨의 글 전문을 소개한다.

그들이 무장간첩일까?(5654/96/09/19)

무장간첩이라...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과연 그들이 무장간첩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우리가 무장간첩이라고 하면 옛날 124군부대나 김신조 등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들과 지금의 그들을 잘 보고 있노라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11명이 자살한 부분에서 그들에게 무기라고는 권총 1정이 전부였다고 한다. TV에 나오는 수류탄 모양의 노란 뚜껑이 있는 물건은 썩부러져 있었다. 즉 수류탄이 아닌 플라스틱의 물건이었으니 무기는 아니었을 것이고...

11명이 권총 1정이면 그들을 과연 무장간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포(?)된 간첩(?)도 민간인과 이야기하다가 잡혔는데 권총 1정을 들고 있었다고 하고... 지금 작전을 하면서 강릉 시내 여기저기서 총격전을 한다고 해서 들어보니 우리쪽에서만 자동소총사격을 할 뿐 그들은 응사가 없이 도망간다고 한다. 아마 무기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배안에 있던 AK소총도 3정 정도라던데 그건 기본으로 갖고 다니던 화력일 것이고... 가지고 나오지도 않은 것도 이상하고...

그들은 사병이 없이 전부 장교라고 한다. 최하가 소위라고 하는데 그들은 지금 자살용이라는 권총 이외에는 무기가 없는 것은 아닐까? 과연 그들이 무장간첩으로 남파된 것일까?

아직 우리쪽에서는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난 아무래도 그들이 표류(?)한 군인인 것 같다. 물론 내 생각일 뿐이지만 민간인과 만나도 그들은 별로 해를 끼치지 않은 것 같다. TV에 나오는 증인들도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면 거기에 나올 수도 없었겠지...

무장간첩이 권총 1정으로 집단자살이라...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들이 표류한 북한 군인이라면... 우리 또 한 번 정부에 속고 그들은 토끼사냥으로 잡아 죽이는 것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더구나 잠수함(잠수정이 아닌 정규화력의 잠수함이라고 하더군요...)이라면 그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 빈약한 화력으로 내려 왔을까? 명단으로 보면 그들은 북한 해군 소속인 것으로 판단된다. 과연 그들은 남파간첩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경계(이 말은 남한과 북한은 잠수함 등으로 휴전선을 넘어가며 활동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남한도 휴전선을 넘어간다)활동 중 표류한 북한 해군일까?

가슴 아프다. 어쨌든 11명이 집단자살을 한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

그들도 가족이 있을텐데... 어쨌든 그들은 아직 우리사람들을 한 사람도 해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니 내가 그들을 사실 확인도 안하고 미워할 필요는 없겠지...

다시보는 국정감사 노동부

장애인고용의무 대상사업체의 고용의무 이행현황 (96년8월기준, 단위: 기소, 명)

구분	94년	95년	96년6월
대상사업주	2,141	2,229	2,227
상시근로자수	2,719,944	2,922,444	2,917,096
적용근로자수	2,092,005	2,238,490	2,225,180
고용의무인원	40,585	43,505	44,296
장애인근로자수	9,097	9,582	9,816
의무이행사업주	230	240	253
기준고용률	2%	2%	2%
실고용률	0.43%	0.43%	0.44%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장소: 이화여대
문의:360-3570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치졸한 정부, 인권영화제 방해공작 이화여대, 정부의 압력에 곤혹

제1회 인권영화제가 지난 2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성황리에 개막됐다. 그러나, 인권영화제를 무산시키려는 정부의 방해공작이 계속돼 폐막일까지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왜 취소하러는지 모르겠다

특히 영화제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이화여대측은 정부의 계속되는 압력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막전부터 정부는 학교측에 공연을 취소시키라는 압력을 집요하게 가했다. 학교측 한 관계자는 "우리도 왜 영화제가 안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하지만 문화체육부가 교육부를 통해 계속 압력을 행사해 와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며 외압을 시인했다.

결국 이화여대측은 개막 전날인 1일 "행사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영화제 조직위측도 외압에 시달리는 이대측 입장을 고려해 이화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개막공연을 실내 개막식으로 대체했다.

개막제 '개막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압력은 그치지 않고 있다. 서대문구청은 2일 이화여대측에 공연을 중단시키라는 공문을 보냈다. 또한, 영화제조직위원회에도 공연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연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구청 관계자는 "행사 당일 문체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고 말해 문체부의 압력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에도 사

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공권력이 투입되더라도 그것은 구청의 요청에 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구청, 문체부의 압력시사

주최측은 "인권을 이야기하는 영화제를 가장 반인륜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정부측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분위기가. 학교당국이 '폐막

제만 취소하면 영화상영은 그대로 두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측은 예정대로 영화상영 및 폐막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측 압력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영화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도는 기대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오후 4시 개막작품 <잊지말자>에 1천1백여 명이 몰려 일부가 되돌아 간 것을 비롯해 2, 3일 양일 동안 연인원 5천6백여 명이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주최측은 집계했다.

제1회 인권영화제 '영화감상문' 모집

인권영화제가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치뤄지고 있습니다. 영화는 무료 상영입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더욱 좋구요. 후원회원 여러분의 도움이 제2회 인권영화제의 밑거름이 됩니다. 남학생, 노총각도 입장가능하냐구요? 물론입니다.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들을 보신 소감이 어땠습니까?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영화평을 모집합니다. 간단한 소감이라도 좋습니다.

보내는 곳 ID: rights(천리안, 하이텔)/전송:715-9185

상영시간표

5일(화)

- 4:30-5:00 변화의 초상
- 5:00-5:30 콜롬비아-살인자 천국
- 5:30-7:00 도둑맞은 아이들-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
- 7:20-8:36 한 민족의 죽음
- 8:40-9:40 배신의 시간 속에서

6일(수)

- 4:30-5:50 해고자
- 6:10-6:16 그리운 얼굴들
- 6:16-7:16 분단을 넘어선 사람들
- 7:40-7:36 이발
- 7:50-9:50 누가 빈센트 친을 죽였는가?

주요공판안내

5일(화)

- 박치정, 오후2시,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선고
- 장대업외5인, 오후3시,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속행
- 이종철, 오전10시, 국보법등, 11단독, 526호 선고
- 이승환, 오전11시, 국보법, 합의23부, 319호 속행
- 조성우, 오전11시, 국보법(회합,통신), 합의23부, 319호 속행
- 서대연, 오후2시, 국보법, 3단독, 320호 속행

7일(목)

- 이광철, 오전10시,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선고
- 강순정, 오후2시, 국보법, 합의23부, 319호 속행

8일(금)

- 허인회, 오전10시, 국보법, 9단독, 317호 선고

9일(토)

- 이종석외 5인, 오전10시,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선고
- 이상 서울지법 형사부

사람모인 곳이면 공권력 투입 문화행사 <당당하게>도 원천봉쇄

경찰은 전국대학민주운동회 등의 주최로 3일 오후 5시 경희대 노천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던 문화공연 <96 당당하게>를 원천봉쇄했다. 그러나, 경찰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몰려든 1천5백여 시민·학생들의 참여 속에 저녁 6시30분경부터 교문 앞에서 약식 공연이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날 경찰력 투입은 학교 측 의사와 관계없이 경찰고 위층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당국은 지난 달 28일 주최측에 행사 불허 통지서를 보내면서도 '행사를 하면 묵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한다. 학교측의 책임있는 한 관계자는 "우리가 시설보호를 요청한 적도 없는데 경찰 스스로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1일 "학교에서 시설보호를 요청해 왔다"는 이유를 대며 처음으로 원천봉쇄 방침을 통보했다. 1일 주최측으로부터 "일체 시위를 벌이지 않고 시설도 보호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난 뒤, 원천봉쇄 방침을 철회했다. 그러나, 행사 당일인 일요일이 되자 상황은 급전되어, 어떤 언

유에서인지 서울경찰청은 전경 15개 중대를 풀어 경희대를 원천봉쇄했다. 행사를 준비했던 신동호(32·민족문학작가회의) 씨는 "학교측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봉쇄할 법적근거도 없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다는 소문이 경찰 방침을 바꾼 요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안기부 수사권 부활 반대 정의와 인권위원회

4일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 목사)는 "안기부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인권유린의 소지가 크다"며 안기부법 개정을 반대했다.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안기부 수사권의 부활은 정치인, 학자, 문화예술인, 종교인 등 모든 사람들의 활동에 안기부가 개입·사찰할 수 있다는 것이며, 민간통일운동을 더욱 위축시키려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안기부 수사권은 점차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은 신문 큰 소식 <인권하루소식>

국내 최초의 팩스신문을 아십니까? <인권하루소식>은 매주 5일 팩스(우편 주 2회)를 통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 벌어지는 인권소식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3년 9월7일 한국 최초의 팩스일간신문을 낸 이래 한 차례의 사고없이 3년이 넘게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번 제1회 인권영화제는 인권하루소식 3주년 기념행사로 마련된 것입니다.

인권하루소식을 구독함으로써 여러분은 인권문제를 알 개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권상황을 바꾸어 나가는데 한 몫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 '인권지기'가 되어 주십시오. 구독료 월1만원. 구독문의: 715-9185

주간/인권/호/름 (96년 10월 28일부터 11월3일까지)

<28일>(월)
광주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국회에 건의/경기 안양시 지역 17개 고교생 수업단축하고 '북한만행 규탄과 자유수호 범시민결의대회'에 동원/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 윤일선 씨 등 노동자 6명중 3명 사망/서울 북부지원 형사1부 한총련 시위와 관련해 특수공무 집행방해처상 혐의로 구속기소돼 5년 구형받은 조병욱(26·여) 씨에 대해 우울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

<29일>(화)
경기 가평군 두밀분교에 다니던 학생 17명 두밀분교 폐교를 규정한 '경기 도립학교 설치 개정조례'가 헌법상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천리안에 국민회의의 한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김동욱(33·은행원) 씨에게 무죄선고/일제에 강제징용됐던 김순길(73·부산)씨가 2년6개월간의 투쟁끝에 일본정부로부터 일제 후생연금 탈퇴수당 35엔(약2백50원)을 돌려받아

<30일>(수)
내무부, 경기도 과천시민회관에서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공동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가칭)'전자주민카드에 시행반대와 국민의 사적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행사 거부/서울경찰청, 한총련 대변인 박병언(23·구속) 씨 등 12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31일>(목)
이미경, 한영에 국회의원, 한총련 사태 당시 여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추행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촉구/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음반 사전심의는 명백한 검열"이라며 위헌결정/6월항쟁 10주년 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식/서울지방경찰청, 컴퓨터통신 게시판에서 강릉 무장간첩 사건이 조작극일 가능성등을 제기한 윤석진(27·서강대 사학술)씨 등 2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한국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민주노총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복귀 결정

<11월 1일>(금)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 정신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아무개(16) 군 등 2명에 대해 현행 성폭력법이 '신체장애인에 대한 처벌만 규정하고 있어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11월 2일>(토)
제1회 인권영화제 개막/포르투갈 <우사통신> 보도, 인도네시아 군대에 복무중인 3백명의 티모르 출신사병들이 한 하사관의 죽음과 관련해 탈영동 반란 일으켜

<11월 3일>(일)
6월항쟁 10주년 기념 노래마당 '당당하게' 경찰 원천봉쇄/안화심의 철폐를 위한 범민화인결의대회' 7백여명 참석

<해설>
헌법재판소가 얼마전 영화법 사전심의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음비법의 사전심의 부분 역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비디오물에 대한 부분은 위헌 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 나서서 위헌여부를 가려낼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태도이다. 관료사회의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한 씩씩함을 느끼며, "잠자는 자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한번 상기시켜주는 기회였다.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장소: 이화여대
문의:360-3570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올 상반기 경건완장에 120명 발생 경건완장에 예방대책마련 공청회

93년 2명이던 경건완장에 산재요양자가 94년 20명, 95년 1백28명, 96년 상반기 1백20명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 속에서 6일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구회 등이 서울시 의원회관에서 '경건완장에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영미(민주노총 산업안전부)

차장이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한 직업병실태 및 예방대책"을,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경건완장에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96년 노동부 국감자료를 보면 산재로 인정된 주요 직업병 발생현황에서 경건완장에 부분은 94년 0.9%에서 96년 6월 6.0%로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통신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

다. 노동시간이 길고 작업에 대한 노동자의 자율성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경건완장에의 급증은 쉽게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대한 정부 관리 감독이 부재한 상태이며, VDT 작업관리기준은 사업장에 강제력을 주지 못하고, 제조업종의 단순 반복작업에 대해선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없다. 물론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제도도 없다.

제1회 인권영화제 '영화감상문' 모집

인권영화제가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치뤄지고 있습니다. 영화는 무료 상영입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더욱 좋구요. 후원회원 여러분의 도움이 제2회 인권영화제의 밑거름이 됩니다.

남학생, 노총각도 입장가능하나요? 물론입니다.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들을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영화평을 모집합니다. 간단한 소감이라도 좋습니다.

보내는 곳 ID: rights(천리안, 하이텔)/전송:715-9185

상영시간표

- 6일(수)
4:30-5:50 해고자
6:10-6:16 그리운 얼굴들
6:16-7:16 분단을 넘어선 사람들
7:40-8:36 이발
7:50-9:50 누가 빈센트 친을 죽였는가?
- 7일(목)
4:30- 6:20 진실을 말하고 뛰어라
6:40- 7:10 수단-상처 입은 나라
7:10- 8:15 당신의 이웃집 아들
8:40-10:07 하비 밀크의 시대

뽀빠이 비리 사건 사회보장 확대 계기로

뽀빠이 이상용 씨의 자선기금 유용 사건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당사자인 이상용 씨에 대한 비난으로 국한시키는 것에 반대하며,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전면적 확대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진보정치연합(대표 노회찬)은 4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한 사기꾼의 개별적 사기행각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인간 중심의 사회복지정책을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진보정치연합은 또 "소수 특히 경건완장에 다발하고 있는 금융, 보험업종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호주·캐나다 등과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작업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주가 이행하도록 강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주영미 차장의 주장이다.

또한 백 교수도 현재의 VDT 작업관리지침을 대폭 수정하여 강제성을 가진 법으로 규정하며, 작업환경관리와 중상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발생할 경우 그때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자에게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노동자가 능동적으로 자기관리를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침해 제보후 받습니다.

715-9185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⑥

<이발> 미국/1992/렌디 레드로드/10분/극영화
인종적 편견과 갈등은 어느 곳에서나 잠복해 있게 마련
이고, 동네 이발소도 그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한 소도
시에 거주하는 인디언 여성은 그녀의 어린 딸을 이발소
에 데리고 올 때마다 일상적인 인종주의를 감지한다. 이
발소 안에 있는 자신과 어린 딸은 백인 이발사와 손님들
에 둘러싸여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끼고, 이발소 바깥의
한 인디언 노인은 피리를 불며 적선을 구한다. 그리고 그
러한 미묘한 긴장과 반목과 고립의 순간은 그녀로 하여
금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하고, 그러한 회상의 이
미지는 그녀의 어린 딸의 모습과 중첩된다. 이 단편 극영
화는 이렇듯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일상적인 공간과 시
간을 포착해서, 이러한 지배적인 문화체계에 대한 순응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 기구의 잠재된 메커니즘을 섬세하
게 묘사해낸다. 상영일시: 6일 오후 7:40-7:50

<누가 빈센트 전을 죽였는가? > 미국/90년/크리스틴 최,
레미 타지마/120분/91년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작

중국어 미국인의 살인 사건을 소재로 삼아 미국 사회의
인종 편견을 파헤친 이 작품은, 한국계 감독으로 우리에게
게도 널리 알려진 크리스틴 최의 대표작이다.

27세의 빈센트 친은 평범하고 모범적인 미국 시민이었
다. 살인사건이 벌어지던 날 그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서, 독신으로 지내는 마지막 날을 축하하고 있었다. 우연
히 벌어진 시비 끝에 그는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직
원인 백인 론 에벤스로부터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듣게
되고, 시비가 증폭되면서 에벤스는 친을 야구 방망이로
살해하고 만다. 사건은 곧 재판으로 회부되었고, 너무도
명확한 현장 증거 때문에 이 사건은 미국사회에서 하루
에도 수없이 발생하는 다른 살인사건의 하나처럼 곧 종
료될 듯 보였다. 그러나, 피부색의 차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운명을 갈라놓았고, 감추어져 있던 인종편견은 이 사
건의 보도와 재판과 종결과정에 이르기까지 망령처럼 친
의 가족을 따라다니게 된다. 계속되던 재판에서 에벤스는
약간의 벌금형만을 선고받으며, 이 결정에 대해 분노한 아
시아가 미국인들은 거세 항의 투쟁에 나서게 된다. 어떤
법정 드라마보다도 격동적인 순간을 담고 있는 이 영화
의 강점은, 개별적 사건을 통해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개
인을 학살한 사회적 장치와 의식에 대한 치열한 탐구에
있다. 상영일시: 6일 오후 7:50-9:50

<수단-상처입은 나라> 영국/94/저니맨 픽처스/30분/기록
수단은 인종과 종교, 사상적 갈등에 의해 끊임없는 내전
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피해자는 바로 수단의
국민들이며 이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내
전에 휘말려 고통받고 있다. 난민캠프의 참상과 학살의
현장, 교회가 불태워지고 화상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는 종교적인 믿음이나 사상적 갈등은 이미 아무런 의미
를 갖지 못한다. 어린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
으며 들뜬 곳곳에 널려있는 시체들은 아프리카의 인권상
황에 대한 적나라한 보고서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기아에서의
해방과 아동들의 구제라는 점을 부각시켜 주는 영화다.
상영일시: 7일 오후 6:40-7:10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
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통합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토론
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무부 입장에 대한
공동대위의 비판을 요약해 신는다. 또한 다음호에는 토론
회 주요부분을 요약·발췌할 예정이다<편집자주>.

- 1.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새로운 차원의 통합신분증명제도
2. 국민의 동의 절차의 무시
3.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인지의 여부

국민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사
회의 불필요하게 많고 복잡한 신분증명제도 자체에
있다.

- 4. 프라이버시 보호권의 위반
경제개발기구(OECD)의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6개 권고안 즉, 비밀정보금지, 분명한 수집목적, 정보
주체의 동의, 정보공여 거부권리, 법에 따른 정보수집,
자기정보열람권을 준수하였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OECD권고안의 모든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개인별고유번호의 문제
ITU(국제통신사업자연합)의 FPLMTS 계획의 보고
서에 따르면 한국, 일본, 독일 등 3개국에서 개인별
고유번호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개인별고유번호를 어
떤 방식으로 도입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아무 것도 없다. 오로지 내무부 문서에만 드러나고
있을 따름이다.

6. 감시와 통제 목적의 부재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감시와 통제의 목적이 없
고, 안기부는 보안대책 중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자문역
할만 할 뿐이고, 주민망에 전혀 접근하지도 않고, 앞으
로도 접근을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감시와 통제의
목적이 없다면 보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사
람이 추진기획단에 참석을 해야지 대공담당자가 추진기
획단에 참여할 이유는 전혀없다. 또한 전산센터의 자료
는 법에 의거해 기관에 정보제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안기부가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는 호언장담은 공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개인고유번호까지
도입이 된다면 전자주민카드는 21세기형 감시통제 장치
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7. 정보의 집중화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내무부 사업개요를 보면 분명히 전자주민카드 실시
이후 금융자산정보등 신용정보까지 통합할 계획을 수립
하고 있다. 신용정보까지 망으로 연결된다면 정보의 집
중은 어머어마해질 것이다.

8. 정보유출의 문제
크레킹에 의한 유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내무부의
간담회 자리에서 선 발제자들의 입을 통해 확인되고 있
다. 또한 시스템과 보안상의 문제는 차치해두더라도 사
람의 손에 의한 유출은 막을 수가 없다.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장소: 이화여대

문의:360-3570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앰네스티, 진관스님 석방운동 나서
“국보법,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에 대해 국
제앰네스티(AI)가 석방운동
에 나섰다.

AI는 5일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인권운동가 진관스
님의 석방을 촉구한다”며
“김영삼 대통령과 한국 정
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한 “최근 좌파 그룹에
대한 검거 선동에 따라 국
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되는 자가 증가하고 있다”

며 국보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진관스님은 지난 10월 1
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활
동 및 캐나다 동포 강병연
씨와의 만남 등을 이유로
구속됐으며, 구금 18일 만
에 서울구치소로 송치됐다.
AI는 “그가 안기부에서 17
일간 강도높은 심문을 받았
다. 담당변호사는 그가 매
일 15시간씩 심문을 받으면
서 극도의 압박과 긴장속에
지냈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한국정부에 항의했다.

공권력 성추행, 용납할 수 없는 일
한총련 비대위,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

한총련 강경진압 및 탄압
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한
총련 비대위)는 6일 오전
11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캠페인을 갖고, 경
찰의 여대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
구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한
총련 비대위 소속 전국연
합, 여성단체연합 등 단체
회원들은 “국정조사권을 통
해 성추행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력
히 주장했다.

최규업 비대위 실행위원
장은 “과거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같이 공권력에 의한
범죄는 특히 용납할 수 없
는 일”이라며 “경찰에 잘못

이 없다면 이를 밝히기 위
해서라도 국정조사권 발동
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총련 비대위는 김
수한 국회의장과 국회 내무
위원장, 여야 대표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성추행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의원의 노
력을 거듭 당부했다.

서한을 통해 비대위는 “사
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서는 가해자로 거론되는 경
찰에게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또
는 국회 내무위 차원의 진
상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조사작업이 이뤄지기를 강
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원 노동권보장 촉구
정해숙위원장 단식농성

전교조직원노동조합 정해
숙(61) 위원장은 5일부터
전교조본부에서 ‘교원의 노
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정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노사개혁위원회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교원
노조 불가’만을 고집하는
것은 개혁의 허구성을 스스
로 폭로하는 것”이라며 교
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
구했다.

또한 전교조 본부는 4일

부터 비상농성체제로 조직
을 전환하고, 각 지부와 지
회는 오는 10일 여의도광장
에서 열리는 전국교사대회
총력동원을 위한 비상체제
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인권영화제 보장하라”
진보정치연합 성명

정부의 ‘인권영화제 중지’
명령과 관련, 진보정치연합
(대표 노회찬)은 6일 성명
을 통해 “인권영화제 진행
및 모든 표현의 자유를 즉
각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진보정치연합은 “이번 행
정조치는 문화예술을 규제
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는
정부의 관료주의적 시각에
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연
법상의 공연신고 의무를 폐
지하고, 비상업적 공연물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제1회 인권영화제가 이틀 남았습니다

‘영화감상문’ 모집

영화감상문을 받습니다. 감상문을 모아 인권영화제 소식
지를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인권운동사랑방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01410 참세상→37.제1회 인권영화제 게시판

상영시간표-----

7일(목)

- 4:30- 6:20 진실을 말하고 뛰어라(110분)
6:40- 7:10 수단-상처 입은 나라(30분)
7:10- 8:15 당신의 이웃집 아들(65분)
8:40-10:07 하비 밀크의 시대(87분)

8일(금)

- 4:30- 4:47 암살학교(17분)
4:50- 6:55 지하의 민중(125분)
7:30- 9:30 폐막제

작품 하이라이트 상영/정대춘, 안치환 씨등 가수들
과의 폐막축하 공연 등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김주환(미국 펜실바니아 대학 박사과정)

이 글은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펴낸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것으로, 8월 25일 서울대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된 바 있다 <면집자주>.

한국에서 과연 전국민에게 강제로 부여하는 전자신분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것인가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의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의 칩속에 담아 프라이버시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전자주민카드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과연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디지털 신분증이 한국 국민의 별다른 저항없이 수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7가지 41개 항목의 개인신상정보를 하나의 아이씨(IC) 칩 속에 담은 전자주민카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전 국민에게 지문과 의료 등의 개인 신분정보가 들어있는 전자신분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시도인 것은 당연하다.

세계 최초의 시도

분단상황의 폐해는 넓고도 깊다. 그 중의 하나가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보편적인 신분증 제도, 즉 주민등록증 제도도 그 중 하나이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서만 채취하는 지문을 우리 국민들은 18세만 되면 무조건 열 손가락의 지문을 국가 기관에 맡긴다. 전국민에 대한 신분증 발급과 지문채취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이며 또 위협이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가에 대해 미처 심각하게 고려해 보기도 전에 우리는 더욱 더 위협한 전자주민카드로 나가고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본 인권과 적극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분명치 않은 듯하다. 프라이버시권은 보통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알릴 것

인가 말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되며 "국가기관을 포함한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개개인이 열람과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80년 말 전국민신분증제도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국제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들의 반대에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미국에서도 60년대 이래 여러차례 보편적 신분증제도를 도입하려 하였지만 각종 인권단체의 광범위한 저항 때문에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등 국민반대로 포기

90년 EC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안(Privacy Directive)을 상정하였다. 정보주체인 개인의 분명한 동의없는 합부로 정보를 수집, 처리,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EC 가입국 12개국에 모두 적용된다. OECD도 82년에 이미 정부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OECD의 개인정보 6원칙

이러한 법안들의 공통된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정보파일에는 절대 비밀정보가 있어서는 안된다. 둘째, 정보수집에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목적의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셋째, 정보수집의 대상이 되는 정보 주체의 확실하고도 의식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넷째, 정보주체는 자신이 공여할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야 한다. 다섯째, 정보수집 이전에 그에 관한 적절한 법률적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정보주체는 언제라도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를 열람해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지야 한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흡하기 그지 없다. 위의 여섯 가지 원칙에 충실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사적영역에 의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규정조차 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예외 규정 역시 입법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경찰, 관공서, 정보기관 등 각종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인 개인은 항상 접근, 열람, 수정 청구를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나라 법적보호장치는 지난 해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사적영역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상품화와 남용 등에 대한 규제는 아직 없다.

국민에게 선택권을

지금처럼 민주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행정적인 편의를 주된 이유로 내세워서 추진 중인 전자주민카드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출현을 막아야 한다.

우선 정보화가 물고 오고 있는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인 사생활침해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또 사생활 보호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 둔 후에야 전자주민카드 실행해야 한다.

프라이버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카드 자체보다도 그러한 전자카드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전국민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이는 데이터 베이스에 의한 전국민의 감시체제를 일컫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 + surveillance)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호른 미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프라이버시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개개인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때 뿐이다.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모으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국민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의 편리함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리고, 위험성을 막을 여러 제도적 장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세계각국의 프라이버시 옹호 관련 단체들은 지금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1회 인권영화제 마지막 날

장소: 이화여대
문의: 360-3281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탑골공원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복지, 소득보장 가장 시급

기댈 곳 없는 노인들의 보금자리, 종로 탑골공원. 어느덧 겨울문턱에 들어 온 온은 쌀쌀해졌지만 공원은 이끼없이 노인들의 발길로 북적댄다. 7일 탑골공원에 모인 이곳의 터줏대감들에게 모처럼만에 반가운 행사가 찾아갔다.

참여연대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조홍식 서울대 교수)는 7일 낮 12시부터 탑골공원 앞에서 2시간여 동안, 노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운동에 나선 참여연대는 "95년 현재 2백64만명으로 추산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천 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6.8%인 3백17만명, 2천20년엔 전체인구의 12.5%인 6백30만명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책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고 밝혔다.

21세기 고령화사회 도래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복지권(청구권) 인정 △노령수당 권리화 및 지급요건 완화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노령수당 지급 △의료 특별급여, 현금급여, 주거보

조비 지급 △건강 진단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실시 의무화 △노인취업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복지비용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현행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임의조항을 '하여야 한다'의 강제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복지 비용은 국가 책임 그러나, 노인복지법 개정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시각·관점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이정운 간사는 "노인복지의 하나의 권리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노인복지를 시혜의 차원에서만 바라보려 하며 이것이 노인복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에도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노인복지법 개정을 청원한 바 있으나 국회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아 올해 다시 한 번 국회 청원하게 됐다.

캠페인장 표정

이날 캠페인장에는 노인들이 직접 작성하는 '길거리 설문조사판'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노인복지시설 확대 △노인 취업 확대 △노인 여가시설 등 여섯 가지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 가장 응답한 노인들 가운데 2/3가 소득보장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주최측이 마련해 국회 의원에 보내는 '복지법 개정 촉구 엽서'에 정성껏 자신의 이름을 적는 노인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다.

후포꾸, 무더기 징계 핵심조합원 작업도 안 시켜

노조탄압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안산의 한국후포꾸가 노조원들을 또 다시 대량징계했다.

지난 5일 회사측은 근무지이탈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 회부했던 조합원 16명에게 회부했던 조합원 16명에게 징계 30일 등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후포꾸 노조원 가운데 2명이 구속되고 5명이 해고됐으며, 총 20명이 징계를 당했다.

한편, 후포꾸 노조측은 "핵심 조합원 30여명에겐 지난달 14일이래 작업도 없이 건물 내 감금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영화제 폐막식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때: 11월 8일(금) 오후 7시 30분
곳: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강당
1부-영화와 함께 만나는 인권현실
영화계 하이라이트 상영 및 주제별 초청연사 발연
2부-인권영화제 그것이 알고싶다
주최측과 관객과의 대화
3부-제2회 인권영화제를 기약하며
폐막선언/이화여대측의 감사인사/제1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의 경과보고 및 기약의 인사
4부-노래공연
출연진:경태준,박은옥/김예영/안지환/희망의 노래 꽃다지/노래를 찾는 사람들/희망세/노래마을/지하철노조 노래패 소리불결/서울지역대학생노래패협의회

◎상영시간

8일 오후 4:30- 4:47 압살학교/4:50- 6:55 지하의 민중

◎'영화감상문' 모집

주소: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인권운동사랑방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01410 참여상→37제1회 인권영화제 게시판

가정폭력 남편 살해...집행유예 13년간 상습 구타당하다 목 졸라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았던 이옥자 씨가 7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남편의 구타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살해하여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한 점,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려 노력한 사실 및 증거인과 가족들의 진정 등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씨는 결혼 뒤 13년간 상습적 구타를 당해왔으며, 술취한 남편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남편의 목을 졸라 죽게한 혐의로 지난 3월 17일 구속됐다.

제2회 인권교실 열려 고난함께 12일부터 5주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은 오는 11월12일부터 12월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8시 아현교회 중등부실에서 제2회 인권교실을 연다.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한 이번 교실은 인권의 기초적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국제인권법, 국내 인권현실에 대한 좌담 등의 순으로 마련되었다. 회비는 1만원.

△12일: 인권의 흐름(박재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19일: 국제인권법(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26일: 인권보장과 동양사

행사와 동정

□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노무관리 실태와 발전방향

- 때: 11월 7-8일/· 곳: 송실대 사회봉사관 1층
- 주관: 참여연대(796-8364 김은영 간사)
- 주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797-8200)

□ 정보통신관련 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때: 11월 8일 오후 7시/· 곳: 지식인연대 사무실
- 주최: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준)(879-0871)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한마당

- 때: 11월 9일 오후 2시/· 곳: 종로공원
- 주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 천국만들기('96 백양로 난장의 들쭉마당)

- 때: 11월 9일 오후 4시/· 곳: 연세대
- 주최: 게르니카(연세대 장애인 학생회/320-8403)

□ '96 전국노동자대회 및 전야제

- 전야제: 잠실실내체육관 11월 9일 오후 7-11시
- 전국노동자대회: 여의도광장 11월 10일 오후 2-5시
- 주최: 민주노총(765-2010)

□ 동티모르 연대모임 창립모임

- 때: 11월 12일 오후 7시
- 장소: 시청 맞은 편 성공회 대성당 106호 (참가비 1만원, 730-6611)
- 주최: 동티모르 연대모임(522-7284)

■ 월간 <사람과 일> 경영상황의 악화로 11월부터 휴간하게 되었습니다.

■ 전대협동우회 신실동으로 이사
주소: 동대문구 신실동 114-89 삼우빌딩 C동 406호
전화: 252-1980, 252-0610/ 팩스: 235-8374

상(한상범 동국대 교수) △ 12월 3일: 인권의 사상적 뿌리를 찾아서(김형민 계명대 강사) △12월 10일: 인권좌담회 '오늘의 인권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총, 정·관계에 뇌물 노동악법 관철 의도

민주노총은 7일 성명을 통해 "정총의 세무·노사문제와 관련한 정·관계 뇌물

제공 및 수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정총 간부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과 정치인 전원을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총은 노동조건 악화와 심각한 고용불안을 가져올 정리해고·변형근로 등을 관철하고 복수노조 금지철폐 등을 반대하는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의 의결과정에서 관철하기 위해 정치인과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며 비난했다.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①

암살학교

미국/1994/러버트 리히터/17분/기록영화

미국의 군사학교를 강도높게 묘사한 작품으로 미국 여배우 수잔 세던슨이 나레이터를 맡았다. 95년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던 작품이기도 하다.

미국방성에 따르면, 이 학교의 임무는 라틴 아메리카의 군부를 훈련시키고, 군의 전문성을 고양하고, 다국적 군사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공식적인 선전은 서서히 표면에 떠오르고 있는 진실의 위장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미 육군학교는 46년 설립된 이후 수천명의 중남미 군부지도자를 육성해 왔는데, 이들 중에는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혼두라스, 칠레, 파나마 등의 쿠데타 주역과 구 독재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또한 5·16정권으로부터 시작하여 군사정치의 씨앗을 뿌린 장본인들이 이와 유사한 미국의 군사학교를 거쳤다.

지하의 민중

볼리비아/1989/보르헤 산히네스/125분/극영화/우카마우 집단

보르헤 산히네스가 각본을 쓰고 우카마우 집단이 제작한 볼리비아 영화 <지하의 민중>의 원래 제목은 <비밀의 나라>이다. 이 영화는 남미의 오늘을 사는 민중의 두 가지 삶을 대비한다.

4천 미터 고지 판자촌에 사는 대다수 원주민보다 4백 미터 아래에 사는 소수의 백인은 그럴듯한 집에서 산소를 많이 마실 수 있다. 그 판자촌에서 4년째 넬을 짜며 가난하게 살던 세바스찬은 귀향을 서두른다.

황야를 지나면서 그는 아픈 과거를 되씹는다. 그는 원주민인 것을 부끄러워 이름을 백인식으로 바꾸고 군인으로 출세하고자 했다. 내무부에 취직해 인권운동을 탄압하고 살해하기도 했다 등 출세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쓰지만 결국엔 마을에서 추방당하는 신세가 된다. 추방당한 자가 돌아오면 들팔매질을 당해 맞아 죽는 것이 그 마을을 관습인데, 그는 들팔매질 당해 죽을 것을 각오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그는 어떻게 될까?

제1회 인권영화제를 후원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문민정부의 언론·출판 탄압 실상 38종 금서목록, 46개 좌경출판사 분류 확인

<내일신문> <말>지 등 문민정부판 금서목록의 일부가 드러났다. 또한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진보적 간행물에 대한 판매금지·반품의 압력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심지어 65개 출판사를 좌경출판사로 분류해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서적에까지 반품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간 <말>지는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광주와 울산 지역에서 경찰이 '좌익출판물 유통실태 점검'이라는 검찰 공문을 들고 다니며 <말> <길> 등의 합법 정기간행물을 비롯해 42종의 진보적 성향의 간행물들의 판매 동향을 체크하거나 일 부에서는 판매금지과 반품까지 종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판매금지·반품 종용

8일 오전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서점에는 형사들이 찾아와 "알아 볼 것이 있다"며 출판사별로 한 권씩 13권의 책을 압수해 갔다. 서점주인 안 아무개 씨는 "지난 4일에도 형사들이 찾아와 '금서목록'을 보여주면서 판매 중단을 종용했다. 또 '좌경출판사' 목록도 제시하며 해당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을 판매하지 말라고 한 뒤 돌아갔다"고 말했다. 안 씨는 "울산 전역의 서점에 '금서목록'과 '좌경 출판

사 목록'이 배포됐으며, 반품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며 "어쩔 수 없이 <말>지 등의 반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지역에서도 10월 말경 광주북부경찰서 보안과 소속 계장과 형사들이 서점을 돌아다니며 "<말>지와 <길>지를 몇 권이나 팔았느냐"고 캐묻은 뒤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보낸 '이적출판물' 목록을 내보냈다고 <말>지측은 전했다. 일 부 서점에서는 경찰이 직접 월간 사회평론 <길>지를 수거해 가기도 했다.

이미 지난 7월에도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지방 대도시마다 경찰이 조사를 핑계로 <말>지 판매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인권하루소식 7월31일자 참조>.

진보적 간행물 모두 금서 경찰측은 서적 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일방적 조치뿐 아니라 서점조합을 통해서도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울산시내 서점가엔 '판매금지 도서 및 반품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울서 96-1041호)이 각 서점으로 배포됐는데, 여기 계서하며 해당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을 판매하지 말라고 산중부경찰서가 울산 양산 서점조합을 통해 발송한 것 안 씨는 "울산 전역의 서점에 '금서목록'과 '좌경 출판

좌경이념도서 출판협의회를 가진 출판사의 명단 및 대표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 대해서까지 빠짐없이 기재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이 '금서목록'에는 <내일신문> <주간 노동자 신문> 등 합법출판물과 <인사> <민주노총> 등의 사회단체 기관지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좌경출판사로 분류된 [창작과 비평사] [현암사] [한길사] 등 46

개 출판사 명단이 확인됐다.

'금서목록' 공개하라 아직도 다수의 국민들이 공안당국에서만 알고 있는 '이적표현물'을 한두 권 이상 읽었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되고 있다. 또한 소설 『대백산맥』과 『전대일평전』 등이 이적표현물 목록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온 국민을 실소케 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기밀문서마냥 금서목록의 존재여부와 내용은 철저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왔다. 공안당국이 금서목록의 필요성을 운변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그 목록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인터뷰>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관객들이 사전심의 철폐운동 지지해 줄 것"

-영화제를 마친 소감을 말해달라
=기대 이상의 성과이어서 기뻐다. 상영공간만 마련되면 관객들은 언제나 찾아올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개·폐막제와 부대행사를 못하게 된 이유는
=개·폐막제는 이대측 사정으로 못했다. 강연회나 감독초청회 등은 준비와 인력·예산 부족·장소 문제 등으로 열지 못했다.

-성과와 아쉬운 점은
=사람들의 관심도 측면에선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영화제를 인권교육의 장으로 가져가기에는 부대행사의 부족 등 미흡한 점이 많았다.

-"사전심의" 철폐운동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영화제를 보러온 관객들이 사전심의 철폐운동을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

-정부의 압력은 없었나
=직접 우리에게 문제부나 경찰측이 압력이 가해오진 않았지만, 이화여대측이 압력을 많이 받았다. 왜 장소공공자에게만 압력을 가하는가? 이는 쟁쟁하다. 당사자인 우리와 직접 문제를 풀고자했어야 한다.

-2회 인권영화제를 내년에도 개최하는가
=그렇다. 부대행사를 보완하고 상설적 영화사무국을 만들어 영화제를 준비해 볼 생각이다. 매년 주제를 설정해 필름을 선정할 계획도 갖고 있다.

제2회 인권영화제를 기약하며...

지방영화제 22일부터 16개 도시 순회상영

우리 사회의 낙후된 인권 의식을 높이고, 영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1회 인권영화제가 많은 사람들의 아쉬움 속에 내년 제2회 인권영화제를 기약하며 막을 내렸다.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라는 부제를 달고 지난 2-8일까지 일주일간 이화여대 별정대, 가정대 강당 등에서 32편의 영화가 상영되었으며, 총 1만5여 명의 관객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1만5천여명 관람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폐막제는 오후 7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이화여대 별정대 강당을 1천여 명의 관객이 가득 채워졌다. 인권영화제 기간 중 영화를 가장 많이 본 관객은 21편을 본 남성장애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무대에 오르는 "영화 전면에 흐르는 문제의식이 인본주의임을 알 수 있었다. 나 또한 장애인이기도 하지만, 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공감

할 수 있었다. 이후 작은 힘이나마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사회자와 관객들과의 적극적이고 열띤 대화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으로는 영화 전편의 하이라이트가 여성, 양심수·장기수, 노동 등의 주제별로 나뉘어 상영되었으며, 지은희(여연 상임대표) 씨, 정신대 할머니, 장기수 분들이 나와 인권현실을 설명해 주었다. 이밖에도 노래를 찾는 사람들, 지하철노래패 소리물결, 정태춘 씨 등과 함께 흥겨운 노래공연이 있었다.

인권현실에 관심있게 해 한편, 제1회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사전검열 거부'를 전면에 내걸고 나섬으로써 영화제는 살얼음판을 걷는 속에 진행되었다. 사전검열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 영화상영관은 섭외조차 할 수 없었고, 한총련 사태 이후 대학의 보수화는 또하나의 커다란 벽으

로 등장했던 것이다. 영화제 사무국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교육실장) 씨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장소문제였다. 개막 하루 전에도 과연 영화상영이 가능할까하는 두려움을 가져야 했고, 그러한 두려움은 행사중에도 마찬가지로 있었다"고 말했다.

상영전날까지 전전금금

허인회 사건 '검찰 조작극' 서울지법 형사9단독 무죄선고

허인회 씨 불고지 사건은 검찰의 조작극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7일 구속됐던 허인회 씨는 정확히 1년만에 누명을 벗었지만 그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남게 됐다.

8일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는 이른바 '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됐던 허인회(32·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김동식의 진술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나 김동식은 특수훈련을 받은 등 평상인과 다르기 때문에 진술을 선뜻 믿을 수 없으며, 여러 부분에서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 또 여러 증언을 통해 허인회 씨의 알리마이가 일관되고 자연스럽게 입증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인회 씨는 지난해 11월 7일 구속 직후 자신의 알리마이를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하는 등 무죄를 주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영화의 뛰어난 수준과 많은 부류의 관객, 이러한 영화제를 준비한 모든 분께 감동했다" "인권영화가 딱딱하고 지루하리란 선입관이 많이 없어졌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후에도 이 행사가 계속되길 희망했다. 또한 영화제는 인권 의식 향상이라는 점 외에도 평소 건전한 문화매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가 하는 점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이제 인권영화제 상영작품은 오는 22일 구미를 시작으로 12월말까지 16개 도시 순회 상영에 들어간다.

장했으나 구속적부심이 각각당했고, 김동식 씨와의 대질심문을 요구하며 일주일간 넘게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허 씨는 올해 1월 12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무죄선고를 받은 후 허 씨는 "간첩사건에 휘말린 지난 1년간 사회적·정치적·경제적으로 참담하게 생활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허 씨는 "한국사회에서 간첩 사건은 전형"이라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진실을 외면당하고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었다"고 심경을 꺼냈다.

허 씨는 "공안당국의 위협을 무릅쓰고 재판에 출두해준 15명의 증인들에게 감사한다"는 말과 더불어 "진술서를 대신 작성하고 날인을 조장하는 등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행위 등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변호사와 상의해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독신청: 715-9185

박정기씨 선출, 전국유가협 정기총회

전국민주주의연속통일유가협회의(회장 박정기, 유가협)는 8일 오후 3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제11차 정기총회 및 유가협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11차 정기총회에서 유가협정부를 통해 유가협 명칭을 전국민주주의유가협(전국유가협)으로 개정하는 한편, 회장단에서 공동의장 4인으로 구성되는 의장단으로 변경했다. 공동의장단에는 박정기(박정철 열사 부친), 강인조(강경대 열사 부친), 배은심(이현열 열사 모친), 허영준(허원근 열사 부친) 씨들이 선출되었으며, 수석의장직은 박정기 씨가 맡게 되었다. 또한 신입회원으로선 권오석(권희정 열사), 이기주(이덕인 열사), 장남수(장현우 열사) 씨 등 5명의 열사 가족이 가입했다. 제11기 전국유가협 사업으로는 △6월 항쟁 10주년 기념행사 추진 △유가협 실년사 발간△의문사 자료 발간 △후원회 재건설 등이 확정되었다.

금서목록

간행물	발행처	비고
대장정	학생연합	부정기
진보21	21세기 진보학생연합	"
열사의 외침	한총련 투쟁본부	"
대학생	한총련	월간
법정이	법정학원 후원회	부정기
민주노총	민주노총	격주간
주간 정세 동향	전국노총협	주간
월간자료	전국노련	월간
현장에서 보냅니다	한노협	격주간
전해투신문	전해투	부정기
사회주의노동자	국제사회주의자들	월간
사회주의 평론	국제사회주의자들	격월간
노동자 권력의 깃발	혁신노	부정기
노동해방의 불꽃	노동해방의 불꽃	"
신질서	혁명적 맑스주의자들	"
진보정치	진보정치연합	"
노동과 정치	노동정치연대	주간
자주의 길	한청협	계간
하나로	평불협	월간
인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계간
내일신문	내일신문사	주간
노동운동	승리	격월간
동지	미상	부정기
민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전진	전국학생연대 추진위	"
사람과 일터	우리일터 기획	월간
주간 노동자 신문	주간노동자신문사	주간
노동해방의 길	노동해방의 길 편집국	격월간
대학생 신문	대학생 신문사	주간
한국노동청년연대	한국노동청년연대	주간
청년노동자	노동청년회	부정기
북극성	북부노동자회	"
현장에서 미래를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월간
경제사회연구	경제사회연구회	격월간
교과연구	교과연구소	계간
길	사회평론	월간
말	월간 말	"
학회평론	김진균	계간
이론	이론동인	"

좌경이념도서 또는 북한원전을 펴낸 출판사 목록

(대표자, 나이, 국보법 위반 전과자★)

대동(이민연, ★)/ 살림터(송영현, ★)/ 이웃(김남중)/ 민맥(원호호, ★)/ 일월서각(최옥자, ★)/ 풀빛(나병식, ★)/ 한울(김중수, ★)/ 힘(김연인, ★)/ 산하(소병훈)/ 한(박용구, ★)/ 연구사(김복순)/ 한국문화사(김진수)/ 가람기획(이광식)/ 솔터(손문경)/ 신구미디어(이사영)/ 내일을 여는 책(김형욱)/ 두레(변광무)/ 백산서당(김철민, ★)/ 맥수사(박종화)/ 보탬(이우홍)/ 새벽별(김형철)/ 신서원(임성렬)/ 시와 사회사(이종찬)/ 여강출판사(이순동)/ 역사비평사(홍중도, ★)/ 창작과 비평사(김운수)/ 학민사(양해경)/ 형상사(김석주)/ 개마고원(장의덕)/ 과학과 사상(이재선,

★)/ 글(홍을표)/ 깊은 샘(박현숙)/ 나남(조상호)/ 노동자의 빛(서정규)/ 녹두(김영호)/ 당대(김종삼)/ 대영문화사(유영식)/ 독서당(김민중)/ 홍광출판사(최동진, ★)/ 문예출판사(전병석)/ 물결(김경원)/ 민(김영수)/ 발언(안영수)/ 빛남(이상개)/ 사계절(김영중, ★)/ 삼민사(허철규)

* 금서목록과 '좌경'출판사를 적은 자료에는 출판사가 펴낸 출판도서 중에서 '좌경이념도서'와 '북한원전'을 분류, 권수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대표자의 나이와 소재지를 게재하고 있으나 이는 생략했습니다. 또한 팩스수신상대가 양호하지 못해 일부 생략되거나 잘못 표기할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길 바랍니다.<편집자주>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스님 석방촉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는 7일 진관스님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중앙총회 일동은 "총회의장단 및 책임자에게 아무런 언급없이 전격구속한 것은 종단과 총회의 명예에 중대한 위해"라며 비판했다. 또한 "진관스님이 조계종 중앙총회의원이라는 확실한 신분을 갖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 인권간행물 ○

- 현장에서 미래를-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874-2933)
 - 주요내용: 정세초점- 노동법 개정과 아래로부터의 개혁(변집위), '경제위기'설과 '경제위기-노동자 책임론'(채만수)/특집:노동법 개정 투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국제노동: 이라크 사태의 배경과 의미(류계훈)/기획번역:독일 노동법에서의 탄력화와 규제완화(2)/연구논문: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정부정책(설동훈),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전망(박성인) 등 207쪽
- 국제인권보-국제인권운호 한국연맹(776-4733)
 - 주요내용: 정부, 인권위원회 설치 예정/국제연맹네스티 러시아내 탈북자 현황보고서(요약)등 4쪽
- 노동법 개정과 평등노동, 고용안정,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위원회-서울여성노동자회(867-0516)
 - 주요내용: 실태보고-직장내 남녀고용불평등 실태조사 분석 보고/주제발제-노동법 개정과 평등한 노동, 고용안정, 모성보호를 위하여 등 74쪽
- 가정폭력방지법(안)-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273-9535) 법안 13쪽
- 고난함께 제47호(96년 9·10월호)
 - 주요내용: 만나고 싶은 사람 '출소장기수 이경구 선생님'/안기부법 폐지합시다(조이제 목사)/내 생의 마지막 희망은 그리운 가족을 가슴에 안아보는 겁니다, 김민서 선생님을 찾아/장기수 가족을 찾아서 '장우주님'등 48쪽
- 포럼 2001(10월호)-포럼2001(747-8897)
 - 주요내용:특집-하반기 민주노조운동전망의 노동법 개정 투쟁방향 '노동법개정 투쟁의 역사와 전망'(이종일)'노동법개정안(공익위원안)에 대한 검토'(김정민)'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 투쟁방향'(임성규)/인권마당 '과거청산과 한국의 인권'(박래군) 등70쪽
- 이달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521-5364)
 - 주요내용:기획특집·연세대사태와 한총련을 돌아보며 '통일, 그 내릴 수 없는 깃발'(박원선)'한총련을 위한 변명'(임종인)'현 정세와 한총련의 과제'(최규명)'연세대 사태와 위기에대응하기'(유일상) 등 128쪽

제1회 인권영화제를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동티모르 산타크루즈 대학살 5주년 말레이시아 정부, 국제회의 참가자 전원추방 국내 동티모르 연대모임 오늘 발족

11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 9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에서 열리던 동티모르 국제회의를 무산시키고 국제 인권운동가들을 추방시킨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정부에 항의성명을 보냈다. 천주교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동티모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국의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강점에 반대하는 유엔의 방침에도 크게 벗어나는 행위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경찰은 지난 9일 콜라룸푸르에서 열리고 있던 제2차 「동티모르 문제 해결을 위한 아태협회(APCET) 회의」에 참석한 외국인 대표단 46명을 비롯해 대회참가자 1백여 명을 연행하고, 11일 전원을 국외로 추방시켜 회의를 무산시켰다. 8일부터 12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리던 이 국제회의는 91년 산타크루즈 대학살을 회고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각국에서 '동티모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열린 국제회의였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행동전선' 소속이라고 자칭한 청년들이 회의장에 난입한 뒤 곧

이어 전투경찰이 들어와 연행했다고 한다. 이날 연행자 중에는 일본천주교회 소마노부로 주교(일본정의평화협의회 전의장)와 호주 힐튼 덕킨 주교, 외국인 기자, 한국인 지은경(민가협)씨가 포함됐다.

한편, 오늘 저녁 7시 시청 앞 성공회대성당에서는 동티모르를 지원하기 위한 '동티모르연대모임'(동연모

이) 창립식을 갖는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조세라모스 오르타(동티모르 독립혁명운동 대변인) 씨가 11일 창립축하 메시지를 동연모 측에 보내기도 했다. 동연모는 동티모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일반인들의 모임으로 타민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 신선함을 던져주고 있다.

11월12일 산타크루즈 대학살을 아십니까?

75년 인도네시아 군대의 무력침공 이후 동티모르 문제는 한동안 국제사회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동티모르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을 일거에 뒤집어 전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킨 사건이 있었다. 바로 91년 11월 12일 발생한 '산타크루즈 묘지 대학살' 사건이다.

포르투갈은 82년 안토니오 라마로 에아네스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동티모르 문제를 국제외교무대에 적극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91년 여름, 포르투갈 의원단의 동티모르 방문교섭이 타결되어, 늦어도 11월 4일에는 방문이 이뤄지게 되었다. 전세계 동티모르 연대그룹들은 포르투갈 의원단 방문과 때를 같이해 동티모르 상황을 감시하는 운동을 전개했고,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속속 동티모르에 잠입했다.

그런데 갑자기 동티모르에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곳곳에서 테러가 계속되었으며, 포르투갈은 10월 26일 의원단 방문중지를 발표했다. 발표가 있는 바로 다음날, 인도네시아군은 독립운동가들이 피신처로 자주 이용하던 딜리시의 모타일 교회를 밤새도록 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독립파 청년 세바스찬 고메스가 살해됐다. 고메스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동티모르의 관습에 따라 고메스가 죽은 지 2주되는 11월 12일을 맞아 사람들은 그가 안장된 산타크루즈 묘지에 가기로 했고, 그 기회를 이용해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계획을 세웠다. 당일 3천5백여 명의 군중이 시위에 참여했는데, 묘지에 도착한지 15분후 군대가 나타나 좁은 묘역에 갇힌 군중을 향해 경고없이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포르투갈 의원단 방문 보도를 목적으로 현지에서 와 있던 서방측 여러 기자들에 의해 목격되어 삼시간에 전세계에 보도되었으며, 동티모르 문제의 전개에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했다. 92년 9월 포르투갈에서 동티모르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망 2백73명, 실종 2백55명, 부상 3백76명으로 집계되었다. 인도네시아는 국제여론에 밀려 현장 하급병사 10명에게 8월-1년6월형을 선고했으나, 시위주모자들은 중신형, 15년형 등 엄벌에 처했다.

동연모 회원들은 모임발족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준비를 해왔으며 인도네시아 군인들의 만행으로 2백50여 명이 숨진 '산타크루즈대학살' 기념일에 맞춰 창립하게 되었다.

동연모는 창립취지문에서 "동티모르를 통해 보편적인 인권과 도덕적 정의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동티모르 민중이 평화를 찾을 때까지 양심적인 시민들의 뜻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연모는 앞으로 국내에 동티모르 인권상황을 알리고 해외 동티모르 모임과의 연대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항의한 노점상에 공포탄 발사 서초경찰서 열흘간 노점상 7명 구속

최근 서초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노점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되면서 노점상에 대한 연행·구속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지난 8일엔 경찰 단속에 항의하던 노점상에게 파출소 순경이 총기를 사용했으며, 이에 항의하던 동료 노점상들을 구속시켜 전국노점상연합회(회장 이필두)측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유희 전노련 수석부회장은 "8일 저녁 6시45분 경 강남역 부근 도로상에서 서초파출소 소속 순 아무개 경찰이 단속에 항의하던 노점상에게 권총 공포탄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부회장은 또 "전노련 회원들이 서초경찰서에 방문해 총기 발사에 대한 해명 및 사과와 노점상 연행을 자제해 줄 것 등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회원 25명을 연행해 5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3명은 즉결심판,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처리했다"며 "계속되는 노점단속에 맞서 14일경 전국노점상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속자 가운데 김순임(64) 할머니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됐으며, 고령의 김준규(75) 씨도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경찰서 관내에서는 지난 1일 서진국(42) 씨 등 2명이 구속된 데 이어, 일주일 동안 윤종일(36) 씨 등 6명의 노점상이 잇따라 연행돼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8일 총기 사용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25명, 그리고 9일 항의방문을 갔던 23명이 연행되는 등 열흘간 총 56명의 노점상이 연행됐고, 그 가운데 7명이 구속됐다.

안기부 책임자 처벌 김동식 사건 진상추구 전국연합 성명

전국연합은 최근 안기부가 한총련 대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들을 '죄의 동조자'처럼 매도하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예비군 부대에 제공·상영토록 한 점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책임자 구속"을 촉구했다.

더불어, 허인회 씨의 무죄선고를 비롯해, 작년말 소위 간첩 김동식 사건으로 연행·구속된 함운경, 이인영, 이상호, 박종렬, 김태년 씨들이 석방된 이상 공안당국은 김동식 사건의 진모를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한국당과 안기부는 국가보안법 7조와 10조에 대한 대공수사권 부활을 골자로 하는 안기부법 개정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학생 수능 편의 요구 참여연대

13일 있게 될 96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장애학생들의 수험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는 11일 국립교육평가원장 앞으로 보내는 '장애학생 수험 편의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통해 "장애학생들에게 일반 수험생과 동등한 수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시험문제 읽어들이기 또는 수험 시간 연장 등 장애학생들에 대한 최선의 배려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간/인/권/호/름

(96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 (월)
전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씨 파면된지 6년만에 복직/국민회의, 간부회의 열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논리 개발에 나서기/광주지검 공안부, 전남대 사대 이아무개 씨 등 교수 3명 불러 학기중 구속돼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출석 인정, 학점을 준 경우 등 조사

<5일> (화)
서울지검 의사부, 경기 동두천시 접대부 피살사건의 살해용의자인 미군2사단 에릭 스티븐 뮤니크(22) 이병의 신병 인도요청에 대해 미군측이 거부한다는 공식 통보해 왔다고 밝혀

<6일> (수)
한총련 감경진압 및 탄압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캠페인 갖고 경찰의 여대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

<7일> (목)
일간 <달>지 보도, 광주와 울산지역에서 경찰들이 '죄의 출판물 유통실태 점검'이라는 공문들고 다니며 합법적기간행물 등 진보적 성향의 간행물 판매동향 체크 및, 판매금지·반출 종용/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았던 이우자 씨 집행유예/참여연대 맑은 사회만들기 본부, 국회에 부정부패방지법 시민입법청원 제출/미 대선과 함께 24개주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사회적 약자보호법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폐지등 반이민정서를 반영하는 제안이 지지 얻은 것으로 나타나

<8일> (금)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식 판사, 지난 12월 김동식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상 불고지침으로 구속되었던 허인회 씨 무죄 선고

<9일> (토)
96전국노동자대회 취재중이던 <시민의 신문> 사진기자 권우성 씨 경찰차량에 치어 전치 6주 상치입어

<10일> (일)
민주노총 창립 1주년 기념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7만여 명 참석/대법원, 한총련 시위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들을 '죄의동조자'처럼 표현해 들의를 빚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안기부가 예비군 부대에 제공해 상영토록 한 것으로 확인/대검찰청, 최근 한총련 수사를 위해 재정경제원에서 1백20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해설>
허인회 씨 무죄선고를 보며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재판부의 판결에 환영하면서도, 우리는 구속 당시 허인회 씨 본인은 물론, 그가 소속되어 있는 국민회의가 받았을 치명타 외에도 '불고지죄' 운운하며 몰아닥쳤던 공안한파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한장 한장의 '공안'의 벽들은 담을 만들어 놓았다. 소위 김동식 간첩사건, 범민련 사건, 사노맹 사건 동통 크고작은 시국 사건들은 국방비 증가, '안기부법 개정' 등의 명분으로 작용했다. 무죄 판결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제1회 인권영화제를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조직사건 연행자에게 존중될 인권없다 남총련 민족해방군 조작 주장... 27명 불법연행

남총련(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소속 대학생 27명이 11일 오전 거의 동일한 시각에 전남도경 소속 보안수사대 형사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연행자들은 아침 출근시간에 집이나 집 근처에서 긴급구속장 제시 없이 불법 연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측은 연행사유도 가족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제시도 없이 집안을 뒤져 월간 <말>지 등 사회과학서적 및 디스켓을 압수해 갔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연행자 중 박준오 씨 어머니는 아들의 일로 충격을 받아 누워있는데,

그는 "외국어학 연수를 위해 여권 수속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을 정체불명의 형사 3명이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묻자 '아줌마도 연행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연행자 가족들은 연행사실을 알고 몇 시간뒤 면회를 요청했으나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었으며, 12일 오후까지 가족면회가 거부되고 있다.

한편 민족해방군 조직사건은 지난 6월12일에도 발생했는데, 17사단과 25사단 등 군대내 학생간첩단 민족해방군 박형대(전남대 89) 씨 등 6명이 검거된 바 있다.

경찰, 친북이적단체 규정 전남 지방경찰청은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민족해방군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측은 민족해방군 조직의 폭력성 테러성 시위가 연방계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주장등 북한의 통일투쟁 전술과 그 맥을 같이하는 사실에 주목해 올해 1월부터 보안수사력을 집중해 조직원 8백여 명중 95명을 검거·구속하고 83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민족해방군 조직은 남총련 산하 민족해방 계열의 친북이적단체로서, 지난 8월 한총련 연세대 시위에서 극렬 폭력소요를 주도하는 등 좌익폭력 세력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민족해방군 조직원 전원에 대한 검거와 배후조직을 파악해 학원가 좌익 폭력세력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총련, 학생운동 탄압의도 한편, 남총련(의장 최태진, 조선대 총학생회장)은 "27명 학우에 대한 불법연행은 남총련 및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과정이며, 이번 사건은 아무 근거가 없는 학우들을 얽매게 만들어낸 짜맞추기식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오월대, 녹두대가 무슨 이적·폭력성을 가진 조직인가"고 반문

했다.

구속자 명단:

전남대 11명 : 오용(기계공 95), 우성기(농공 95), 박정훈(동물자원 95), 박준성(화공 90), 김승욱(화공91), 조홍복(철학 96), 김원철(화공 95), 조학현(법학 95), 박준선(자연95), 최재봉(심유 95 휴학중), 정민주(심유 95)/호남대 8명 : 윤영호(행정 94 재직), 박준오(무역 94 사회대부회장), 강성중(국문 95), 전판기(무역 95 과편집장), 김은철(무역 93 차기과학회장), 김형우(정의 95 과부장회), 임용우(신방 96), 권재영(사회대 94 사회부장)/조선대 : 4명 : 문준호(경제 95 휴학), 최정훈(전산90 산업대부회장), 김영철(화공 91), 김남수(기계 95, 11일 풀려남)/순천대 2명 : 박병우(화학 95), 김학기(금속 96)/목포대 2명 : 이지열(경제 과회장), 김금자(95년도 총회회장)

[광주·김명희, 인천지기]

고문방지조약 보고서 심의 차지훈변호사 등 출국

고문방지조약 심의회가 9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 심의는 13일 있을 예정이다. 이에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인권협)에 서는 차지훈(민변) 변호사와 김수지(민가협) 씨가 엄저버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16일 귀국예정이다.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 제1회 인권영화제가 16개 도시에서 계속됩니다

- 구미 : 11월22일-24일 (0546-52-2314) 원주 : 11월23일-28일 '가락센터' (0371-731-1364) 춘천 : 11월25일-28일 (0361-53-8904) 청주 : 11월25일-12월1일 (0431-68-3445) 수원 : 11월29일-12월1일 (0331-213-2100) 인천 : 11월30일-12월4일 '부평4동 성당' (032-761-0861) 대구 : 12월5일-8일 '열린공간 Q'(053-426-2533) 전주 : 12월5일-8일 '전북대 합동 강당'(0652-82-9887) 대전 : 12월7일-11일 (042-256-5183) 부산 : 12월10일-15일 (051-501-1018) 광주 : 12월10일-14일 (062-529-7576) 마산 : 12월12일-19일 (0551-55-5080) 제주 : 12월18일-22일 YMCA 강당(064-22-2701) 안산 : 12월20일-24일 '한양대 소극장'(0345-413-5120) 성남 : 기간 미정, 장소는 '성남문화센터'(0342-47-9877) 구리 : 기간, 장소 미정(0346-69-5547)

해고자 죽이는 LG그룹... 해고자 단식투쟁 89년 이후 67명 해고, 한명도 복직 안돼

LG그룹 해고자들이 '사생결단'을 외치며 목숨을 건 겨울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0일부터 「LG그룹 해고노동자 복직실천협의회」(LG해협) 성한기(42·93년 LG전자 해고) 의장과 이동열(37·89년 LG전선 해고) 씨는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여의도 LG빌딩 앞 도로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3년간 끌어온 복직투쟁을 더이상 지속시킬 형편이 못된다"며 "죽든지 이기든지 올해 내로 결판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성에 참가하고 있는 김천(30·90년 LG전자부품 해고) 씨도 "해볼 것 안해볼 것 없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왔다"며 단식농성은 '최후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집행위원장 김세균)는 15일 오전 해고자 농성단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오는 30일 LG그룹 노동탄압 사태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LG그룹의 노동탄압 실상을 널리 알리나갈 계획이다.

한편, LG그룹은 지난 89년 이후 총 67명을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했다. 그러나 현대·대우 등 다른 기업에서 일부 해고자 복직이 이뤄진 것에 반해, LG는 현재까지 단 한 사람도 복직시키지 않았다. 이에 95, 96년 연이어 국정감사의 질의대상에 올라 노동부 장관이 'LG에 해고자 복직을 지시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으나 사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LG그룹의 해고자 문제는 그 심각성을 지적받아 왔다. 김세균(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뉴스포럼>지와의 인터뷰에서 "LG그룹은 가장 전근대적 사고를 가진 기업"이라며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LG해고자들은 94년 LG해협을 결성한 후 19일간 텐트농성, 노숙투쟁 등을 하며 한 때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회사측과 협상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으나 여론이 잠잠해지면서 또다시 기약없는 복직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올해 들어서는 본사 또는 지방 공장과 구분무 회장집 앞 등에서 끊임없이 집회투쟁을 벌여 왔다.

주요공판안내

- 14일 · 이승환, 국보법, 오전10시30분, 합의23부, 319호, 속행 · 조성우, 국보법, 오전10시30분, 합의23부, 319호, 속행 · 정수일, 국보법(간첩),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 김재중·장광수, 김시범,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 이원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홍은철, 특수공무방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 이지용·한석규,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 이병구·안상목,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 15일 · 강순경, 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 박병철,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이승구,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이상 서울지법 형사부

안기부법개정 철회촉구 민변, 사건진상 공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2일 최근 안기부가 한총련 사건과 관련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 좌익동조자라는 취지가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예비군 훈련장에서 방영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이는 안기부의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에 명백한 사법권 침해이

자, 당해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안기부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권한행사를 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에 △안기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권한행사를 중지할 것 △안기부는 사건진상을 철저히 파악·공개하고, 안기부장의 공개 사과 및 관련책임자들을 형사처벌할 것 △국민의 인권 침해소지가 있는 안기부법 개정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수자차별 법안 통과

반대운동하던 대학생 23명 연행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수자차별방지법안의 폐지에 반대하며 점거농성을 벌이던 대학생 23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은 5일 통과된 2백9조항의 시행을 반대하며 캘리포니아대 종탑건물을 점거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2백9조항은 지난 30여 년간 여성과 소수인종에 대한 기회보장을 위해 시행되어온 소수자보호 프로그램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으로서 찬성을 54%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대학에서는 신입생 선발에 있어 무슨 인종이나 하는 점이 주요한 선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캘리포니아 대학생 가운데 약 1백명의 학생들이 종탑 아래에서 야영을 했으며, 40명 이상이 탑으로 들어가 탑폭대에 깃발을 걸었다. 라디오 기자들은 4명의 시위학생들이 스스로를 쇠사슬로 묶었다고 밝혔다.

대학당국 대변인 밥 샌더스 씨는 "경찰이 7일 아침 종탑에 있는 학생들을 '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으며, 28명의 학생들 가운데 5명이 자발적으로 탑에서 내려왔고 23명이 불법침입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사건은 마리오 사비오 씨가 죽은 다음날 벌어진 것이었다.

마리오 사비오 씨는 60년대 버클리대자유인론운동의 지도자였다. 53세 살의 그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최근까지 2백9조의 통과에 반대해 왔다.

6일에도 버클리대의 학생들은 시내 거리를 행진하며 슬로건을 외쳤다. 산타크루즈대학에서는 2백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행정건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봉쇄했으며, 수백 명의 학생들이 산디에고주립대까지 행진을 벌였다. 몇몇 학생은 성조기를 불태우기도 했다.

한편 미국 시민단체들은 2백9조를 계소했으며, 그 조항이 미국헌법의 평등한 보호와 주권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1995 REUTERS New Media

제1회 인권영화제
를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한총련 실체’ 제작경위 등 정보공개 요청

민변, 안기부법 개정논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필요

‘한총련의 실체’를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안기부 사이에 사과·화해의 악수가 이뤄지는 한편에서는 인권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제의 비디오 테이프와 제작경위 등 관련 문서일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벌일 계획이어서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관련기사 2면).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3일 안기부측에 ‘한총련의 실체’ 비디오테이프 등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했다. 민변은 정보사용의 목적을 “비디오테이프와 슬라이드의 내용과 작성경위 등을 파악해 국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유정(민변 언론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안기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말

했다. 민변이 안기부측에 요청한 자료는 ①국가안전기획부의 외곽단체인 남북문제연구소 명의로 제작·배포된 “한총련의 실체” 비디오 테이프 ②안기부에서 지난 6월 사법연수생들을 초청해 북한정세설명회를 개최할 당시 사용한 브리핑 슬라이드 ③“한총련의 실체” 비디오 테이프와 브리핑 슬라이드의 제작·사용·배포·보관경위에 관련된 문서일체이다.

서초서 총기발사 규탄 민운탄 대책위 성명

「민중운동단합본체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대표 백기완·강희남, 민운탄 대책위)는 지난 8일 서초파출소 소속 경찰의 노점상 단속과정에서 총기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13일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민운탄대책위는 “공포탄 발사에 항의하는 노점상들에게 사과는커녕, 48명을 강제연행하고, 5명의 노점상을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하여 총기사용의 책임을 노점상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하고 있다”며 구속자 전원(민변 언론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안기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말

또한 진보정치연합도 노점상 자립법의 즉각 제정을 통한 노점·빈민의 생활권 보장, 대통령과 내무부장관의 공개사과를 주장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청원 한국노총, 여연등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남녀고용평등법 내 간접차별, 직장 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반대

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는 13일 민주당 이미경의원을 소개의원으로서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간접차별과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 ▲육아휴직의 유급화 ▲배치, 승진시 절차규제 강화 ▲고용평등위원회 강화 등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각 노동, 여성단체가 95년 간접차별과 성희롱 금지조항을 주요골자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주요사항은 빠진 채 일부 조항만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조항 조차도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이번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영하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하’ 제1회 인권영화제 16개 도시에서 계속됩니다

- 구미 : 11월22일-24일 (0546-52-2314)
- 원주 : 11월23일-28일 '가톨릭센터' (0371-731-1364)
- 춘천 : 11월25일-28일 (0361-53-8904)
- 청주 : 11월25일-12월1일 (0431-68-3445)
- 수원 : 11월29일-12월1일 (0331-213-2100)
- 인천 : 11월30일-12월4일 '부평4동 성당' (032-761-0661)
- 대구 : 12월5일-8일 '열린공간 Q' (053-426-2533)
- 전주 : 12월5일-8일 '전북대 합동 강당' (0632-82-9887)
- 대전 : 12월7일-11일 (042-256-5183)
- 부산 : 12월10일-15일 (051-501-1018)
- 광주 : 12월10일-14일 (062-529-7576)
- 마산 : 12월12일-19일 (0551-55-5080)
- 제주 : 12월18일-22일 YMCA 강당(064-22-2701)
- 인산 : 12월20일-24일 '한양대 소극장' (0345-413-5120)
- 성남 : 기간 미정, 장소는 '성남문화센터' (0342-47-9877)
- 구리 : 기간, 장소 미정 (0346-69-5547)

<자료> 민변 성명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안기부는 최근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하여 좌익동조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예비군훈련장에서 방영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안기부는 이 비디오테이프에서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의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빌려 법복을 입은 판사의 형상을 그림으로 처리해 등장시킨 뒤 옆에 “한총련 시위학생 영장기각-증거불충분”이라는 자막을 넣고 동시에 “우리사회에는 좌익동조자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도 한총련 사태를 옹호하는 행동과 발언 언론보도 및 칼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대사를 들려주고 있다.

한편 안기부는 이 테이프의 내용들이 문제가 되자 대법원에 직원을 보내 사과하고 이 비디오 테이프는 실무자들의 실수로 제작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안기부가 사법부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라는 해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더욱이 이번 사건이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를 골자로 한 안기부법 개정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그것도 안기부가 수사권 확대의 근거로 내세우는 한총련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안기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안기부는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홍보하기 위하여 이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 상영한 것이고 이 비디오테이프를 통하여 사법부에까지 좌익동조세력

사회의 좌익세력은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한 판사에 대한 다수의 협박성 전화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는 명백히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고 안기부 및 정부여당의 안기부법 개정에 대하여도 이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개정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기관인 안기부가 안기부법 개정논의의 시점에서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좌익동조세력으로 몰아세우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상영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명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안기부의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명백한 사법권 침해이며 당해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또한 안기부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안기부가 보여준 태도는 과거의 안기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아직도 안기부가 국가기관위에 초헌법적 국가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기부가 거듭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안기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인 권한 행사

를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둘째, 안기부는 이번 사건

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안기부장의 공개사과 및 관련책임자들을 형사 처벌하여야 한다.

셋째, 이번 사건은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이 있는 만큼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안기부법 개정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996. 11. 1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경제위기 주범은 정부 민주노총 여론조사

대다수 국민들은 현 경제 위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며, 월급쟁이의 반수 정도는 실직에 대한 불안감 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이 창립 1주년 기념으로 지난 2일부터 5일 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7백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경제위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3.1%, 기업이 책임이라는 응답이 9.1%를 차지한 반면, ‘노동자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사람은 3.1%에 불과했다.

실직에 대한 불안감은 여자(53%)가 남자(42.9%)보다 더 심하게 느끼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0대, 학력이 낮을수록, 생산기술직 종사자일수록,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지역에서 고용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가운데 39.8%는 노사개혁위원회의 결정에 경영계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고 생각하며, 중립적(14.8%) 또는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14.7%)된다고 보는 국민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6.9%가 노동자 권익보장을, 20.9%가 정당건설, 20%는 경제나 기업의 개혁을 꼽았다.

○행사와 동정○

- 민주노총 특별기자회견
 - 일시:11월 14일(목) 오전11시
 - 장소:민주노총 대회의실(삼선빌딩 5층)
 - 주요내용:최근 정부와 재계의 노동법 개정투쟁계획 한 민주노총의 입장/향후 노동법 개정투쟁계획
- 정보통신 토론회 제5회 'public access의 문제설정과 전자민주주의의 쟁점'
 - 일시:11월 15일(금) 오후 7시
 - 장소:봉천동 지식인연대 사무실(문의 879-0871)
- 참여사회연구소 제3차 심포지엄-남북관계 및 통일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11월 16일(토) 오후 2시-6시
 - 장소:종로성당(문의 796-9581 담당:최미경)
- 전대협 서울지역 동우회 창립대회
 - 일시:11월 16일(토) 오후 4시 30분
 - 장소:기독교회관 구관 2층 강당(문의 252-1980 담당:허영일)
- 정책토론회 「진단, 윤락행위등 방지법」
 - 일시:11월 19일(화) 오후 2시
 - 장소:세종문화회관 회의장 3층 소회의실
 - 주최:한국여성민우회(269-5763)

제1회 인권영화제는
16개 도시에서
계속됩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3일(제네바 현지시각)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일반범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의 경우 50일로 되어 있는 구금기간의 축소 △고문방지조약 21조(국가간 문제제기권), 22조(개인적소권) 철폐 △구금시설의 감시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 △민간단체보고서에 언급된 고문피해사례에 대해 조사·수사하여 고문방지위원회에 서면 보고 등도 포함되어 있다.

11- 22일까지 열리는 17차 고문방지위원회 회기중에는 한국보고서의에도 러시아, 알제리, 우루과이, 폴란드, 조지아 정부등의 보고서가 심의되었다. 한국보고서 심의는 13일 하룻동안 진행되었으며, 한국정부대표로는 황영식 공사의 9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 결과는 민간단체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심의기간 동안 참관한 차지훈(민변) 변호사·김수지(민가협) 씨에 의해 국내에 전해졌다.

국가보안법은 고문방지조약 제2조 2항 위반

고문방지위원회 내에서 한국정부 보고서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보좌관 주판직(Mr. Bostjan M. Zupancic, 슬로바니아 헌법재판소 판사) 씨와 레그미(Mr. Mukunda Regmi, 네팔) 씨등을 비롯한 위원들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규정이 많아 자의적 적용 소지가 많다. 또한 국보법 상의 50일의 구금기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국보법이 고문방지조약 중 “전쟁상태 또는 전쟁의 위협,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상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인용될 수 없다”(제2조 2항)는 사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치적 이유로 고문당하는 사례들과 잠안제우기와 같은 가혹행위가 관행화되어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한국정부 대표는 “국보법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며, 정부는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최근 법개정을 했다”고 답변했다.

진 고문방지위원회가 내리는 해석이므로 한국정부는 국내에 적용해야 할 국제적, 국내법적 의무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4년뒤 이번 1차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포함한 2차 보고서를 제출·심의받아야 한다.

21, 22조 철폐는 불가능 민간단체보고서 외국주장 고문방지조약의 핵심조항이라 할 수 있는 21, 22조 철폐에 대해 “이 두 조항의 유보는 북한 또는 국내 재야단체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제연대네스티의 보고서는 민간단체의 정보만 대변하고 있는데, 민간단체보고서는 왜곡·과장되었다”고 주장했다.

국제·국내법적 이행의무 그러나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비록 강제적 집행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고문방지협약의 해석과 실시를 감독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

진 고문방지위원회가 내리는 해석이므로 한국정부는 국내에 적용해야 할 국제적, 국내법적 의무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4년뒤 이번 1차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포함한 2차 보고서를 제출·심의받아야 한다.

전해투를 도움시다 농성장 전세금 마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 복직투쟁 특별위원회」가 민주당에 의한 공권력 투입으로 길바닥에 내몰린지 두 달이 다되어가고 있다. 9월18일 새벽 당시 민주당에서 내몰린 뒤 전해투 노동자들은 최근까지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는데, 미서운 추운 날씨에 안정적으로 농성을 지속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전해투 농성장 전세금 마련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문의: 744-7437

<한 특수강도 전과자의 한맺힌 호소>

“청송감호소의 인권유린 조사해 달라”

지난 10월말 「인권운동사랑방」으로 한 남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현재 서울경상보호원에서 생활하고있는 그는 자신이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당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폭로하고 싶다고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 더불어 “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도 감옥 내에서 또다른 고문과 인권유린에 희생당하고 있을 지 모를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다음은 인권운동사랑방을 찾아와 이야기한 그가 소지한 각종 통지서 및 재정신청서 복사본 등을 토대로 작성한 글이다<편집자주>.

포승·수감에 묶인 채 집단구타 운치고 씨는 이른바 일반 잡범이었다. 86년 12월 26일 특수강도죄로 구속된 그는 이미 세 차례의 절도 전과가 있는 지극히 평범한(?) 수인이었다. 양심수도 아닌 그가 감옥 안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된 것은 뻔뻔한 성격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일반 잡범에게도 인권은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지키려는 그의 노력 때문이었다.

운 씨가 감호소에서 고문을 당한 것은 세 차례 정도이며, 그 잔혹함의 정도도 심해서 장기간의 치료와 후

유증을 겪은 것으로 전했다. 감호소에서 세차례 고문 92년 8월 중순경 윤 씨는 청송감호소내 보안과 지하실에서 집단구타를 당했다. 이 때 그는 시승시강(포승과 수감에 묶인 상황) 상태로 맞아서 앞니 한 대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두 달이 넘게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윤 씨를 구타한 것은 보안계장의 지시 때문이었는데, 보안계장은 윤 씨가 “결핍하면 공무원을 고소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발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윤 씨는 86년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그 사건으로 인해 부산지검에 출정다녀온 다음날 집단구타를 당하게 됐다.

93년 5월 29일엔 단식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고문을 당했으며, 이 사건으로 윤 씨는 여광서 소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까지 해나갔다. 그러나 6개월 뒤, 검찰은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윤 씨를 비롯한 감호자들은 “감호소내에서 사망한 것은 세 차례 정도이며, 그 잔혹함의 정도도 심해서 장기간의 치료와 후

유증을 겪은 것으로 전했다. 감호소에서 세차례 고문 92년 8월 중순경 윤 씨는 청송감호소내 보안과 지하실에서 집단구타를 당했다. 이 때 그는 시승시강(포승과 수감에 묶인 상황) 상태로 맞아서 앞니 한 대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두 달이 넘게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윤 씨를 구타한 것은 보안계장의 지시 때문이었는데, 보안계장은 윤 씨가 “결핍하면 공무원을 고소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발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윤 씨는 86년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그 사건으로 인해 부산지검에 출정다녀온 다음날 집단구타를 당하게 됐다.

서 단식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 때 주모자로 몰린 윤 씨는 5시간 동안 구타를 당한 끝에 늑골 2대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윤 씨가 세번째 고문을 당한 것은 93년 11월 27일 검찰의 무혐의 통보가 나온 뒤인데, 12월 4일 대구고등법원장 앞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 일로해서 20일간 잠안제 우기, 가스총 위협 등의 고문을 당했고, 그 뒤 1년간 독방생활을 했다고 한다. 윤 씨는 “재판출석도 못해 보고 7년 감호처분을 받은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며 “감호제도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겨레신문·말지 검열 또한 윤 씨는 감호소 내에서의 신문검열에 항의하다 징계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92년 5월경 <한겨레> 신문이 여기저기 잘려나간 상태로 들어오는 것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편지를 썼다가 발각돼 두 달간 시승시강 상태로 독방에 거하는 징계를 받았다. 또한, 한총련 사건 이후인 올해 9월부터는 감호소측에서 <한겨레>신문과 <말>지의 구독을 아예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송보호감호소의 그 짝 사회보호법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청송 보호감호소에 재소자들이 수감된 것은 81년 12월부터였다. 처음 이곳에 수용된 사람들은 다음이던 삼청교육대 출신의 감호생들이었다. 이를 통하여 사회보호법의 첫 적용대상들이 청송보호소에 수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청송보호소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보호법은 서울법원 80년 12월18일 국가보위법위헌결정에서 개정되었다(89년 3월 9일 개정).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복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를 함으로써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회보호법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적, 개선적 예방책이라고 한다. 같은 형벌보다도 혹독한 인권유린 제도이며 또 하나의 처벌이라는 이유로 비판받아 왔다.

민주노동, 노동법개정 유보시 전국 총파업 돌입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거나 노동법 개정을 유보할 경우엔 오는 12월 전국적 총파업 및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민주노동권영길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유보하거나 계계의 입장대로 노동법을 손질하려 할 경우, 12월 10일을 전후하여 다양한 준비투쟁을 거쳐 전국적 총파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민주노동 산하 3백36개 노동조합의 35만 조합원이 공식적으로 쟁의발생을 결의했으며, 앞으로도 50여만 조합원이 속한 9백30여개 전 사업장으로 쟁의발생신고가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회 인권영화제는 16개 도시에서 계속됩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대학생 연행 '영장 필요없다' 12일 새벽 경찰 침탈, 고려대생 38명 불법연행

공권력의 횡포가 수그러들 줄을 모른다. 지난 12일 새벽 고려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경찰이 수배중이거나 현행범도 아닌 학생들을 사전동의나 영장 제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연행한다. 그 과정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구타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경찰은 무고한 학생들을 불법연행해

놓고도 이들에게 동아리 활동 상황·친한 친구 이름 등의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서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새벽 4시경, 학생회관 내에는 38명의 학생들이 남아 동아리방 등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 때 3개 층에 4백여 명으로 추정되는 전경병

력이 건물 내로 난입해 38명 전원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경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들 가운데 20명이 달리는 버스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발생했고, 이 때 윤경삼(정의과 1년) 씨가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가기도 했다. 달아난 20명을 제외하고 18명이 성북경찰서로 끌려갔으며, 새벽 6시 30분경에야 한두 사람씩 석방됐다. 이날 성북경찰서로 연행됐던 이보균(법학과 3년) 씨는 "당시 우리들은 당연히 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반발했는데, 전경들은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구타를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경찰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동시에 부상당한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공직자 비리근절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15일 이성호 보건부

지부 장관 및 홍인길 의원 등의 안정사회회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부정부패저지를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을 재촉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부정부패의 뿌리는 결코 집권자의 의지나 소수의 결단으로 제거될 수 없으며, 특히 고위공직자의 비리근절을 위한 근본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학련 의장등 3명 국보법 위반 긴급구속

15일 오후 7시25분경 당산전철역 근처 중국집 대동장에서 전국학생연합(전학련) 의장 엄형식(외대불문과 92, 휴학) 씨를 비롯해 이봉재(정책실장, 서울대 공법학과 90), 권용희(조직국장, 덕성여대 90, 졸업) 씨등 3명이 경찰청 소속 경찰 15명에 의해 긴급구속되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1, 2항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진보정치연합은 긴급성명을 통해 "전학련은 공개적인 정치활동을 해온 단체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속하는 것은 학내의 자유로운 학문의 자유와 학생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불!

지로번호: 7618848

4인이하 사업장 55.4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확대 시급

노동자 가운데 약 3/4은 법정공휴일에도 쉬지 못한다. 연월차 휴가가 있는 사업장은 25% 미만이며, 생리휴가를 받는 여성노동자는 5%에도 못 미친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86%가 산재보험처리를 거부당하고 있다. 이는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의 노동실태가 아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구가하는 OECD 가입국 한국의 4인이하 사업장 노동실태 조사결과이다.

민주노동, 157명 조사
민주노동과 4인이하 사업장 공대위는 최근 96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전국의 4인이하 사업장 노동자 1백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들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였다.

직장만족도 44.9점
자기기업식 설문조사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4인이하 사업장의 전체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1백점 만점에 44.9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강도'와 '직장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40.3점과 42.0점으로 나타났으며, '작업환경'과 '노동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38.4, 38.9점에 그쳤다. 4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은 임금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49.6%의 만족도만을 보여 임금,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기법 확대사업예산 삭세

아동매춘·노예노동 증가추세 개도국 2억 5천여명, 아시아 61% 차지

아동노동, 아동매춘, 아동노예노동 등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엔은 개발도상국가에 살고 있는 2억 5천여 명의 아동들이 풀타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이전 추정치의 2배라고 전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초로 새로운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10살 이하의 어린이를 포함해서 가사일에서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노동하는 어린이의 숫자를 집계한 것이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 노동자의 61%가 아시아계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아프리카계가 32%, 남미계가 7%라고 말했다. 또한 ILO 사무총장 미셸 한센네(Michel Hansenne) 씨는 아동노동의 주요 원인이 가난이라고 밝혔다.

ILO는 강요된 노예노동 실태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은 2백 년전 농노와 같다고 보도했다. 또한 공식적인 부정부패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은 돈과 조각의 댓가로 팔려가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서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계로 나타났다.

특히, 남미계의 소녀들은 유럽과 중동의 성노예로 팔려가고 있으며, 남아시아계 소녀는 북유럽과 중동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계 소녀는 헝거리, 폴란드, 서유럽으로 팔려가고 있다.

출처: 제네바 <로이터> 통신

한편 지난 5일 국회 노동위원회는 노동부 예산 심의에서 재경원이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를 위한 익년도 사업예산 10억원을 전액삭감한 사실이 밝혀져 울들어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를 공언해 온 정부의 실천의지는 근본적으로 의심받게 되었으며, 향후 노동계의 강력 대응이 예상된다.

○인권간행물○

- 전해투 지원대책위 소식지 제1호(744-7437)
 - 주요내용:옥중서신-나현균 전해투 위원장/LG그룹 정도경영 자격없다 등 20쪽
- 노동과 건강 9·10월호-노동과 건강연구회(866-9175)
 - 주요내용:특집-경전완강에의 실태/원진노동자 직업병 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등 117쪽
- 국제엠네스티 11·12월호-AI 한국지부(053-426-2533)
 - 주요내용:아프리카 현장, 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전두환 씨의 사형선고를 반대하며 등 27쪽
- 전국연합 통신 110호-전국연합(921-4090)
 - 주요내용:전단! 노사개혁/한총련이 보는 '96 통일투쟁-전북총련과 부경총련 평가서 전문 등 91쪽
- 전대협 서울지역동우회(준) 소식지 창간준비 2호-전대협 서울지역동우회(준)(3673-1989)
 - 주요내용: 최근 경쟁력 캠페인과 한국경제문제의 본질/준비위원 주소록 등 92쪽
- 고난함께 9·10월호-고난함께(393-4662)
 - 주요내용:시론-안기부법 폐지합시다/고난의 긴 터널을 뚫고 나온 햇살같은 새로운 출발을 기뻐하며 등 50쪽
- 민족예술 11월호-민예총(743-5872)
 - 주요내용:검열폐지, 새로운 싸움의 시작/전환시대의 논리, 그 20년 후 등 100쪽
- 노동사회연구 제9호-한국노동사회연구소(778-4225)
 - 주요내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노동조합/전환기 남아공에 대한 세계사적 이해(2) 등 156쪽
- 자료집: 유가협 창립 10월 기념 및 제11차 정기총회
 - 주요내용:유가협 십년사 보고서/민족민주열사 명단 등 127쪽
- 우리네 아이들 11월호-지스타(275-8505)
 - 주요내용:사회복지와 영유아 보육사업/서평 『레지오 에밀리아의 유아교육』 등 72쪽
- 열사회보 창간호-열사추모사업회 연대회의(742-3180)
 - 주요내용:12·12와 5·18 재판 이후의 과거청산/연대회의 소식 등 25쪽
- 자료집: 통합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권 보호
 - 주요내용:전자적 기록과 원형감옥/법률적 측면에서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보호 등 58쪽
- 세상열기 11월호-청년정보문화센터(516-1542)
 - 주요내용:청년 세대의 가족과 가정/불심검문, 임의동행 거부할 권리 있다 등 105쪽
- 자료집: 6월민주항쟁 10주년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대회-범국민추진위(921-4090)
 - 주요내용:발기취지문/6월항쟁관련 자료와 일지 등 58쪽
- 철도노조민주화 지원 연대 소식지 제9호(835-3799)
 - 주요내용:어용 철도노조, 민주와 지부장 제명/참여와 투쟁을 향한 힘찬 진군 등 2쪽
- 함께 가는 여성 11월호-한국여성민우회(269-5763)
 - 주요내용:유해물질 바로 알고 생활오염 피해가기/드라마 '에인'과 의도에 대하여 등 20쪽

제1회 인권영화제는 16개 도시에서 계속됩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남선물산 노동자 쇠사슬 농성

정리하고 철회, 고용승계 요구

수은주가 영하로 곤두박질 친 가운데 거대한행자본의 횡포에 맞서 상복을 입은 법정관리업체 노동자들이 칼바람을 맞아가며 나홀로 외로운 쇠사슬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월 5일 정리하고 철회 및 고용승계, 매각 후 노조승계 등의 단체협약안 이행을 촉구하며 상경해 15일부터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 길바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8명의 남선물산 노동자들이 바로 이들.

80년대 초까지 대구지역 섬유공단 내에서 매출액 1위를 다투던 남선물산이 섬유경기 악화로 부도처리된 것은 지난 84년이다. 이때부터 남선물산은 법정관리 대상이 되어 외환은행에

서 파견한 사장의 직할경영 체제에 들어가게 되었다.

1천1백명이 2백50명으로 법정관리 이후 단 한 번도 시설투자나 경영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던 외환은행은 92년 말 남선물산 매각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전체 노동자 1천1백여 명 가운데 2백여명을 희망퇴직시켰다. 이후 해마다 2백여 명 이상을 감원시켜 96년 초에 이르러서는 재직중인 노동자가 2백5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꼬리를 무는 대량감원 조치에 위기감을 느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속속 결집, 올해 임금인상투쟁을 단결된 분위기 속에서 치루

어 낸 기쁨도 잠시였고, 외환은행은 8월 18일 폐업을 예고하였다.

“채불입금과 퇴직금이나 매대로 받으려면 당장 희망 퇴직원을 내라”는 위협에 못 이긴 노동자들이 하나 둘씩 퇴사하자 외환은행은 그때까지 남아있던 1백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이번에는 5.5개월 분의 해고수당을 제시했다. 8월 31일 끝까지 남은 노조위원장 등 20명에 대한 해고와 함께 폐업이 강행되었다.

농성장의 이길우 노조위원장은 “해고수당 몇 푼 더 줄테니 우리더러 돌아가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도 경기악화를 이유로 대량 해고는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대구지역 인근 섬유노동자의 숫자는 불과 4-5년 사이 2만5천명에서 1만2천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파견사장은

앞세운 외환은행 측은 20여 차례의 협상에서 매각방식이 법원 경매이므로 고용승계 등의 조건은 법률적으로 검토될 수 없다는 식의 진실성없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대구시측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긴 마찬가지였다.

현재 상복 차림의 남선물산 노동자들은 아무런 경영 개선 노력도 없이 노동자들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고, 재잇속만 쟁기려는 대자본의 횡포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작정이다.

농성장의 이길우 노조위원장은 “해고수당 몇 푼 더 줄테니 우리더러 돌아가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도 경기악화를 이유로 대량 해고는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대구지역 인근 섬유노동자의 숫자는 불과 4-5년 사이 2만5천명에서 1만2천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파견사장은

폐업후 1백10일간 투쟁

이때부터 약 1백10일간 남선물산 정리하고 철회투쟁이 대구지역 노동단체들의 지지와 지원속에 계속되었다. 그러나 파견사장은

주요공판안내

- 19일(화) 최진선, 모계영, 임성중 (이상 국보법), 김동관 외1 (특공 방차상)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고대근, 이종철, 차대엽외5 (이상 국보법) 오전10시, 합의 21부, 311호, 속행 권영길, (일반교통방해 등) 오후2시, 3단독, 320호, 속행
- 20일(수) 주계윤외2, 정 선, 김미경, 유현수 (이상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 21일(목) 여성오 (화염병처벌법) 오전10시, 합의4부, 418호, 신진
- 22일(금) 황윤미 (국보법) 오전11시, 5단독, 519호, 속행 설중호외10, (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함운경, (국보법) 오후4시, 10단독, 525호, 속행 -이상 서울지법 형사부

제1회 인권영화제가 16개 도시에서 계속됩니다

- 구미 : 11월22일-24일 (0546-52-2314)
- 원주 : 11월23일-28일 '가톨릭센터' (0371-731-1364)
- 춘천 : 11월25일-28일 (0361-53-8904)
- 청주 : 11월25일-12월1일 (0431-68-3445)
- 수원 : 11월29일-12월1일 (0331-213-2100)
- 인천 : 11월30일-12월4일 '부평4동 성당' (032-761-0861)
- 대구 : 12월5일-8일 '열린공간 Q' (053-426-2533)
- 전주 : 12월5일-8일 '전북대 합동 감당' (0652-82-9887)
- 대전 : 12월7일-11일 (042-256-5183)
- 부산 : 12월10일-15일 (051-501-1018)
- 광주 : 12월10일-14일 (062-529-7576)
- 마산 : 12월12일-19일 (0551-55-5080)
- 제주 : 12월18일-22일 YMCA 강당(064-22-2701)
- 안산 : 12월20일-24일 '한양대 소극장' (0345-413-5120)
- 성남: 기간 미정, 장소는 '성남문화센터' (0342-47-9877)
- 구리: 기간, 장소 미정 (0346-69-5547)

노동법 개정, 재계 마음대로 안된다 민주노총, 노동부장관에 정의발생 신고

개정이나 개악이나.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한때나마 노동계와 재계의 대결양상에서 중립을 지키는 듯 비추던 정부가 슬슬 재계 손들어주기를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대응도 만만치 않게 펼쳐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18일 성명을 통해 “노동법 개정안은 아무런 경영 개선 노력도 없이 노동자들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고, 재잇속만 쟁기려는 대자본의 횡포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작정이다.”

반면, 노동부는 지난 16일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성 국무총리) 제출한 개정안에서 정리하고 제와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을 포함시키는 등 근로기준법 개악을 골자로 하는 기존 경영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나섰다. 특히 노개위조차 2차 개혁과제로 유보시킨 근로자파견제 도입까지 개정안에 포함함으로써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우기 노동부가 마련한 안은 ‘파업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쟁의기간중 대체근로’ 등을 신규 입법화하는 등 민주적인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이번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고,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가 이를 정부안으로 확정한다면, 50만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전국적 총파업을 단행하는 동시에 범국민적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산하조직에서 실시한 정의발생결의 현황을 집계해 오늘 오전 10시 노동부 장관에게 정의발생을 신고하는 동시에 장관과의 면담을 갖기로 했다. 또한 19, 20일 양일에 걸쳐 낮 12시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뒤에서 「노동악법 철폐 및 개악 저지 촉구대회」를 잇따라 개최하기로 했다.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라 전국학생정치연합 성명

전국학생정치연합(전학련)은 지난 15일 임형식 의장 등 집행간부 4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전학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구속된 13명이 8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나 있고, 현재 전학련 이적단체규정에 대한 항소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다시한번 근로’ 등을 신규 입법화하는 등 민주적인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보법의 이적단체 찬양고무 조항은 그 규정이 모호하고, 이 법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 정한다면, 50만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전국적 총파업을 단행하는 동시에 범국민적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불!

지로번호: 7618848

주/간/인/권/호/름

(96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11일> (월) 남종현 소속 대학생 27명 불법연행/안기부가 한총련 시위 학생들에 대한 영장기과 판사를 좌의동조차처럼 매도한 비디오 제작·상영한데 대해 야당과 재야단체 제작관련자 처벌 요구/두밀리 자연학교 대표 채규철 씨 'UNEP 글로벌 500 한국인회'에서 주최한 제1회 '풀뿌리 환경상' 수상자로 선정/16만4천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계열 9개 캠퍼스가 11월부터 시작되는 입학사정 때 소수계·여성 우대정책을 적용하지 않기로

<12일> (화) 국내 동티모르연대모임 발족/경찰, 새벽에 고려대 침탈해 동아리방에서 자고있던 대학생 38명 불법연행/전남 지방경찰청, 민족해방군 사건 조사결과 발표/남종련 "민족해방군 사건은 아무 근거가 없는 학우들을 연행해 만들어 낸 짜맞추기식 사건"이라고 주장

<13일> (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 심의 결과, 한국정부에 대해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보장, 구금기간 축소, 고문방지조약 21(국가간 문제제기권) 22조(개인제소권) 등 인권보장조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사항 결의/민변 안기부가 제작·방영해 물의를 빚은 '한총련의 실체' 비디오테이프와 제작경위 등 관련문서일체 공개 요구/남녀고용 평등법 내 간접차별,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반대를 위한 공대위/남녀고용평등법 개정청원서 국회에 제출/로마에서 개막된 세계식량정상회담에서 2015년까지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전세계 빈곤인구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일 것을 당면 목표로 설정하는 '로마선언'과 7개항의 행동계획 채택

<14일> (목) 전국농민회연맹 소속 전남·충청·경기지역 농민들, 정부의 추곡 수매값이 3년째 동결인 것과 관련해 크게 반발/최규하 전 대통령 12·12·5·18 증인으로 강제구인되었으나 법정에서 묵비권 행사/교육부 발표, 95년도 가출한 중·고생 숫자는 2만1천5백1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 이상 증가/민주노총, 노동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 이뤄질 경우 12월10일경 총파업 돌입 경고/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3차 중동·북아프리카 경제회의, 중동평화협상 당사국들이 기존협정을 이행할 것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봉쇄중단을 촉구하는 성명 채택

<15일> (금) 경찰, 전국서점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여 이른바 이념서적들이라며 합법도서를 압수·판대금지동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민주노총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조건 실태' 발표, 전체조사 대상 노동자 1백57명의 평균근로시간은 주 54.4시간으로 나타나/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전국학생연합 의장 임형식씨등 4명 긴급구속/동티모르 학살사건인 '산타크루즈 사건' 5주년을 계기로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동티모르 학생시위가 계속 확산

<16일> (토) 대검, 중국고포 상대 사기범 전면수사 지시

<17일> (일) 한국참사랑복지회, 탁로소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에 벌여 /80년 당시 전남도경감장을 지낸 안병화 씨의 유족이 전두환·노태우 씨 등을 상대로 6억달러 손해배상 소송 제기해 미국법원에 계류중인 사실 밝혀져

제1회 인권영화제는 16개 도시에서 계속됩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LG 해고자 탄압, 다양한 전략 유령집회신고에 노부모까지 끌어들이

LG그룹 해고노동자 성한 기(42) 씨와 이동렬(37) 씨의 단식농성이 11일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LG그룹은 여전히 '복직 절대불가'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심지어 단식농성을 방해하기 위해 상식이하의 대응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G그룹은 지난 15일 해고자 복직불가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날 김영기 LG그룹 인사담당 이사는 회사를 방문한 김세균 전혜투지원대책위 집행위원장에게 "해고자 문제는 그룹 경영방침인 자율경영 원칙에 따라 각 사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것은 나쁜 선택이 될 뿐 아니라 정도경영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절대 받아들

일 수 없다"고 밝혔다. LG는 이밖에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타그룹에서의 미복직자가 LG의 3-5배에 달하며 △노조나 현장사원들의 해고자 복직 요구가 없다는 점 등을 복직불가의 이유로 내세웠다. 한편 두 해고자의 단식농성을 방해하기 위해 LG측은 고향집의 노부모까지 끌어들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김천에 살고 있는 이동렬 씨의 8순 노모는 지난 15일 아들의 단식사실을 알리는 우편물을 받는데 이어, 인근 지서에서 전화통보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구미의 성한기 씨 가정과 선산의 고향집에도 성 씨의 단식을 중단시

켜달라는 편지와 전화가 왔다고 성 씨는 밝혔다. 성 씨에 따르면, 회사측이 보내온 서신엔 "당신의 사랑하는 자식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으니 건강이 염려되므로 설득해 데려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한다. 또한 LG는 해고자들의 농성을 막기 위해 농성장소로 사용되어 온 여의도본사 앞 도로에 유령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여름 대우정밀 해고자들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대우그룹측이 사용했던 방법으로서, LG그룹 내 유통, 전자, 전선, 화학, 산전 등 5개 계열사는 이를 실행하며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 동안의 집회를 미리 신고함으로써 해고자들의 농성을 원천봉쇄해 버렸다. 따라서 해고자들은 여의도광장 한편에 농성장소를 따로 마련했다. LG 측은 집회신고 첫날인 19일엔 오전 8시30분부터 약 30여분간 그룹 직원 30여 명을 동원, '환경문화 정착하자' '건전한 시위문

화 정착'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를 벌였으나, 이후 집회마감 시간인 일몰 시간까지 어떠한 집회나 시위도 진행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여야면담 제안

최근 정치권에서 부패방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통해 여야 법안의 협의를 위해 여야대표와의 면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이 당론의 벽에 부딪혀 좌초되고, 부패추방 의지를 믿었던 많은 유권자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은 국민의 염원이 부패추방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여야 합의로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는데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법안의 일부 수정도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3당대표와의 면담을 정중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

지포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전세계 8억 이상의 사람들 영양실조

최근 세계식량회의에서 발표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 따르면 8억 이상의 사람들과 5살 이하 2억에 이르는 어린이들이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있다. 또한 1백만명의 사람들이 무기염류(비타민류)의 부족과 오염된 물과 식량으로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곡물의 생산량은 감소하나 가격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각국 1백 97개의 정상들은 로마에 모여 굶주림과 식량안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계식량회의는 74년 세계식량회의가 개최된 이후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첫번째 기회였다. 96년 세계식량회의는 "전세계의 인류가 인간이라면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해 굶주림과 영양실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가 10년 안에 식량안보와 굶주림·영양실조의 제거를 목표로 내걸었음에도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는 못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디오우프 씨는 "국제사회와 정부가 만성화된 영양실조의 잠재된 원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15년이 지난 후에도 7억 5천여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과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아프리카에 퍼져있는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2010년까지는 3억이상의 사람들이 더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긴급한 상황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원조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식량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그들의 자력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다섯사람중에 한사람이 하루 필요 열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다섯사람중에 두사람이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

연대 성추행 여학생 진압경찰 고소 여연 등 고발장 접수

연세대 사태 때 여학생을 성추행한 진압경찰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다.

지난 8월 20일 연세대 종합관 진압 과정에서 전경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학생 7명은 오는 21일 여성평화의 집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직접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진압경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제13조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동시에 스다수의 진압경찰이 피해자들에게 성추행을 행하는 것을 묵인하고 스취하의 경찰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못한 점 스여성 및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경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형법 제129조 <공무원 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진압책임자를 고소하기로 했다.

한편 같은날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인권단체들도 진압경찰 및 지휘책임자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12월 총파업 올바른 노동법 개정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월 4일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

에 들어갈 방침이다. 19일 낮 12시 민주노총 주최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뒤에서 열린 「노동악법 철폐 및 개악 저지 촉구대회」에서 이형모 언론노련 위원장은 "노동법 개정이 올바르게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12월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늘 낮 12시, 같은 장소에서 재차 촉구대회를 개최한다.

<인권영화제 감상문>

'지하의 먼중'을 보고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볼리비아의 한 도시. 무장군인들이 손 총에 맞아 송장이 되어 거꾸로 끌려가는 사람들, 이웃 주민들에 의해 실려 오는 부상자들. 마치 80년 광주의 비디오를 보는 듯 했다.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한 젊은이는 쿠데타의 총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술에 파묻히는 등 마음만큼 복잡한 생활을 하며 고향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영화는 이렇게 시작된다. 영화 전반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도시와 농촌,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보여진다.

군부의 총칼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사람들과 도로를 봉쇄하고 스스로 무장을 하고 있는 광산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똑같이 군부에 의해 탄압 받고 있는 볼리비아 민중들이다.

안데스의 거친 자연 환경과 세바스찬의 시선에 따라 떠오르는 과거의 모습들, 미제국주의가 행하는 원조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과거의 세바스찬과 제국주의의 배후 조종에 의해 일어난 군사쿠데타와 이로 인해 죽어가는 민중들의 모습은 현재의 세바스찬에게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안겨 주었다.

결국 세바스찬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죽을 때까지 춤을 추기로 마음먹고 어릴 적 보았던 '죽음의 춤'을 추었다. 마을 사람들이 광산 노동자들과 함께 군부에 저항하고 돌아올 때 세바스찬을 들로 쳐죽이려 하지만 마을 노인들의 만류에 세바스찬은 춤을 끝까지 출 수 있었다. 결국 세바스찬의 장례식을 통해 마을의 노인으로부터 젊은 사람, 어린아이까지 모두 참여하면서 안데스의 산신에 대한 믿음이 끝까지 남아 있게 된다.

안데스의 거친 자연 환경과 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박한 삶의 모습이 빼어나오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다. 또한 이들의 소박한 삶이나 도시의 삶 또한 역사와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실천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동대문구 휘경1동 이주현)

광주교도소 양심수 단식 농성 민족해방군 조직에 항의

광주교도소 양심수 70여 명이 민족해방군 사건 조작 등에 항의하며 18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사실이 면회를 통해 밝혀졌다.

19일 광주 인권지기(회장 이동균)에 따르면, 전남대 자주대오 사건 및 각종 시국사건 관련 미결수들이 이들은 "한총련 대학생들에 대한 중형선고를 규탄한다"

고 말했다. 특히 "남총련에 대한 집중수사로 학생운동과 관련된 학생들까지 민족해방군으로 짜맞춰 조직사건을 발표한 것은 남총련과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명백한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행형법에 기준한 소내 공정한 처우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도 요구한 것으로 전했다.

제1회 인권영화제는 16개 도시에서 계속됩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시민 폭행치사 검찰 수사 지연

노병우씨 유족, 51일째 전대 병원 농성

지난 10월 2일 전남 화순에서 발생한 노병우(39) 씨의 사망사건이 51일째를 맞고 있다. 이미 '외력에 의한 타살'이라는 부검결과가 나왔고, 노 씨를 연행했던 경찰 스스로가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가해자들에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그 가족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20일 현재까지 가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않은 채 노 씨의 시신을 전남대 병원 영안실에 안치해 두고 있으며, 검찰의 성의 있는 수사를 적극 촉구하고 있다.

이미 MBC 등 몇몇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노병우 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소동을 벌이던 중 경찰에 연행되었고 이후 파출소에 감금된 뒤 번사체로 발견되었다. 전남대 병원에서의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타살'로 밝혀졌으며, 노 씨의 가족들은 유성수 순경 등 관련자 3명을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에 고소된 유 순경은 "노 씨가 마을에서 평판도 안 좋고 직접적 피해를 끼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해 오던 사람"이라며 "30센티미터의 칼을 들고 덤비는 노 씨에게 50센티미터의 경찰봉으로는 대처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무 막대기를 이용했다"면서 폭

행 사실을 인정했다. 동시에 그는 "법집행 과정에서 노 씨가 사망한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검찰 판단이 내려지면 어떤 처벌도 감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두개골이 세곳이나 파열되고 갈비뼈가 네개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는데, 가스총을 쏘고도 그렇게 심하게 구타할 이유가 있다"며 이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실신상태의 노 씨를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파출소 무기고에 방치해 둔 점에 대한 경찰의 책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가족들은 주장하고 있다.

정보통신검열 백서 발간 시민연대, 오늘 출판기념회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다섯달간의 작업 끝에 <정보통신검열 백서>를 완성하고 오늘 저녁 7시 신림동 정보연대 SING 사무실에서 백서 출판 기념식을 갖는다.

시민연대는 통신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진보적 통신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 백서사업은 시민연대의 첫 작업으로 국가기관과 온라인

업체들에 의해 수행되는 검열 기도를 밝히고 통신공간 상에서의 인권탄압 실태를 고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3백여 쪽으로 구성된 백서는 △선거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공선법 제 251조의 위헌성 △국보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한 총련CUG 폐쇄사건 등 그동안 국가기관에 의한 벌어진 각종 검열 사례를 분석 비판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 세계유일의 정보검열 기구라는 정보윤리위원회의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국의 검열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검열에 대한 대안 제시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새 신분 확인제 필요 주민증, 프라이버시 침해

주민등록증 시행 시행 28주년을 맞아 최근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시행 방침에 반대해온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일 논평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논평에서 "현행 주민등록증 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규정에 어긋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주민등록증에는 개인이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나이, 출생지, 병적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하고, 신분 확인을 위한 새로운 신분확인 제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와 동정

- 노동법개정 정부안 마련에 즈음한 각계 전문가 입장 발표
 - 일시: 11월 21일(목) 오전 10시 · 장소: 명동 향린교회
 - 주최: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 3673-0685)
- 안기부법 반대 목요기도회
 - 일시: 11월 21일(목) 저녁 7시 · 장소: 기독교회관 2층
 - 주최: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 764-0203)
- 공익소송법 제안 설명회
 - 11월 22일(금) 저녁 6시 ·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
 - 주최: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 (☎ 796-8364)
- 제2회 청년문화제
 - 일시: 11월 23일(토) 오후 6시 / 24일(일) 오후 2시, 6시
 - 입장료: 6천원(팝플렛 포함)
 - 장소: 동부문화센터 아리수소극장 (☎ 467-2277)
 - 주최: 나라사랑청년회 (☎ 363-5128)
- 월간 사회평론 <길> 사무실 이전
 - 주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2-31(전국섬유노조연맹빌딩 4층) · 전화: 326-1182~5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④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장 신용호 장애인들의 다리가 되고자 하는 장애인 활동가

당연히 연구소 사무실이 2층일 거라는 생각으로 계단을 오르니 「지금엔 우리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메모가 붙여 있고 바로 그 위에는 '장애아동가족지원센터' 간판이 있었다. 한참을 헤맨 끝에 지하실에 위치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로 드디어 찾았다.

신용호(34) 씨는 언제나 처럼 맑은 웃음으로 맞아 주었다(필자는 그와 구분이 없었다). 언제 이사를 했는 물음에 지난 3월달에 충무로에서 오갈 데 없던 장애아동가족지원센터를 받아들이 50평의 사무실을 내주며, 지하방(70평)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며 "평당 1백만 원인데, 들 합쳐 전세 1억4천만 원이니, 꽤 부자지?"하고 말했다. 장애아동가족지원센터에는 20명 가량의 정신지체, 자폐 아동들이 있다.

"장애인 올림픽이 열린 88년을 전후로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생겨났는데, 연구소도 87년 생겨나 88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창립식엔 손님으로 갔었는데, 작은 단체 하나가 또 생겨나는구나 생각했어."

연구소의 창립 목적은 장애인들의 요구를 수집·정리해 정책을 입법화시켜 내는데 있다. 서비스는 몇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밖에 없지만, 정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의 요구를 담은 목소리를 법, 제도 개선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장애아동가족지원센터 역시 이점에서 특수교육과 아동복지, 사회복지 집목사는 실험의 장으로 삼고 있다. 이제껏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등은 교

육에만 급급할 뿐 사회복지나 아동복지 쪽으로는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 이렇듯 현장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준비중인 중요한 사업이 또 하나 있다.

사무실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평가실'이 그것이다. 장애인 취업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를 태면 중증, 정신, 지체 장애인 한 명 한 명마다 그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을 분석해 내고, 필요한 곳에 배치해 내는 일이다. 직업평가실은 장애인 한사람마다의 직업·직무능력 평가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장애인 직종을 개발해 내고, 사후 관리를 통해 그 직업이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다면 재평가를 통해 다시 배치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직업만을 알선해 주는 '복덕방'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해야 할 바를 연구소가 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에서 기계를 들여와 기계 사용법에 관한 책자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장 요구 따라 사업 설정 연구소는 소장 1명, 부장 2명, 일반 직원이 11명으로 된 사단법인체이다. 업무는 기획·관리팀, 정책팀, 출판팀으로 나뉘져 있고, 그는 기획·관리, 정책팀을 아우르고 있다. 파중한 업무로 5년째 계속되어온 장애우대학 준비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월할 작정이라고.

94년 12월 사단법인 등록을 하게 된 뒤부터 연구소 시 이점에서 특수교육과 아동복지, 사회복지 집목사는 실험의 장으로 삼고 있다. 이제껏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등은 교

방배동에 위치한 사무실 근처에 신혼 살림을 꾸렸다. 가 전세금을 올려 달라는 바람에 지금은 광명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딸 가인이는 오는 26일이면 꼭 24개월이 된다. 부인과 인연의 끈을 맺게 된 것은 연구소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7년만에 졸업한 뒤 90년 1월 연구소에 들어왔다. 82학년 학교시절 장애인운동 쪽 일이 바빠 몇 차례 휴학을 하는 바람에 졸업이 늦어졌다.

"괜찮은 줄 알고 들어왔는데, 웬 걸. 충신대 근처에서 보증금 없이 월 13만원 내고 살았지. 게다가 빚 더미에 있더라고. 적어도 월간지 <함께걸음>은 자체 제작을 해내지는 생각에서 재정사업을 건의했어"

학교 시절부터 알던 후배를 통해 기획사를 인수하게 되는데 이때 기획사에서 일하던 부인도 따라서 연구소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는 지체장애인인데 다른 장애인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김호호 원장이 운영하는 사단의원 봉투에서부터 외부에서 기획영업을 따오는 일이 그의 몫으로 낙착되었다. 그 뒤로부터 군대 3년 갔다는 셈치고 3-4년간 계속 영업사업장에서 활동했다.

3년 넘게 영업 활동

시간을 지나며 연구소는 당초 세운 계획대로 입법운동에 있어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89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최근 장애인기본법에 이르렀는데, 이밖에도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건립 반대 싸움 등 연구소의 숨

은 노력은 곳곳에 배어 있다. 연구소는 앞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부분으로 현장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을 잡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다니면서 장애인운동단체 '올림티'를 만들고,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활동에서부터 올곧게 한길을 걸어온 그가 이야기하는 장애인 운동은 이렇다.

"우리 사회에 있어 장애인운동은 그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다. 단지 내가 장애인이니, 나는 특수교사니까 하는 식으로 아직 맹아적 단계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80%가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70%가 직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장애 종류도 지체, 청각, 시각, 정신지체 등 다양하다. 하물며 같은 청각 장애인이라도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욕구가 다르다. 이렇게 천차만별인 조건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는다는 것은 어렵고, 따라서 조직화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엘리트 중심이나, 장애인 시설장 중심의 청원운동이 되고 만다. 아직도 장애인의 권리보다는 심정에 호소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조건은 좋아지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자원활동도 많이 됐다. 대학내 수화동아리의 경우 1백여 개가 넘는다."

"땀에서 넘어진 자, 땀을 댈고 일어선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함께 활동가는 모름지기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부지런히 현장을 뛰어다니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제1회 인권영화제는 16개 도시에서 계속됩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송광영 추모비 61일만에 소재파악

경원대 학생과장·장학복지과장 연행·조사중

경원대 송광영 열사 추모비 탈취 사건이 사건발생 61일만에 해결점을 찾고 있다. 성남 중부경찰서 강성관(총경) 서장은 21일 오후 4시30분경 김해성(산자교회) 목사와의 면담을 통해 "추모비는 충북 음성에 있으며, 탈취범은 최봉성 학생과장과 황상완 장학복지과장"이라고 밝혔다. 충북 음성에 버려진 추모비는 뒷면에 새겨진 비문중 '양심선언'이라는 부분만 깨졌을 뿐, 다른 부분은 원상 그대로라고 경찰측은 전했다. 이날 오후 학생과장과 장학복지과장은 성남 중부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이밖에도 지난 10월 28일부터 경원대생 민태호(92학번, 재적) 씨등 3명이 총장 퇴진, 추모비 탈취차 처벌, 학생 정계·구속·수배 철회등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여왔다.

유가협 59일간 천막농성
전국유가협 박찬영 사무국장은, 25일 항의방문을 통해 추모비 탈취등 재발방지 대책국민 사과 △유족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등을 학교측에 요구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주 중순경 송광영 열사 원상복귀를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에 건내는 이중성까지 보여 유가족들의 분노를 샀다.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경원대측의 극에 달한 부도덕성을 새삼 확인한 셈이다.

경쟁력 이유로 산재방지 민주노총 투쟁발사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21일 최근 정부가 경쟁력 10% 높이기 세부방안의 하나로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영양사 등에 대한 의무 고용 축소, 폐지안을 발표

한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자 등 13개 전문직종에 대한 의무고용제 폐지와 전기관리자 등 14개 직종 의무고용비를 완화 방침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반개혁적 행정이라고 반발하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해당직종 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하루에 9명의 노동자가 죽고, 신체장애자 1백명이 발생하며, 4명이 직업병이 걸리는 상황이고, 산재로 입은 손실액은 GNP의 1.5% (5조6천 6백78억원)에 이른다며 산재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제보·구독신청
715-9185

달력을 통해 만나는 민족민주열사 97년도 민족민주열사 달력 판매

어느덧 96년을 한달 남겨놓은 11월말, 내년도 달력 선보이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전국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에서는 민족민주열사 달력을 제작·판매하고 있다.

이 열사력은 한 주 단위로 된 주력으로 제작되어 그 주간에 산화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들의 약력과 남긴 말들, 그리고 그 주간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일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연대회의는 열사력을 제작한 취지에 대해 "은음을 다 바쳐 이땅의 자주·민주·통일을 진전시킨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들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열사력을 통해 70년대 이후 이땅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산화해간 열사들과 의문사를 당한 이들, 고문후유증이나 옥중 후유증, 불의의 사고 등으로 숨진 2백14명을 만날 수 있다.

열사력은 총 56매이며, 크기는 가로 52센티미터, 세로 28센티미터. 가격은 2만원. 문의: 742-3180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할!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성추행 피해 학생 7명, 경찰청장 고소 여성·인권단체 대표도 고발장 제출

연세대 사태에서 경찰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 당사자 7명이 박일룡 경찰청장과 현장 진압 책임자, 8월 20일 종합관 진압경찰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공공질질장소에서 혐의의 극에 달한 부도덕성을 새삼 확인한 셈이다.

이들은 22일 오전 10시 여성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을 고소·고발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했다. 대표 고발인인 지은희 여연 공동대표는 "의견이 보장되어 있는 다수의 경찰이 지극히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감과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피해 여학생들이 경찰에게 '벌을 도려내겠다'는 등의 언어폭력을 당했는데, 이러한 성적 언어폭력은 여성으로서의 자긍심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발언으로서 당시 극도의 공포상황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볼 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세대 사태에서 경찰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 당사자 7명이 박일룡 경찰청장과 현장 진압 책임자, 8월 20일 종합관 진압경찰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공공질질장소에서 혐의의 극에 달한 부도덕성을 새삼 확인한 셈이다.

이들은 22일 오전 10시 여성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을 고소·고발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했다. 대표 고발인인 지은희 여연 공동대표는 "의견이 보장되어 있는 다수의 경찰이 지극히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감과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피해 여학생들이 경찰에게 '벌을 도려내겠다'는 등의 언어폭력을 당했는데, 이러한 성적 언어폭력은 여성으로서의 자긍심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발언으로서 당시 극도의 공포상황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볼 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동법 개정방향 비판 전문가 의견 발표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법대위)는 2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노동법 개악시도를 비판하며 노동법 개정방향에 대한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발표했다. 법대위는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방향은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노동조건을 악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개혁차원에서 시작한 노동법 개정작업을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교사·공무원 단결 금지조항, 복수노조 금지조항, 제3자개입 금지조항 등 악법조항은 구차한 유보조항을 달아 사실상 존속시켜 놓은 반면, 노동자보호와 관련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파견근로제, 변형시간근로제, 집단해고제 등은 오히려 즉각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이다.

합법집회 폭력으로 진압 경찰은 수수방관 안산 후꾸꾸 노조

지난 15일에 이어 20일에도 안산 후꾸꾸 노동자들의 합법집회를 회사측이 강제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

고소 여학생 증언 요지

K대 박아무개 씨 = 8월 20일 새벽, 종합관에서 연행되어 내려올 때 가슴을 더듬고 쥐어뜯는 것에 항의하자 전경이 팔을 때려 고막이 찢어졌다. 경찰서에서 나온 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후 경찰만 보면 피하고 싶고,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성추행할 것 같은 두려운 상대로 다가왔다. 지금도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을 당하고 석달이 지난 지금 도저히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살 자신이 없다.

S대 정아무개 씨 = 옥상에서 연행되어 내려오는 중에 고개를 숙이고 내려오는데, 앞에서 전경들이 여학생들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봤다. 나도 전경이 가슴을 만져 순간적으로 "씨-"하고 불쾌한 소리를 내뱉자 전경들이 끈봉으로 머리를 두들겨 찼다. 계단을 다 내려올 때까지 그리고, 강남경찰서에서 옥과 성추행을 당하며 지냈다.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들이 모두 우리와 같이 괴로워할 것이다. 검찰에 가서 조사받는 것도 걱정되고, 부모님이 아시면 어떨까도 걱정되지만,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짓밟는 이런 성폭력은 피해 당사자들의 고소로 사라질 것이라 생각으로 함께 참여했다.

제1회 인권영화제는 16개 도시에서 계속됩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정보시령부 현역장교 추모비 절취혐의

유가협, “배후조종자 색출, 총장등 사퇴” 주장

송광영 열사 추모비 탈취 혐의로 경찰에 긴급구속된 최봉성 학생과장이 사건발생 당시 국군 정보시령부 현역 소령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상임의장 박정기)와 「송광영열사 추모비 탈취에 대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해학 목사)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과장 최봉성 씨는 지난 5월3일 경원대 직원으로 취직할 당시 국군 정보시령부 현역소령이었으며, 전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원대에 취직해 이종으로 월급을 수령했고, 9월30일에야 비로소 전역했다. 또한 학생과장이 데리고 다니는 직원 5명도 국군 정보시령부 하사관 출신임이 분명하고, 제대하지 않은 현직 정보시령부 군인도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게다가 장현구 열사 분신 이후 강태직원들을 학교직원으로 특채했고, 이를 진두지휘한 사람도 학생과장이라고 밝혔다.

하사관 5명도 직원 채용
현재 성남 중부경찰서는 최봉성 학생과장과 황상완 장학복지과장을 긴급구속해 철야조사중인데, 학생과장 등이 경찰조사에서 추모비 탈취하는 비용으로 1백46만원을 사용했으며, 이는 두 사람이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유가협 측은 “학교에 온지 몇 달 밖에 되지 않은 직원이 많은 비용을 개인이 충당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배후지시자나 조종자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모비 재건립까지 농성
전국유가협등은 22일 성명을 내고 △최원영 이사장은 추모비 탈취지시자 및 배후조종자를 색출하고, 사과문을 발표·게시할 것 △총장 및 보직교수는 총사퇴 △추모비 재건립 등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9월 23일 부터 계속되어온 경원대 진리관 현관 앞 천막농성을 추모비가 재건립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 음성 한 과수원에 감춰져 있는 추모비는 심하게 훼손되었는데 앞면의 “송광영 열사 추모비”라는 글자부위가 깊이 파졌다고 한다.

한총련 대학생 수사과정에서 고문당해 경찰, 투항의사 무시한 채 계속 진압

연세대 통일축전 행사과정에서 구속된 한총련 학생들이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법정 진술했다.

22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형사 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창학 피고인 외 10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태환(27·한총련 조직강화국장) 피고인은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3일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총련 간부들의 이름을 말할 것을 강요받으며 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자고, 원산폭격, 기마자세 등의 기합을 받았으며, 목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인을 요청하면 수사관들이 무릎을 꿇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종성(24·충남총련 사수대장) 피고인도 “노원경찰서에서 이틀간 잠을 못

제99차 금요시위 추한미군범죄근절본부

매주 금요일 정오 용산미군기지 제1정문 앞에서 열리는 ‘추한미군범죄근절본부를 위한 금요시위’가 22일로 99번째를 맞았다. 이날 집회는 「추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주관으로 열렸다.

자고 밤새 기합을 받았으며, 수사관들이 머리와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 구타와 가혹행위를 하며 자백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종합관 지휘체계표를 작성했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이승재(27·전 한총련 정책위원) 피고인은 “지휘표는 강압적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 밝혔다.

한편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은 학생들의 투항의사도 무시한 채 과잉진압에 나섰으며 이로인해 물질적 피해도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학(25·종합관 사수대장) 피고인은 “20일 새벽 경찰이 진입할 때 현관에서 백기를 흔들고 쇠파이프를 버리며 투항의사를 밝혔지만, 투항의사를 무시한 채 진압은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종성 피고인은 “경찰이 안전귀가를 보장했으면 종합관 건물은 파괴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잠옷바람으로 새벽 찬거리 내몰려 현저동, 상계동 등 동계철거 계속

최근 잇따라 벌어지는 동계철거 강제철거로 철거민의 생존권이 길바닥에 내몰려 처지고 있다.

21일 오전 7시경 노원구 상계 3-1 재개발지역에서는 인덕동역(주) 소속 철거용역 광패 50여 명이 동원돼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상계 지역에는 2세대만이 남아있는데 이날 철거로 이 지역 위원장 문연임(45) 씨의 집은 흔적이 없어지고, 세 자매는 잠옷바람에 거리로 쫓겨나야 했다.

특히 문연임 씨는 지난 5월2일부터 수배를 당해 현재까지 철거지역을 전전하며 다니고 있다. 문씨는 “여자 몸으로 5개월이 넘게 바깥 생활을 해 왔는데, 그 어려움은 말로 다 못한다. 문민정부에서 이렇게 국민을 무자비하게 짓밟을 수 있느냐”며 그저 착잡할 뿐이라고 말했다.

6개월째 수배생활

19, 20일 연달아 서대문구 현저동 재개발사업지구에는 입산동역(주) 소속 철거용역 광패 50여 명이 들이닥쳐 13세대가 살고 있던 가수용시설을 강제철거했다. 현재 80세 노인에서부터 컷 먹이까지 주민 50여 명은 부서진 가수용시설 한 곳을 치위 추위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입자대책위 위원장 김순애(56) 씨는 “서대문구청장과 합의해 설치한 가수용시설을 철거하고 모델하우스로 지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옮겨가라고 한다”며 “주차장은 차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43세대가 지하주차장에서 어떻게 1년을 넘게 사겠느냐”며 지상건물

을 지어주기까지는 꿈쩍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수용시설 절대 안돼

한편 서대문구청 주택개발과 서용순(34) 계장은 “세입자에 대해선 가수용시설을 줄 수 없으나 주민들의 요청에 못이겨 임시로 만든 것이다. 또한 지하주차장이라고 하지만 반지하이고 이미 43세대중 30세대가 들어가 있다”며 다른 가수용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배 4동 또 철거

또한 9개월째 대치상태에 있는 방배4동 주택조합사업 지역에도, 19일 아침 8시30분부터 거산동역(주) 소속 철거용역 광패 5백여 명과 포크레인 6대가 동원되어 주민과의 마찰속에 공가(빈 집)를 철거했다. 현재 12명이 남아 이곳을 지키고 있는데, 이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철거반원에 대비해 야간에도 근무를 서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 지역 외에도 금오 8구역, 봉천5동, 전농3동 지역등이 철거 위협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전국철거민연합은 “하루도 쉬지 않고 전개되는 강제철거는 내년 대선을 앞둔 김영삼정권이 자신의 후계구도와 집권후기의 안전장치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할 민중운동진영을 싸늘이 하려는 것과 같은 꾀”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바로잡습니다.

11월 22일자 <인권하루소식> ‘송광영 열사 추모비’ 기사중 장학복지과장 성명을 ‘황상완’으로, 유가협 천막농성은 사건이 발생한 ‘이날’부터 시작되었음을 정정합니다.

장애인비하 발언 김현철씨 사과하라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씨가 장애인직능대표인 이성재 국회의원(국민회의, 보건복지위)을 가리켜 ‘절룩절룩하는 X’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진 뒤, 전국연합과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장대협)는 성명을 발표해 김 씨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이번 사건을 그냥 넘기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김 씨는 이성재 의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체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대협도 “김현철 씨는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자숙하라”고

촉구했다.

97년 여성수첩 판매

「한국 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가 매년 발행하는 ‘여성수첩’ 97년도판이 발행되었다. 여성수첩 판매 수익금은 여성의 전화 주사업비로 쓰인다. 가격은 7천 원. 문의: 260-2962

안기부예산 공개 촉구

전국연합은 22일 국방비와 안기부의 예산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국가예산의 20%를 넘는 국방비와 안기부 예산에 대해 철저히 심의하고, 국방부와 안기부는 최대한 성의를 다해 예산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설씨 지난 10월 중순 작고 간경화 앓아오다 옥중에서 간암 발병

서울대 사범대 지리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 86년 7월 일명 ‘진달래 사건’으로 구속된 이병설(59) 씨가 지난 10월13일 작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씨는 72년 일본 동경 도립대 유학당시 재일공작원 김향술 씨에 의해 포섭되어 서울로 돌아온 뒤, 서울대 재학생들을 포섭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민가협등은 “간첩행위를 하였다기 보다는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형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김향술 씨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진달래 사건으로 당시 12년 형을 선고받고, 95년 형을 감형받았으며, 올해 6월5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그의 갑작스런 출소는 올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검사를 받은 결과 암세포가 간과 폐까지 먼저 손쓸 수 없는 지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검사를 받은 뒤 안동교도소측은 대구교도소로 그를 이감시켰으며, 이감되자마자 출소한 것이다.

이 씨가 안동교도소에서 이감되기 직전까지 함께 생활을 했다가 지난 8일 출소한 마윤정(32·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 씨는 “구속당시 이선생님은 간경화를 앓아오고 있어 감옥 안에서도 꾸준히 체크하는 등 건강에 신경을 써왔다. 작년 봄 검사 때까지도 별달이 없었는데, 겨울을 지나면서 몸에 이상이 생긴 듯하다”고 말했다. 난방기구 하나없는 교도소의 겨울생활이 얼마나 재소자들에게는 혹독한 것인가를 실감하게 하는 이야기다. 출소된 문안인사를 드릴려던 차에 부음을 듣게 된 그는 “교도소 생활을 감당할 만큼 의지력이나 운동성향이 강하진 않았지만, 어질고 참 좋은 분”이라며 애석해 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

자료용자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제1회
인권영화제가
원주·청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매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추모비 훼손 사건 책임자 고발

경원대 김원섭 총장 25일 고발장 접수

경원대 김원섭 총장이 송광영 열사의 추모비 훼손과 관련하여 사건의 책임자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시켰다. 25일 오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박정기, 전국유가협) 회원 등 10여명은 김 총장을 만나 추모비 사건에 대한 고발장

를 가진 장성환(대한광학해고자, 전해투 집행위원장) 씨 등은 집회를 마친 뒤, 구본무 LG그룹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건물안으로 들어갔다. 직원들에게 저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단만이라도 회장과 만나게 해달라"고 제안했으나, 곧바로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들에 의해 전원 연행됐다. 연행자 가운데에는 송재영 안양 노동상담소 소장도 포함되었으며, 연행자들은 48시간만인 25일 오후 3시경 풀려났다.

를 가진 장성환(대한광학해고자, 전해투 집행위원장) 씨 등은 집회를 마친 뒤, 구본무 LG그룹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건물안으로 들어갔다. 직원들에게 저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단만이라도 회장과 만나게 해달라"고 제안했으나, 곧바로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들에 의해 전원 연행됐다. 연행자 가운데에는 송재영 안양 노동상담소 소장도 포함되었으며, 연행자들은 48시간만인 25일 오후 3시경 풀려났다.

세계 성폭력 추방 주간인 유래

11월25일부터 12월10일은 세계성폭력추방주간이다. 세계 성폭력 추방의 날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세 자매 파트리아, 미네르바, 마리아가 독재에 항거하다 살해당한 것을 기념하여 81년 제정되었다. 미네르바의 미모에 반한 독재자 트루히오는 그녀에게 접근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미라발가의 모든 재산을 몰수했다. 49년 6월14일은 독재자 트루히오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봉기가 일어났던 날인데, 59년 6월14일 미네르바는 후에 그녀의 남편이 된 타바레스 변호사와 함께 반독재 그룹을 조직하고 활동을 벌인다. 그 뒤 세 자매와 그 남편들은 항상 투옥되거나 연금상태에 처해졌는데, 60년 11월25일 세 자매는 같은 감옥에 있는 남편들을 면회하러 접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끌려내려 곤봉으로 맞아 피살된다.

이들 세 자매의 죽음을 기념하여 81년 라틴 아메리카 여성들이 가진 모임에서 11월25일을 '세계 성폭력 추방의 날'로 정하고 지켜왔다. 그러다가 91년 성폭력 추방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 각국의 여성운동가들이 모여 미국 뉴저지주의 여성국제지도체센터에서 '여성, 폭력, 그리고 인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11월25일부터 12월10일까지 16일간을 성폭력추방주간으로 하여 전세계에 확산시키기로 결의한다.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캠페인을 벌이기로 하는데, 11월25일 세계 성폭력 추방의 날을 시발로 해서 12월4일은 89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4명의 여대생이 아무 이유도 없이 여자라는 이유로 한 남자에게 의해 집단살해된 날이며, 12월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기 때문이다(여성의 전화 <베를>지에서).

국내에서도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에서 12월3일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및 대책' 토론회 개최를 비롯해 각종행사가 마련되고 있다.

LG면담요청자 전원 연행

해고자 복직문제를 놓고 LG그룹에 면담을 요청하던 전해투 해고노동자 등 18명이 경찰에 연행된 뒤, 이들 LG그룹 본사에서 집회

를 가진 장성환(대한광학해고자, 전해투 집행위원장) 씨 등은 집회를 마친 뒤, 구본무 LG그룹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건물안으로 들어갔다. 직원들에게 저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단만이라도 회장과 만나게 해달라"고 제안했으나, 곧바로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들에 의해 전원 연행됐다. 연행자 가운데에는 송재영 안양 노동상담소 소장도 포함되었으며, 연행자들은 48시간만인 25일 오후 3시경 풀려났다.

민주언론상 특별상 수상!
올해로 창간 3주년을 맞은 <인권하루소식>이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수여하는 「제6회 민주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더욱 충실히 인권현장의 소식을 알려 나가겠습니다.
*제6회 민주언론상 시상식은 26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입니다.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각국서 '진관스님 석방' 서명운동 홍콩 ACPP, 김 대통령에게 항의편지

홍콩의 인권단체 Asian Center for the Progress of Peoples(ACPP)는 지난 20일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 인권위 공동의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ACPP는 각국 인권·사회단체들에게 "김영삼 대통령, 안우만 법무부장관, 박일룡 경찰청장, 각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항의편지를 보내자"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핫라인 아시아(Hotline-Asia)'라는 인권옹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진 각종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항의편지를 보내기운동 등을 벌여왔다.

수상자 추천을 받는다. 사회운동, 학술, 문화, 예술 등 각 분야 단체나 개인 중 늦봄의 통일상을 계속하여 얼마나 헌신적 활동으로 통일운동에 기여했는가 하는 점이 심사 평가기준이다. 마감은 12월 20일까지. 문의: 745-5872

공연 <교실이데아> 한강, 12월5일부터

극단 한강은 오는 12월 5일부터 29일까지 북촌창우 소극장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기획으로, 학생들의 인권문제를 다룬 '교실이데아'를 공연한다. 어느 한 고등학교 창고에서 2학년 담임교사의 변사체가 발견되는 것으로 이 공연은 시작된다. 이 연극은 죽은 담임교사와 학생간의 갈등, 학교와 학생간의 범인색출을 위해 벌이는 슬래깅기를 통해 감옥과 다름없는 교육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공연문의:762-6036

늦봄통일상 추천 문익환목사 기념사업회

「문익환목사 기념사업회」 늦봄 통일상운영위원회(위원장 한승헌)는 늦봄 문익환 목사의 3주기 추모식을 맞아 제2회 늦봄 통일상

주요공판안내

- 11월26일(화) 이철우, 국보법, 오후4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 11월27일(수) 김건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박병철 김미경,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양규현, 제3차개입금지등, 오후1시, 4단독, 524호, 속행 서형준, 국보법, 오후4시, 4단독, 524호, 속행
- 11월28일(목) 정수일, 국보법(간첩),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이명박의 3, 선거법위반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최익환, 국보법, 오전10시, 8단독, 522호, 선고
- 11월29일(금) 김재규,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선고 강순정,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선고 여승구,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윤용배,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오후2시, 10단독, 525호, 속행 -이상 서울지법 형사부

주간/인권/호/름 (96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18일>(월) 정부, 내년부터 영양사·산업보건의·고용안전관리자 등 13개 직종의 의무고용제 폐지키로/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제6회 민주언론상 수상자로 <한겨레> 여론채널부와 기독교방송 '시사자키' 제작진을, 특별상 수상자로 <인권하루소식> 선정/정부 국무회의 열어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송법 제정안, 형법 개정안 등 17개 안전 의결/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정부의 금융기관 고용조정제도 도입에 반대해 총파업 예정/부산시 영도구에 사는 이아무개(13·중학 2년 중퇴) 양 집 화장실 변기에 갖태어난 여아 버려

<19일>(화) 대법원, 내년 1월부터 영장 실질심사 시행/민주노총 3백 34개 산하 노조가 실시한 정의발생 결의를 모아 노동부에 일괄 신고키로/연세대, 한총련 사태로 입은 재산피해 청구소송 위해, 한총련 사태 관련자 명단요구 공문 경찰청장 앞으로 발송/외국인노동자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외국인현직 송출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의 검은 돈 거래 있다는 의혹 있다며 관계당국의 수사 촉구/박정수 씨 등 시화호 인근 어민 10명,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시화호 무단방류금지 가처분신청 수원지법에 제출/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백여 명 노동악법 철폐 및 개악저지 촉구대회

<20일>(수) 보라매병원 노인전문 병동과 장애인 치아질환자 병동 개원/전국 의사들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항의표시로 오후 한시적 휴진에 돌입/한국경영자총협회,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포함된 간접차별금지 및 성희롱금지 규정 삭제 정부와 국회에 요구/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강구 부장판사), 승진 최아무개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선천성 질환에 따른 돌연사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정부의 전문직종 의무고용제 폐지와 직종의무고용비를 완화방침에 대해 해당 직종종사자들이 정부방침 철회요구/한국자유총연맹 자유공론사가 발행하는 <자유공론> 11월호 '사법부가 한총련을 키웠다'는 제목의 시론 실어/프랑스 정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및 학대행위 처벌법 대폭 강화/똥손 그룹 직원들, 대우의 똥손 멀티미디어 인수반대 대규모 시위

<21일>(목) 정부, 한총련 시위현장인 종합관 보존 위해 연세대가 새로 짓기로한 강의동 신축비 지원을 위해 77억원 예비비 지급키로/한총련의 연세대 시위 때 경찰에 연행된 불구속 기소된 여대생 7명 농성진압·연행과정에서 성추행했다며 박일룡 경찰청장등 성추행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수원지검 특수부, 집단농성중인 엄정노동자들을 강제해산한 뒤 업체로부터 5백만원의 받아 제기 혐의로 강남경찰서 정보과장 백희영(55) 경정 구속/국민회의, 부정 부패방지법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22일>(금) 침각장애인 운전면허 학과 시험 크게 개선
<24일>(일) 한국노총,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생존권 사수및 노동악법 철폐 결의대회' 열어

제1회
인권영화제가
원주·청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현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재진 판사)가 지난 12일 한백렬·이종 씨 등 출소장기수 18명이 구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으며 국가를 상대로 낸 항소를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이 판결은 지난 91년 한 씨 등 29명이 제기한 사회안전법에 관한 손배소송이 5년만인 95년 11월9일 기각된 뒤 곧바로 이뤄진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다.

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예방조치로 헌법상의 권리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춰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힌 바 있다.

사회안전법 위헌 소지있어도 고의로 볼 수 없다

보안관찰처분, 자유민주주의 수호위한 조치

재판부는 "증인 윤회보 씨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95년 11월 당시 서울지법 민사 제41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보안관찰처분

서울고법 제9민사부는 "사회안전법 중 원고들 주장의 조항들이 원고들의 주장(죄형법정주의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침해-편집자주)과 같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회의 입법행위와 법 조항에 따라 이뤄진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밝힌 기각 사유에서 "국회의 입법행위는 입법내용이 헌법규정의 일의적(가장 중요한 의미)을 말함-편집자주인 문언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헌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굳이 이를 입법한 것과는 다른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구 사회안전법의 내용이 헌법의 일의적 문헌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회의 사회안전법 제정행위가 국가배상법상 위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한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재판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할 수 없으므로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안전법에 따라 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사회안전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공방이 헌법재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들은 75년 사회안전법 제정이전 이미 만기출소했거나 형만기로 출소예정에 있었다. 그러나 사회안전법 제정으로 다시 청구보안감호소에 수용되어, 2년마다 검사의 판단에 따라 새로 보안감호처분을 받아야 했으며, 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될 때까지 10-16년간의 보안처분을 받았다. 사회안전법은 89년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되었다.

"진관 스님 석방하라" 민변, 성명발표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검찰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을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5일간 불법구금했다가 재구속한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명백한 진상규명 및 진관 스님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민변은 2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이번 불법구금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민변은 "검찰은 5일간의 불법구금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적절한 피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즉시 구속을 취소하여 진관스님을 석방하고 5일간의 불법구금에 대한 진상규명 및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장기수들 만기출소 후 다시 청구보안감호소에 수감

한편 소송을 제기한 장기

인천구치소 이감 때까지 수술 미뤄 시국사범 이동주 씨, 실명위기

1년 가까이 눈의 통증을 호소해 오던 한 시국사범이 병세가 악화돼 실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군산교도소측에서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고 현재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동주(25·인천대 법학과) 씨는 '우측눈 홍채낭종'이라는 병명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이 씨의 부상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씨는 구속되기 전인 지난해 8월 눈 부상으로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병원에서는 꾸준히 치료만 받으면 별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하나, 구속된 뒤 조사와 수감생활을 거치면서 이 씨의 눈 상태는 악화된 것으로 전한다.

러는 듯, 차일피일 미뤄오다 10월 29일 들인 군산교도소로 이감시켰다"고 말했다. 현재 군산교도소측에서는 "수술비 2-3백만원을 영치시켜야 수술을 시켜주겠다"는 입장을 가족에게 전했으며, 다음주초 이원우 씨가 군산에 내려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변호인이 병보석과 구속집행정지를 각각 신청하기도 했으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하기도 했다<관련기사 우측하단>.

교육자치제도 개선방향 참여연대 토론회

1년전부터 통증 호소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 까지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이 씨는 수차례 눈의 통증을 호소했으며, 그 가족들의 계속된 외진 요청 끝에 그해 12월 인천 김안파의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이 씨에게는 "각막혼탁과 수정체 파열로 시력저하가 예상되며, 수정체 파열 상태가 진행될 시 녹내장이 올 수 있다. 대학병원에서 정밀한 진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또한 올해 8월 인천 길병원에서는 이 씨에게 "상기 환자는 홍채낭종 의증으로 진단"고 결론지었다. 또한 절제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지만, 구치소측은 수술을 계속 미뤘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보석·구속집행정지 기각
이원우(55·이 씨의 아버지) 씨는 "구치소측은 교도소로 이감될 때까지 기다리

재벌해체 촉구 민주노총, 항의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백여 명은 26일 낮 12시 경총 앞에서 노동법 개악을 기도하는 재벌해체 촉구대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경총이 노동법 개정 및 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 경고를 '불법파업' 운운하며, 해당 노조에 대한 징계와 고발,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결의하고 나선 데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와함께 최근 복수노조 허용 반대,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도입 등 경총의 반개혁적 노동법 개정 입장을 철저히 규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벌의 뇌물제공·문어발 확장 등을 근절하고 기술연구개발에 힘쓸 것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12월 4일 정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전국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철야농성 돌입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정부가 노동법 개정에서 교원의 단결권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보도된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27일부터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들의 철야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73.3%와 교사들의 90.3% 등 절대다수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찬성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교원노조 불가'만을 고집하는 것은 개혁의 허구성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라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전교조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교원의 노동권 보장을 포함한 노동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한의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전 노동계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교도소 처우, 권력자에게만 관대 재소자 외부병원 진료권 보장 절실

재소자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 재소자 의료실태 역시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재소자 의료실태의 문제점은 사실적인 의료인력의 부족 △의료비 부담 △의료인력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확충문제는 재소자 의료와 관련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올 9월 현재 전국 42개의 교정시설엔 5만9천여 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는데, 이들을 위해 배치된 의사는 60명으로 1천명당 1명꼴로 나타났다. 약사는 2명, 간호사는 60명, 공중보건원은 28명 수준인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수감시설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일 경우, 사회내 치료시설로 이송해 진료받도록 하는 외부병원 진료권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 3월 전두환 씨의 병원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수형자 치료비의 부담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는 동시에 권력층 인사들에겐 관대하고 공안사범에겐 가혹한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까지 드러냈다. 지난 10월 사망한 이병설(86년 '진달래 사건'으로 구속) 씨는 이미 암세포가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퍼진 상황에서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또, 태아를 사산한 고예순 씨나 이동주 씨의 경우도 전두환 씨나 25일 풀려난 장학로 씨에 비교할 때, 엄청난 인권유린의 피해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제1회
인권영화제가
수원·청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최근 안기부법을 개정하려는 기도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논의와 인권'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토론회에는 안기부와 각 정당이 초청돼 활발한 찬반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안기부와 여야 3당이 모두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결국 법 개정론자들이 빠진 상황에서 이날 토론회장은 안기부법 개악의 부당성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국내외정세 개정 근거 안돼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박연철 변호사는 "문민정부 들어 안기부법이 개정된 것은 불법수사에 의한 인권유린과 정보정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혁의 일환이었다"며 "이를 다시 원상회복시키려는 것은 개혁의지가 반전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안기부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국내외 정세를 논거로 안기부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는데, 그는 "안기부법 개정론자들은 '세계적인 탈냉전 조류가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북한은 대남적화에만 집착하는 반민주적 독재정권이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남북 평화와 단결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화해와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4년 이후 인권유린 여전

한편으로 94년 법개정 후에도 안기부의 정치개입과 인권유린이 여전한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부당성이 지적되고 있다. 확인성 전 국연합 집행위원장은 "94년 안기부에서 지자체선거 연기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사건이나 긴급구속장도 없이 대학교수 등 4명을 연행한 뒤, 이들을 소위 '김일성장학생'이라고 언론에 허위로 알린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현행법 하에서도 권력남용과 불법수사관행이 여전한데, 이를 환원하지는 것은 개악하는 의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과)는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지금, 안기부는 권한 확대의 대상이 아니라 과거청산의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 교수는 "국제인권법 등 인류 보편적 관점에 비춰 볼 때 사상·이념을 이유로 한 처벌은 사라져야 마땅한 것이나, 안기부는 수사권을 확대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

화하려 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수사권 회귀, 이유없다

안기부법 개정론은 한층 더한 집회와 간수 사건,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등장했다. 안기부는 '94년 개정된 안기부법이 안기부의 수사권을 박탈하였기 때문에 대공방어력이 취약하게 되었다'며, '안기부가 수사권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부측은 그 논거로서 94년 법개정 이후 △수사의 일괄성이 없다 △직접 증거가 없으면 수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 △불고지 수사

권 폐지로 대공첩보수집에 지장을 받고 있다 △검·경의 대공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 △변호인이 접견권 남발로 수사활동을 방해한다 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연철 변호사는 △간수를 10여년간 검거 못한 것은 국보법 7조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기부의 판단력 부족 탓이었고 △안기부는 국보법상의 모든 수사권이 박탈된 것이 아니라 단 두 가지 규정만 수사권에서 배제된 것이며 △검·경의 미흡한 점은 조직적으로 보강해야 할 문제이지 수사권을 안기부에 회귀시켜야 할 이유가 못되고 △안기부는 피의자 접견시간을 하루 한 차례 1-20분 정도로 제약하고 있으면서 수사에 방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안기부측 논거를 반박했다.

클린턴, 한국 노동법 개정 촉구 "OECD 관행과 ILO 규범에 못 미쳐"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관행과 관련, 복수노조 금지·제3자 개입 금지·공무원과 교사 노조 금지 등의 개정을 촉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민주노총이 11월 26일 경제개발협력기구 노동조합 자문위원회(OECD-TUAC)와 미국교원협의회로부터 입수한, 8월 20일자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교원협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밝혀졌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교원협의회(NEA)의 키스 게이저(Keith Geiger, 당시 위원장) 씨에게 보낸 서신에서 "한국의 노동법과 관행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다른 회원국의 노동법과 관행, 국제노동기구의 규범과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다는 귀 단체의 우려에 같이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법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복수 노조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그리고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행정당국의 공권력 행사가 과하다는 점이다"며 "한국의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세계의 인권①- 미래를 짓밟는 아동노동

1억~2억명 어린이-매춘과 노동에 죽어간다

나는 팔팔 때/눈물 흘리지 않는/삼점의 물건이 아니에요/나는 어린아이예요/내가 팔린다면/내 생애 끝까지/눈물 흘려야 할/어린아이예요/난 삶의 이유를/갖고 있다고요/그러니, 제발 나를/알아 주세요.

타일랜드에서 섹스산업에 종사하는 한 여자 어린이가 쓴 이 시는 착취받고 학대받는 모든 아동의 감정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19세기 공장의 뒷골목에서나 있었던 일로 아동노동을 생각하지만 아동노동은 분명 현재의 일이다.

무엇이 아동노동인가?

국제노동기구(ILO)의 138호 조약에 따르면, 아주 제한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곤 15세 미만의 아동이 정기적으로 행하는 노동을 아동노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아동노동은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저해하는 유해한 환경속에서, 아주 오랜시간 아주 험값이나 무임금으로 이루어지며, 때론 부모의 빚에 팔려 강제노예 노동의 형태까지 띠고 있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아동노동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가난이 아이들을 일터로 내몰고 있다. 특히, 성인의 실업률이 매우 높고 어떠한 사회보장제도도 없는 지역의 가족은 아이들을 일하게끔 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는 더욱 치명적이다. 건강과 교육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 아동노동은 탈출구가 없는 빈곤의 악순환을 낳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은 외채위기와 함께 각종 사회보장 혜택과 프로그램의 후퇴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얼마나 일하고 있는가?

당사국과 고용주가 아주 민감해 하며 감추고 싶어하므로 아동노동관련 통계는 빈약할 수 밖에 없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추정으로는 20세기말 인 지금 1억에 이르는 아동이 지구 곳곳의 작업장에서 착취당하고 있으며, 10-14세 아동이 그중 18%이상을 차지한다. 또다른 추정으로는 2억에 이르는 15세 미만 아동이 노동하고 있

으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국제아동기금(UNICEF),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등의 조사를 보면, 아동노동이 전세계에 걸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에선 10-14세의 5백70만 아동이 의류공장이나 매춘산업에, 타일랜드에서는 2만-3만의 아동이 매춘산업에, 네팔에선 3백만 아동이 주요 수출품인 카펫 제조에, 파키스탄의 1천만 아동이 벽돌공장과 농장에서, 필리핀에선 7백만이 넘는 아동이 매춘과 광산, 음식가공업에, 인도에선 1천7백만이 화약, 카펫, 실크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거리아동의 대명사인 남미를 보자. 칠레에 1백만 이상, 콜롬비아에 80만, 도미니카공화국에 20만, 브라질에 2백만, 에쿠아도르에선 14세 미만 아동의 40%가 일하고 있다. 아프리카 전역에선 14세 미만 아동의 1/4이 일하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0년에만 4만건에 이르는 아동노동학대 사례가 보고되었다. 아동매춘의 주요 소비자인 유럽에선 자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르는 아동유린에 대한 경종이 울리고 있다.

낙타경주에 어린이는 죽고...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아동의 고사리손을 통해 코푼은 돈을 착취하고 있는 현실은 참혹하기만 하다. 혹독한 구타는 말할 것 없고, 불충분한 영양과 장시간 노동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다리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거나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 성인이 될 시기에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있다. 감금상태로 일하다가 탈출하면 지역경찰이 붙잡아 공장으로 되돌려 보낸다. 카펫을 짜다가 손가락을 잘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때 받는 치료란 성냥에 불을 황을 상처부위에 쑤셔넣고 불을 지르는 것이다. 피를 멎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그 목적은 치료가 아니라 소중한(?) 카펫에 피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장난감은 누가 가지고 노는 물건인가? 93년, 방콕의 한 장난감 공장에서 불이 나서 1백74명의 아동이 죽었다. 대부분이 13살 정도의 아이들이

었다. 이 공장은 미국과 유럽시장에 내다 파는 장난감을 만들어왔다. 파키스탄에서 걸프지역으로 수출되는 어린이들의 일부가 낙타경주에 이용된다. 낙타의 목부분에 조그만 아이를 형겼으로 매단다. 경주가 시작되면 아이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어린아이가 크게 울수록 낙타는 더 빠르게 달린다. 경주에 이기려고 더 작고 가벼운 아이를 매달기 위해서 밥을 잘 먹이지 않고, 떨어져 죽는 경우는 안중에도 없다. 매춘관광에 동원된 아이들의 연약한 살속으로 에이즈가 파고 들어가는 데에선 할말이 없다. 주요 아동매춘지의 호텔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4-18세 사이의 여아의 절반이 보건자료 밝혀졌다. 이런 일들이 결코 특수한 예가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라는데 아동노동의 비극이 있다.

성인은 일터에서, 아동은 학교에서 고용주들은 아동들 '민첩한' 손을 가진 '특별한' 노동자라 간주하지만, 아동들을 착취하는 진짜 이유는 무기력한 아동들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동노동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협상을 할 수 있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뿐만 아니라 여타 형태의 기본적인 인권침해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동노동을 경제발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일로 생각한다. 진정한 경제발전은 성인이 일터에서 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야 가능한 것이다. 아동노동을 통해 극히 소수가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전체사회는 빈곤과 미발전의 악순환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의 미래를 위한 잘 훈련되고 교육받은 노동력을, 가장 소중한 미래인 아동들을 희생함으로써 말이다.

매춘관광에 동원된
아이들의 연약한 살속으로
에이즈가 파고 들어간다.
이들중 절반이
에이즈 보건자다.

제1회
인권영화제가
수원·인천·청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미군범죄근절 금요시위 1백회

한미행협 개정 여론화...매주 용산미군기지 앞 집회

「미군범죄 근절과 한미 행정협정 전면개정을 위한 금요시위」가 29일로서 1백회를 맞았다.

94년 10월 「미군헌병대의 세 모녀 폭행 사건」을 계기로 그해 12월 28일부터 시작된 금요시위는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 미군범죄근절본부) 소속 28개 회원단체에 의해 매주 금요일 낮 12시에 어김없이 용산 미군기지 1호문 앞에서 진행되어 왔다.

1백회에 이르는 동안 금요시위는 총무로 지하철 단동사건, 이기순 씨 살해 사건 등 미군범죄 문제에서부

터 공여지 및 미군기지 반환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제기와 여론화를 실천하는 장이 되어 왔다.

금요시위는 경찰과의 법정투쟁까지 벌였는데, 95년 5월 서울고법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처분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9일 열린 1백회 금요시위는 연회구개 「맘판」의 풍물굿으로 시작되어, 남북화해를 상징하는 걸개그림 그리기 행사로 마무리됐다.

이날 집회에선 교도소내 미군채소자들의 수감상태가 폭로돼 참석자들의 분노를 샀다. 92년 민에전 사건으

로 천안교도소에 수감됐던 김경태(29) 씨에 따르면, 미군채소자들은 침대와 비디오, 컴퓨터, 기타 등이 마련된 독방에서 술 담배는 물론, 포르노잡지에 불법 비디오까지 들여와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교도관들은 상관을 모시듯 미군범죄자들을 「모시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씨는 밝혔다.

또 미군기지되찾기 전국공대위 준비모임이 녹색연합과 함께 전국 11개 미군기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

났다. 녹색연합의 이현철 간사는 "11개 지역의 수질은 기준치의 2배~5배까지 초과하고 있으며, 미군훈련용 각종 화약과 불발탄에 의해 토양이 산성화되었다"고 보고했다.

오늘 시국관련 행사 잇따라 집회·문화공연·토론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오늘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안기부법 집시법 개악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가진다. 이어 4시부터는 명동성당 입구에서 「참민주의 햇살을 찾아서」라는 문화공연도 개최한다.

오후 5시 기독교회관 2층에서는 민교협, 민운단법국민대책위 등이 공동주최하는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시국토론회」가 개최된다.

전농 이수금의장 국회 앞 단식농성

추곡수매가 3%인상안 철회 요구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수금 의장이 정부여당의 살농정책에 항의하며 길거리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28일부터 국회 앞 인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수금 의장은 정부여당의 추곡수매가 3% 인상안 철회와 12.3% 인상, 통합의료보험제도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농성 첫날인 28일 오후 5시30분경 영등포 경찰서 수사관들이 연행사유를 밝히지 않은채 이 의장을 불법연행해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전농 관계

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아 연행 4시간만인 9시30분경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의 벌금고지서를 발부하고 이 의장을 풀어주었다.

현재 전국 도단위 연맹에서는 12월 13일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정부의 농성파탄을 심판하겠다는 계획 아래 산하 농민회에 대한 선전전을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농림수산위 소속 야당의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정부여당의 3% 인상안은 이래저래 벽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전우섭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상임대표

-금요시위 1백회를 통한 성과는 무엇인가
=과거엔 말도 꺼내기 어려웠던 한미행협이나 미군범죄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침없이 나올 수 있게 됐다. 또 지역별로 미군문제에 대응하는 소모임이 생겨나는 등 점차적으로 국민의식도 달라지고 있다. 미군이 우리 눈치를 보게했다는 정도 달라진 모습이다.

-1백회까지 오는 동안 어려웠던 점은
=초창기에 경찰이 집회를 불허해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 이기순 씨 사건 때는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범죄근절과 한미관계 개선을 위해서 시급한 문제는
=한미행협을 전면 개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또 각종 미군관련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시민대표와 미군측 대표로 구성되는 상설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앞으로 금요시위의 활동은
=금요시위는 단순히 성토회가 아니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현재는 미군기지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미해결된 이기순씨 사건 처리의 부당성 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고 류타원 데레사의 아버지 류경렬 교사의 편지 >

딸을 먼저 보낸 아빠가...

이 편지는 지난 10일 노동자대회를 마치고 경남 진주 등지로 향하던 전세버스의 사고로 딸을 잃고 자신은 백여바늘을 꿰뚫어 채 투병중인 류교사가 쓴 글입니다. 지면 관계상 중간에 생략하였습니다. <편집자주>

입원한 지 꼭 2주일이 되는 일요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치료가 없는 나를 타서 딸의 무덤에 다녀 왔습니다. 사고 때 다친 저의 머리상처 때문에 동료들과 아내는 딸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답니다. 박문곤 선생님의 죽음 소식과 전교조장으로 장례가 치러진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고는 아내더러 나 대신 참여해서 명복을 빌어 달라고 부탁하고는 혼자 있는 병실에서 박 선생님의 명복을 빌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선생님의 장례식을 마친 이후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저의 문병을 다녀가시며, 용기 잃지 말고 끈기있게 견디어야 한다가에 "그러겠다"고 말씀들이 저의 딸 타원이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었음을 미처 몰랐습니다.

다음날 절대안정이 중요함과 놀라지 않겠다는 몇 번씩이나 다짐했는데, 그 말씀들이 저의 딸 타원이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었음을 미처 몰랐습니다. 다음날 절대안정이 중요함과 놀라지 않겠다는 몇 번씩이나 다짐했는데, 그 말씀들이 저의 딸 타원이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었음을 미처 몰랐습니다.

사고당한 전교조 교사의 가족이 희망을!

<후원구좌>
국민은행 373-01-0014-207 대책위
농협 086-01-061538 정책대대책위
문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02-675-6181)

1996년 11월 24일 일요일
제일병원에서 류경렬 드림

현역소령 취임 해명하라 새정치국민회의 성명

경원대 송광영 열사 추모비 탈취사건에 국군 정보사 소령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후 새정치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지난 27일 성명을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성명에서 최봉성 학생과장이 특수부대 영관장교의 신분을 유지한 채 학내사찰과 추모비 사건에 개입한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충격적인 사태」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그는 국방부에 「최봉성 소령의 경원대 취임경위와 전역 과정을 해명할 것」과 교육부에 「학생과장 최봉성 씨가 특수부대 출신 하사관 5명을 경원대 학생처 직원으로 특채한 사실과 관련, 경원대측이 학생단압을 의도한 것이 아닌지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정대변인은 성명은 경원대 추모비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첫 반응이었다.

한편, 유가협 박정기 회장 등은 최봉성 소령의 학생과장 취임과 추모비사건 개입 등에 대한 국방부와 교육부의 입장 여하에 따라 다음 주 초 청와대 앞에서 항의시위를 할 계획이다.

출소장기수 소송비용 없어 상고 어려움

지난 12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당한 출소장기수들이 소송비용이 없어 대법원 상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출소장기수 대부분이 60세를 넘긴 고령자인데다 뚜렷한 직장도 없어 경제적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며, 몇 사람 정도는 비용 마련이 어려워 상고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변의 도움이 요청된다.

이들은 12월 9일까지 상고를 마쳐야 하는데, 이 때 개인당 부담해야 하는 인지대는 45만원이며, 18명 전원이 상고할 경우, 8백10만원의 비용이 들게 된다.

<인권하루소식> 96년 11월분 총목차(757-778호)

호	월일	면	기사제목
757	11/1	1	성희롱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 서광 프라자 여직원 7명/한국여성의 전화, 자녀 성교육 강좌 개설/미야7동 생가 철거, 주민등 76명 전원연행
		2	전자주민카드 철회!, 시민·사회단체 토론회/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⑤ <하비 밀크의 시대>, <미국의 꿈>, <이방의 여인들>
758	11/2	1	집회부터 일일주점까지 모두 안돼!, 한총련 빌미 기본권 통제 제한 선이 없다
		2	AI, 공안단압·안기부 수사권 확대 반대 고문방지위원회에 호소/안기부·집시법 개악 저지, 전국연합 오늘 결의대회/전노련, 가혹수사제기/그들이 무장간첩일까?-PC통신 천리안 '희망터'에 게재한 윤석진씨 글
759	11/5	1	치졸한 정부, 인권영화제 방해공작-이화여대, 정부 압력에 곤혹/주요공판안내
		2	사람 모인 곳이면 공권력 투입, 문화행사 <당당하게>도 원천봉쇄/안기부 수사권 부활 반대, 정의와 인권위원회/주간인권호름(96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60	11/6	1	울 상반기 경전완장에 1백20명 발생, 경전완장에 예방대책 공청회/뽕이 비리 사건, 사회보장 확대 계기로
		2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소개⑥ <이발>, <누가 빈센트 친을 죽였는가>, <수단-상처입은 나라>/<자료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비판
761	11/7	1	엠네스티, 진관스님 석방운동 나서, "국보법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라"/공권력 성추행, 용납할 수 없는 일-한총련비대위,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교원 노동권 보장 촉구, 정혜숙위원장 단식농성/진보정치연합 성명, "인권영화제 보장하라"
		2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김주환(미국 펜실버니아 대학 박사과정)
762	11/8	1	탐골공원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복지, 소득보장 가장 시급/후꼬꾸, 무더기 정계-핵심조합원 작업도 안 시켜
		2	가정폭력 남편 살해...집행유예, 13년간 상습 구타당하다 목 졸라/고난함께, 12일부터 5주간 제2회 인권교실 열려/경총, 정·관계에 뇌물, 노동악법 관철 의도/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⑦ <암살학교>, <지하의 민중>/행사와 동정
763	11/9	1	문민정부의 언론·출판 탄압 실상, 38종 금서목록 46개 좌경출판사 분류 확인/<인터뷰>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관객들이 사전심의 철폐운동 지지해줄 것"
		2	제2회 인권영화제를 기억하며...지방영화제 22일부터 16개 도시 순회상영/허인희 사건 '검찰 조작극', 서울지법 형사9단독 무죄선고/전국유가협 정기총회, 박정기씨 회장 선출
		3	<자료> 금서목록, 좌경이념도서 또는 북한원전을 펴낸 출판사 리스트/대한불교조계종, 진관스님 석방 촉구/인권간행물
764	11/12	1	동티모르 산타크루즈 대학살 5주년-말레이시아 정부, 국제회의 참가자 전원추방. 국내 동티모르 연대모임 발족/11월12일 산타크루즈 대학살을 아십니까?
		2	서초경찰서, 단속 항의한 노점상에 공포탄 발사, 열흘간 노점상 7명 구속/전국연합 성명, 안기부 책임자 처벌 김동식 사건 진상추구/참여연대, 장애학생 수능 편의 요구/주간인권호름(96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765	11/13	1	조직사건 연행자에게 존중될 인권없다, 남총련 민족해방군 조작 주장...27명 불법연행/고문방지조약 보고서 심의, 차지훈 변호사등 출국
		2	해고자 죽이는 LG그룹...해고자 단식투쟁, 89년 이후 67명 해고, 한명도 복직 안돼/민변, 안기부법 개정 철회 촉구/미국 캘리포니아, 소수자 차별 법안 통과, 반대운동하던 대학생 23명 연행/주요공판안내
766	11/14	1	'한총련 실체' 제작경위등 정보공개 요청-민변, 안기부법 개정논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필요/민운 탄 대책위, 서초서 총기발사 규탄 성명/한국노총·여연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청원
		2	<자료> 민변 성명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민주노총 여론조사, 경제위기 주범은 정부/행사와 동정
767	11/15	1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전해투를 도움시다, 농성장 전세금 마련
		2	<한 특수강도 전과자의 한맺힌 호소> "청송감호소의 인권유린 조사해 달라"/청송보호감호소와 그 짝 사회보호법/민주노총, 노동법 개정 유보시 전국 총파업 돌입

<인권하루소식> 96년 11월분 총목차(757-778호)

호	월일	면	기사제목
768	11/16	1	대학생 연행 '영장 필요없다'-12일 새벽 경찰 침탈, 고려대생 38명 불법연행/말레이시아 정부, 동티모르인 4명등 12명 인도네시아에 넘겨, 항의서한 빔발/공직자 비리근절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전학련의장등 3명 국보법 위반 긴급구속
		2	4인 이하 사업장 55.4시간 노동,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 확대 시급/아동매춘·노예노동 증가추세-개도국 2억5천여 명, 아시아 61% 차지/인권간행물
769	11/19	1	남선물산 노동자 회사수 농성-정리해고 철회, 고용승계 요구/주요공판안내
		2	노동법 개정 재계 마음대로 안된다-민주노총, 노동부장관에 쟁의발생 신고/전국학생정치연합 성명,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라/주간인권호름(96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770	11/20	1	LG, 해고자 탄압에 다양한 전략-유령집회신고에 노부모까지 끌어들이어/광주교도소 양심수 단식농성, 민족해방군 조작에 항의/참여연대, 부패방지법 여야연담 제안
		2	굶주림과 영양실조에서 자유로울 권리-전세계 8억 이상의 사람들 영양실조 상태/연대 성추행 진압경찰 고소, 여연등 고발장 접수/민주노총 12월 총파업, 올바른 노동법 개정 촉구/<영화제 감상문> '지하의 민중'을 보고
771	11/21	1	시민 폭행치사 검찰 수사 지연-노병우씨 유족, 51일째 전대 병원 농성/시민연대, 정보통신검열 백서 발간/새 신분 확인제 필요-주민증, 프라이버시 침해/행사와 동정
		2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④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장 신용호-장애인들의 다리가 되고자 하는 장애인 활동가
772	11/22	1	송광영 추모비 61일만에 소재 파악-경원대 학생과장·장학복지과장 연행·조사중/경쟁력 이유로 산재방지, 민주노총 투쟁 불사/달력으로 만나는 민족민주열사, 97년도 민족민주열사 달력 판매
		2	성추행 피해 여학생 7명, 경찰청장 고소-여성·인권단체 대표도 고발장 제출/노동법 개정방향 비판, 전문가 의견 발표/안산 후꼬꾸, 합법집회 폭력으로 진압, 경찰은 수수방관/고소 여학생 증언 요지
773	11/23	1	정보사령부 현역장교 추모비 절취혐의-유가협, "배후조종자 색출, 총장등 사퇴" 주장/제99차 금요시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한총련 대학생 수사과정에서 고문당해-경찰, 투항의사 무시한 채 계속 진압
		2	잠옷바람으로 새벽 찬거리 내몰려-현저등, 상계등 등 동계철거 계속/장애인 비하 발언 김현철씨 사과하라/97년 여성수첩 판매/안기부예산 공개해야/이병실씨 지난 10월 중순 작고, 간경화 앓아오다 옥중에서 간암 발병
774	11/26	1	추모비 훼손 사건 책임자 고발, 경원대 김원섭 총장 25일 고발장 접수/LG 면담 요청자 전원 연행, 전해투 18명 이틀 감금/세계 성폭력 추방 주간의 유래
		2	각국서 '진관스님 석방' 서명운동-홍콩 ACPP, 김대통령에게 항의편지/늦봄통일상 추천, 문익환 목사기념사업회/공연 <교실의대아> 한강, 12월5일부터/주간인권호름(96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775	11/27	1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위헌성 여부 현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민변, "진관스님 석방하라" 성명 발표
		2	인천구치소 이감 때까지 수술 미뤄, 시국사범 이동주 씨 실명 위기/참여연대, 교육자치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민주노총, 재벌해체 촉구 항의집회/전교조, 철야농성 돌입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교도소 처우, 권력자에게만 관대-재소자 외부병원 진료권 절실
776	11/28	1	장소 불허, 방송중단 지방인권영화제 난항-일부 지역 경찰 등 압력으로 허가 번복/연노련, 통일인사 석방 촉구
		2	안산시 의회 장애인 시설 건립 부결, 지가 하락 우려 부동산 업자들의 방해 의혹/민주노총, 29일 구속결단식 갖기로, 총파업 초읽기/행사와 동정/사고당한 전교조 교사와 가족에 희망을!
777	11/29	1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 안기부는 불참/클린턴, 한국 노동법 개정 촉구 "OECD 관행과 ILO 규범에 못 미쳐"
		2	세계의 인권⑧ 미래를 짓밟는 아동노동; 1억~2억명 어린이, 매춘과 노동에 죽어간다
778	11/30	1	미군범죄근절 금요시위 1백회/<인터뷰>전우섭 미군범죄근절본부 대표/전농 이수금 의장 국회 앞 단식농성/시국관련 행사 잇따라
		2	말을 먼저 보낸 아비가 <고 류타원 어린이의 아버지 류경렬 교사의 편지>/경원대 현역소령 취임 해명하라, 새정치국민회의 성명/출소장기수 소송비용 없어 상고 어려움
		3·4	<인권하루소식> 96년 11월분 총목차(757호부터 778호까지)

인권하루소식

96년 12월

(제779호 - 제796호)

제1회
인권영화제가
대구·전주·인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노동법 개악 반대, 청원서 제출 교수, 변호사 87년 이후 최초 공동 거리시위

87년 6월항쟁 이후 처음으로 교수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거리시위를 벌였다.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 김상곤 등) 소속 교수와 변호사 30여 명은 2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뒷편 동화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역사를 거스르는 노동법 개악 반대'라고 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광화문 덕수재과 까지 거리시위를 벌였으며, 차편으로 여의도 LG빌딩 앞으로 이동한 뒤 국회의사당까지 행진을 벌였다. LG빌딩 앞에서 이들은 23일째 단식농성중인 LG해고자 농성장을 방문해 지지집회를

갖기도 했다.

고수·변호사 90명 청원 한편 교수와 변호사 등 노사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앞으로 각각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촉구문 및 청원서'를 접수시켰다. 이날 청원에 참여한 사람은 경제학, 법학 등을 전공하는 교수 61명과 변호사 29명 등이다.

전문가위원회는 국회 청원서에서 "현재 정부의 노동법 개정방향은 오로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만 경도되어 '개혁'이 실종되었고, 89년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 94년 노동부 자문기구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

가 마련한 건의안 보다는 후퇴하였다"고 비판했다.

전문가위원회는 "노동법 개정이 개혁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미를 가지려면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회복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밝힌 뒤, △복수노조금지 △제3자개입 금지 조항 등의 폐지 △파업기간 중 무임금 법률화 △쟁의기간중 대체근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제한 등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연합 '개악' 비판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1일 윤곽을 드러낸 정부의 개정안은 노개위의 공익위원안 보다는 한참 후퇴한 것"이며 "공무원의 단결권 배제,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도입, 근로자파견제 법제화 등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국연합은 "올바른 노사관계 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범민련 이적단체" 강순정씨 4년6월 선고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상의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되었던 범민련 남측본부 강순정(서울시연합 부의장)씨에게 4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11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전봉진 부장판사)는 "피고는 민간통일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민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등 여러가지 정황상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29일 구속되었던 범민련 부의장이던 강순정씨 등 범민련 구속자들이 28, 29일 형기 만료로 석방되었다.

과천시장 사건의혹 전국연합, 검찰 수사촉구

전국연합은 2일 과천시장이 성환씨의 구속사유를 둘러싸고 최근 녹지해제와 관련해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층의 압력메모가 발견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개입되었다는 메모가 발견되는 등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주요공판안내

□3일(화)

서미연(국보법 위반등) 오후2시, 3단독, 320호, 속행
김유대(군사기밀보호법위반) 오전11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4일(수)

홍성규·김문경(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이훈(특수공무집행방해등)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신건
정용철(업무방해등) 오후4시, 합의7부, 423호, 속행

□5일(목)

이승환·조성우·노홍식(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6일(금)

함운경(국보법위반) 오후4시, 10단독, 525호, 속행
이재만(출판물예의한명예훼손) 오후5시, 10단독, 525호, 속행
이석원(출판물예의한명예훼손) 오전11시, 5단독, 519호, 속행
이서취(국보법위반)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이상 서울지법 형사부

박용수 시인의 <겨레말 사전> 4권 연속 출간
<사랑, 그 짓곳은 이야기> 출판
축하모임

때: 96년 12월4일(수) 늦은 6-8시
곳: 서울대 동창회관 5층 강당(702-2233)
회비: 3만원
주최: 한글문화연구회(745-9618)

전주 인권영화제 암흑 속 진행 전북대측, 전기차단·교직원 1백명 동원

인권영화제가 서울에 이어 지방 15개 도시에서 차례차례 진행되고 있다. 이미 본지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영화제 개최에 진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는데, 1일 전주에서는 상영장소인 전북대학교(총장 장명수)측이 전기를 끊어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학교측은 개막 이틀전 '영화상영에 들어가면 전기를 끊어 버리겠다'는 입장을 총학생회측에 통보했으며, 영화제 개막일인 1일 오전부터 상영장소인 합동강당의 전원을 차단해 버렸다. 또한 학교측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교직원 1백여 명을 출근시켜 강당입구에서 관람객들의 출입을 봉쇄하기도 했다.

초청강연 취소 요구
주최측은 행사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주관을 포기하겠다"고 학교측에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일체의 강연이나 인사말없이 영화만 상영하라"는 학교측 요청에 따라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의 초청강연도 취소했다. 결국 이날 영화제는 촛불로 조명을 대신하고 석유난로를 옮겨와 관객들의 추위를 달래는 등 악조건 속에 진행됐으며, 예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두 작품의 상영이 취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국회의원·도지사등 후원
전주 인권영화제는 유종근 전북지사와 정동영 국회의원 등이 후원하는 범진보인 차원의 영화제로 준비되어 왔으나, 전북대측은 "의무단체의 행사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며 영화제 상영을 반대해 왔다. 이에 대

해 영화제 집행위측은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 안기부가 개입한 의혹도 짙다"고 밝혔다. 한편 상영 이틀째인 2일엔 학교측이 조명시설의 사용을 허락해 순조롭게 영화제가 진행됐다.

합법화추진위 결성 전교조 총력투쟁 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수, 전교조)는 2일 '전교조 합법화 추진위원회' 결성등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가 교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왜곡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2년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개혁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교조 합법화가 유보되거나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왜곡될 경우 전교조합법화추진위(전합추)를 결성하여 뜻을 같이하는 1만명 이상의 현장교사들의 광범위한 서명을 받아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학교현장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합추는 이번 주부터 시도 추진위원장 공개, 11일 시도별 추진위원 명단 공개등을 시작으로 참여교사 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학교현장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9일부터 지도부 단식농성, 지부, 지회 철야농성에 들어간다. 더불어 1백63개 시·군·구 지회에서 각 정당 지구당 방문, 단식수업, 교육개혁과 전교조 합법화를 주제로한 공동수업, 리본달기 등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주간/인권/호/름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25일>(월)

대법원, 내년안에 소년법 개정해 법적 보호자가 없는 소년에 대해 법원에서 보조인을 선임하는 국선보조인제도 시행키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60살 이상 노인 중 지적장애인의 1천명당 76명꼴로 비율 가장 높아/서울시교육청, 안기부 일선 고교 고장과 교사들을 불러 대규모로 한총련 사태등과 관련한 이념교육을 실시했다고 발표

<26일>(화)

국회 OECD 가입 비준동의안 의결/국민회의, 의무교육제 폐지·축소 철회 촉구/불교계 인사 5명 진관스님에 대한 불법구금과 관련해 안우만 법무부 장관등 4명 서울지검에 고발/정부, 중국 조선족들이 국내 취업피해와 관련해 대책 마련키로/ILU, 전세계 노동력의 1/3인 10억명의 노동인구가 실업·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다고 발표

<28일>(수)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결정/서울지법 형사합소1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위반자 처벌을 규정된 동법 제25조가 헌법의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교육부 발표,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금품을 빼앗기는 등 피해를 입은 전국 학생수 5만3천4백명으로 집계/전농 이수금의장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추곡수매가 3% 인상에 반대하는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한국성폭력상담소 발표, 서울지역 여중생 40명 중 1명꼴로 성폭행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서울지검 공안1부 조규홍 검사, 정수일(62) 전 단국대 사학과 교수에게 사형 구형/경기 평택경찰서, 예바다농아인을 정부지원금 착복한 혐의로 수사/인도 뉴델리, 7백여 명의 티베트인 망명객들 중국 국가주석의 인도방문에 항의시위/코도통신, 제2차 세계대전중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징용됐던 박정환(73) 씨 등 한국인 41명 당시 들었던 후생연금 탈퇴수당 받게되

<29일>(목)

서초구 조사, 관내 65살 이상 노인 6백36명중 3백24명(50.9%)이 질병 앓아/국제영네스티 한국지부, 현재의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유감표명/민주노총 12월 10일 이후 전국 총파업 돌입키로/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금요시위 1백회 맞아/경찰청 국보법 위반 혐의로 강원대 '자주대우' 중앙위원장 진병환(25·회사원) 씨등 4명 구속/대법원, 내년부터 구속영장 심사할 때 까지 미합의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30일>(금)

30년만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들어간 주둔군지위협정 개정협상 1년 되도록 합의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

<12월 1일>(토)

정부, 교원의 단결권과 제한적 협의권을 허용하되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방송법 개악저지를 위한 연대총파업대책위원회 연대총파업 결의/금융노련, 2일 준비투쟁 돌입/서울지검 형사5부 한총련 연세대 여학생성추행 관련 고소·고발 이번주부터 수사/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시민한마당

제1회
인권영화제가
대구·전주·인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성교육 부재와 대중매체·음란물 탓 청소년 성폭력 대책마련 토론회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세계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청소년을 살리는 성문화 만들기 1' 세미나를 3일 오후 2시 해화동 우당기념관에서 가졌다.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성폭력 실태와 대책을 찾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9월 서울시내 1천4백89명

(남 7백명, 여 789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성폭력 피해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1천2백94명 중 11.36%인 1백47명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강간이 21건으로 3.92%, 성추행이 5백15건으로 96.08%였다. 또한

직접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전체 응답자 1천2백93명 중 45명인 3.48%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지혜(상담소 조사연구부 2실장) 씨는 "청소년 성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성교육의 부재와 대중매체나 음란물의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래문화나 청소년들의 성문화등이 성폭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하지만 또래문화가 근본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 노동법 개정안 확정 진행 민주노총 총파업, 3백50여개 사업장 파업 찬반투표

3일 정부가 정리해고·변형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삼선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 10일경 전국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4일 3백50여개 사업장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6일 비상중앙위원회를 통해 파업의 구체적 일시와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9일부터는 중앙차원에서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프랑스 트릭수노동자들이 열흘간 파업을 지속했을 때 국민의 84%가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고 밝힌 뒤, "이번 총파업은 문민과 개혁을

모두 포기한 현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양해와 격려를 권 당부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과 의 면담 의사를 밝히며, 노총과의 연대파업을 제안했다. 노총은 오는 16, 18일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한국가톨릭교회협의회(총무 김동완)는 3일 성명을 내고 "현 정부가 국민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채 노동법 개악안을 확정하기로 한 것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민주개혁과제실천 대전총남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장호 등)도 정부 방침 철회와 노동법 개선을 촉구하며 "민주적 노사관계법 개정을 위해 강도 높은 대응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폭력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를 위한 대책으로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씨는 스티퍼적 성과 폭력적 성의 은상인 매매음의 방지와 유흥퇴폐업소의 규제 △대중매체 내용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와 대중매체 바로잡기 운동 △학교 성교육의 정상화를 꼽았다. 학교 성교육의 정상화 방안으로 교육부 산하에 성교육 전담부서 설치, 성교육의 정식교과목 지정, 부모에 대한 성교육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안기부법 개정 반대

신한국당이 안기부 수사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안기부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정 방침을 개혁포기 선언으로 받아들인다"며 "김영삼 정권과 신한국당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투쟁과 범국민적인 항쟁을 조직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총남연합(의장 이장호)도 3일 성명에서 "인권유린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안기부법 개악의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무위원 및 국회의원 전원에게 제출했다.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협제정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편집자주> 서울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덕 판사)는 지난 28일 비디오 사진심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2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위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문기재 법률조항은 별지 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제정대상 법률조항

(1)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되어 1996.6.6 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 이하 같다) 제17조(심의)

① 판매 배포 대역 시청 제공등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반입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을 판매 배포 대역 또는 시청제공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상영하여서는 아니되며, 이하생략.

(2)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내지 2호 생략

(3)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다음 각호의 ---비디오물---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1내지 2호 생략, 3.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2.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 원칙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비디오물이라 함은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체로서 테이프 형태의 것과 디스크 기타 신소재 형태의 것을 말하는 바(법 제2조 제2호), 영화와 마찬가지로 비디오물도 사상 양심 및 지식 경험등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이다. 따라서 비디오물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비디오물은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검열제가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제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보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밝힌 검열의 개념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3. 법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2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의 위헌 소지

법은,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이를 제작하고자 하는 등의 자에게 미리 그 내용에 관하여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17조 제1항), 누구든지 위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판매, 배포, 대역 또는 시청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의 상영을 금지하고(제17조 제3항), 이에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비디오물을 몰수하도록(제25조 제2항 제3호)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비디오물의 제작, 판매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제작, 판매를 금지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 판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위 헌법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한, 법에서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행정권이 공연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위 공연윤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기관으로 볼 수 밖에 없다(헌법재판소 1996. 10.4 선고, 93헌가 13.91헌바10 결정참조).

결국 법이 규정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에 해당하므로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등에 앞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의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법률조항부분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1회
인권영화제가
대구·인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공해식민지 탈출하자...SOFA개정 절실
전국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1차보고

대한민국은 공해식민지인가? 하는 울분을 터뜨릴 정도로 주한미군들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총 7천3백 60만평에 96개의 미군관련 기지와 시설이 있는데, 우리 땅이면서도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미군시설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의 심각성이 민간단체들에 의해 최초로 보고되었다. 녹색연합과 우리땅미군기지찾기 전국 공동대책위원회(준)는 4일 오전 11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전국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보고회'를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의정부, 부평, 춘천, 하남 등 전국 11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30여 개 미군기지의 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현철(녹색연합 정책팀) 씨는 소음, 수질, 토양 오염에 의한 주민피해 외에도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의 지적에 따르면, 트레이더에 의한 생태계 파괴와 주민 피해 △전 국토에 깔려있는 송유관 문제 △폭격장 문제

△미군기지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귀화식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한국정부는 당당하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땅에 대한 권리와 오염조사권, 오염지역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를 미국정부에 요구해야 하며, 국가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원상복구 의무 요구해야
한미행정협정 개정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 협정을 통해서도 명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한미행정협정 4조(시설과 구역-시설반환)에는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성재호(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오염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시정문제는 한미행정협정 개정 과정에서 환경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합의를 도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개정시 환경보호를 위한 원칙에 충실하면서 한편으로 오염된 미군사용시설이나 구역의 원상회복 문제를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미군기지 환경조사 1차 보고서

◇ 소음으로 주택균열, 수업중단, 침각장애 등
소음은 대부분 헬기, 제트기 등에 의한 소음이었으며, 환경오염 기준치가 일반지역에서 50dB을 기준으로 볼 때 의정부, 춘천, 군산등 측정장소 모두에서 등가소음도(평균소음)가 63.9-87.8dB로 나타나 환경기준치를 훨씬 웃돌고 있었다.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60dB일 때 식욕감퇴나 수면장애를, 85dB일 때 심장기능저하, 평형력 교란을 일으키며, 90dB일 때는 청력장애, 귀울림, 두통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의 근화초등학교에서는 헬기소음 때문에 3학년 교실에서 30분 이상 수업을 중지하는 상태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석면등 폐기물 방치로 토양오염
원주시에서는 올해초까지 7년여 동안 영내 야산을 깎아 부대 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쌓아두면서 침출수 등을 방치,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가된 군용 막사를 10여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 미군이 사용한 건축물 단열재인 석면이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 송유관 누수로 기름덩어리가 된 농경지
미군이 설치한 유류고와 전국 450Km에 이르는 송유관의 경우, 시설의 낙후와 관리의 어려움으로 기름 유출사고가 일어나고 있었다. 포항지역에서는 송유관이 터져 논이 기름으로 오염되기도 했는데, 송유관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 커다란 전자레인지 안에서 생활
부산 양정1동에서는 주택이 바로 옆에 있는 레이더로 인한 전자파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예상된다. 레이더에 의한 전자파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자레인지의 원리와 같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두면 결론적으로 주민들은 아주 큰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미군시설이 있으며, 이 시설중 상당수가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레이더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한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와 「녹색연합」 등은 5일 오전 11시 미대사관을 방문해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측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한 6일 낮 12시 용산 미군기지 1번 문 앞에서 미군기지 환경오염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LG와의 전쟁... 불매운동 시작 LG해고자 단식 25일째 병원 후송

정도경영, 인간존중경영의 LG그룹을 상대로 제품불매 운동이 벌어진다. LG해고자 이동렬(37), 성한기(42) 씨의 단식농성이 25일째 되던 4일 여의도 LG본사 앞 광장에서는 LG 그룹 해고자들의 원직복직과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LG(럭키금성)제품 불매운동본부 준비위」 발족식이 거행됐다.

“해고자들의 목숨 건 단식 투쟁이 25일째 계속되는 속에서도 복직을 고려조차 않는 LG의 반인륜적 작태를 규탄한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시민·사회·종교·학생 단체가 함께하는 「LG제품 불매운동본부」를 발족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LG는 노조탄압뿐 아니라 빈번한 해양사고로 바다를 오염시킨 주역이며, 슬렌트 중독

11월 30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전국 구속 수배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금수 등) 주최로 LG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LG그룹 고발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최형익(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씨의 기초발제에서 드러난 LG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및 유형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주).

<사례1> 노조규약 개악을 통한 노동운동 무력화 기도: LG화학

회사는 94년부터 간선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 아래 ① 노조대표자에 출마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합원 자격 박탈 ②전원직 노조간부들에 대해 본사로의 인사이동 명령을 하여 노조와 단절시키고 ③인사명령을 거부하면 무단결근 및 지시 불이행 등 사유위반으로 해고.

96년 8월 28일 대의원 대회에서 △노조위원장, 지부장, 대의원 간선제 도입 △임단협 교섭위원 위원장 지명 △교섭권, 체결권은 위원장이 가진다 등으로 규약개정.

<사례2> 슬렌트 5200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 은폐기도: LG전자부품

LG전자부품 경남 양산공장에서 20명의 여성노동자와 8명의 남성노동자의 성염색체가 손상되고, 이중 2명의 여성노동자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중증의 진단결과를 받았다. 노동자들이 작업중 호흡곤란·현기증·두통 등을 호소했으나, 회사측은 ‘일본에서 아무 문제없이 사용했는 것이니 걱정말라’며 이를 무시, 산재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사례3> 노조 확대 간부회의 및 대의원 대회 방해 사례: LG전선

95, 96년 동안 정기, 임시 대의원대회 등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이 회사측의 치밀한 방해공작으로 무산. 95년 2월 12일 노조의 확대 대의원, 간부 비상 연석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사측은 전 부서 관리자를 동원해 조합간부, 대의원에 회유, 협박, 납치를 자행했다.

또한 95년 3월 24일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대회를 이탈. 이 때 이탈한 구미지역 대의원들이 회사 간부와 술자리를 벌이고 있는 것 목격.

등 노동자의 건강과 생존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다”고 밝힌 뒤, “LG제품 불매 운동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노동탄압기업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천명했다.

노동법 개악안 철회 요구 민변, 공노대 성명

배석범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에서는 악덕 재벌 한두 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공격할 계획”이라며 LG가 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LG해고자 복직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그 돌출의 방침은 요지부동인 상태.

지난 3일 민주노총측과의 면담 자리에서 LG측은 ‘복직을 시키면 인사원칙이 무너지다’며 복직 불가 방침을 재천명했다. 심지어 LG측은 제품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오히려 LG가 잘 선전될 것이다’며 자신만만한 것으로 전한다.

한편, 25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던 성한기, 이동렬 씨 는 4일 낮 1시경 실신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됐다. 두 사람은 3일 LG그룹 측이 복직불가 방침을 재확인하자 이날 저녁부터 생수

를 마시는 것마저 거부해 왔다고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공공부노동조합 대표사회회의는 4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정부의 개정안은 복수노조 금지, 제3차개입 금지, 교사·공무원 단결금지 조항 등을 사실상 존속시켜 놓은 반면, 변형시간 근로제, 집단해고제는 전면 실시했다”며 “기업측의 논리와 요구만을 적극 반영하고 형평을 상실한 것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3백 개 노조는 4일 노동법 개악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일제히 실시했다. 이날 찬반투표연 2만5천1백여 명이 참여했으며, 7일까지 투표는 계속 진행됐다.

● 행사와 동정 ●

- 안기부법 개악저지를 위한 신한국당 항의집회
 - 일시: 12월 5일(목) 오후 1-3시
 - 장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장기신용은행 앞
 -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등(☎921-4090)
- 공익정보제공자보호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12월 5일(목) 오전 10시 · 장소: 서울시청 기자회견
 - 주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797-8200)
- 평등의 전화 1주년 기념토론회
 - 인천시 여성직업교육, 훈련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 일시: 12월 5일(목) 오후 2시
 - 장소: 부평 신협회관(☎032-529-1611)
 - 주최: 인천여성노동자회(☎032-863-2659), 민주노총
- 청년정보문화센터 제2차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 일시: 12월 7일(토) 오후 5시
 - 장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
 - 주최: 청년정보문화센터 총회준비위원회(☎516-1542)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9주년 기념 심포지움
 - 김영삼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어떻게 달라졌나-
 - 일시: 12월 7일(토) 오후 2시30분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제1회 인권영화제
오늘 하루는
쉽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대공수사력 강화 빌미로 인권유린 우려 안기부법 개악 반대 항의 확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회복을 골자로 하는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악 방침에 대한 반대 성명과 항의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종교단체 소속 회원 50여 명은 5일 오후 1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과 신한국당사 앞에서 안기부법 개악 반대집회를 가지며 “정부와 여당이 안기부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문명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민정부가 내세운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자, 인권상황을 과거 군사독재 정권시절로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찬양고무죄는 과거에 반독재세력이나 정부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남용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불법수사와 고문 등 숱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찬양·고무죄는 조항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데, 안기부가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집권세력에 비판적인 모든 사람들의 활동을 사찰·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비밀정보기관의 속성상 사건 조작과 고문 등 인권유린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표된 안기부법 개악 반대 서명에는 전국연합·참여연대·인의협 등 30여 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집회는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한 소송! 출소장기수들이 소송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법’이라는 악법에 의해 10여 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빼앗겼던 장기수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1심과 2심 소송이 모두 기각되었고, 이제는 상고심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 인지도가 개인당 45만원, 18명 전체를 합하면 8백10만원으로 60, 70, 80대의 고령인 출소장기수들에겐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오는 9일 상고 마감 날짜까지 인지대를 마련하지 못하면 여러 사람이 상고를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출소장기수들의 ‘역사바로세우기’를 돕고자 하시는 분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주십시오. 715-9185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노동법 개정안’ 비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경영논리와 경영자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사회발전의 과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사제단은 “정부가 국제경쟁력 강화와 경제침체 현실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길로는 양자의 요구를 공평하게 수용한 것이 아니라, 경영인의 요구가 대폭적으로 수용되고 노동자들의 권익옹호는 부정됐다”며 노동법 개정안을 재고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5일 낮 1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산하 조합원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안의 노동악법 철폐 및 정

부 개악안 철회 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본격적인 개별해체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주한미대사에 공개질의 환경오염실태 공개 요구

「녹색연합」과 「우리땅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준)는 5일 미대사관을 방문하고 레이니 주한미국대사에게 한국내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공개를 요구하는 결의서를 보냈다.

녹색연합 등은 공개질의서에서 △미국의 정보자유법에 따라 국내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를 밝힐 것 △미국의 국민환경정책법에 따라 미군기지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에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구체적 조항을 포함할 것 △미국과 한국정부의 공동조사 시행 및 한국민에 대한 사과와 배상 등을 촉구했다.

국정감사자료집 제작

인권에 대한 중요 지표와 통계가 필요하신가요?
유엔 사회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이후 한국정부가 취한 후속조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96 국정감사에서 법사, 내무, 외무, 보건복지, 노동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주요 자료들과 데이터를 각각 자료집으로 묶어 내려 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만 한정해서 제작해드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715-9185
*’96 국정감사상임위원회 자료 목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통신 ID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양심선언자 법으로 보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례안 발의

이른바 '양심선언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이 서울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5일 이기문 서울시의원과 참여연대 공익정보지원단(단장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불법과 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보호하고, 제보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도 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근본 취지를 두고 있다.

선거부정을 폭로한 바 있는 이기문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신한국당 4명, 국회의원의 75명, 민주당 21명 등 서울시의원 1백46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1백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공익정보제공자보호 조례안은 "서울시 및 자치구, 교육청, 투자기관,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고용인이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다중의 위험에 관한 정보나 고용자

및 내부조직원의 불법적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보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자의 동의없이 신분을 밝힐 수 없으며, 이

장기복역 양심수에게 연하장을!

30-40년을 창살 안에 갇혀 있는 장기수들과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시다. 우리가 쓰는 편지 한 장이 가장 희망스런 소식이 될 것입니다.

광주고도소 (500-110) 광주시 북광주우체국 사서함63호	김용태(38세,12년) 1997년	이상철(47세,14년) 2473년
이재룡(53세,25년) 5059년	김동기(65세,31년) 5042년	양희철(63세,34년) 5029년
이경환(62세,32년) 5047년	합주명(67세,14년) 5012년	이공순(63세,30년) 5041년
최수일(57세,32년) 5015년	박찬우(37세,13년) 5005년	

대구고도소 (711-830) 경북 달성군 화원우체국 사서함1호	박동운(52세,16년) 3111년	안승운(65세,15년) 3151년
박수관(53세,14년) 3245년	김장호(56세,14년) 3122년	서경윤(57세,13년) 3185년
양동화(39세,12년) 3265년	정영(54세,12년) 3236년	오형식(65세,26년) 3100년
황대권(42세,12년) 3164년	홍명기(66세,33년) 3125년	

대전고도소 (305-251) 대전시 유성우체국 사서함 136호	김태룡(49세,18년) 3565년	나종인(59세,12년) 3643년
서순택(67세, 8년) 3635년	유재선(65세,14년) 3573년	김익현(34세, 7년) 3855년
최선용(55세,11년) 3599년	김윤수(57세,12년) 3637년	강희철(38세,11년) 3502년
김은환(67세,28년) 3640년	김익진(67세,28년) 3574년	김인수(74세,35년) 3618년
박양규(67세,30년) 3624년	신인영(67세,30년) 3506년	안영기(67세,35년) 3530년
우용각(68세,39년) 3514년	양정호(66세,28년) 3630년	우용기(71세,38년) 3615년
3615년	윤수갑(74세,30년) 3649년	최선목(70세,35년) 3612년
3612년	장병락(63세,35년) 3645년	홍경선(72세,30년) 3501년
3501년	최하중(70세,35년) 3561년	

안동고도소(762-600) 경북 안동시 안동우체국 사서함 171호	조상록(51세,19년) 1310년	김병우(72세,14년) 1368년
김기문(67세,15년) 1330년	이장형(64세,12년) 1302년	유정식(57세,22년) 1311년
1311년	강용주(35세,12년) 1313년	

전주고도소 (560-280) 전주우체국 사서함 72호	박영희(34세, 5년) 2001년	석달윤(66세,17년) 2120년
진창식(50세,18년) 2679년	손유형(68세,16년) 2039년	문철태(67세,12년) 2019년
최수열(32세,10년) 2073년	손성모(67세,16년) 2011년	김성만(41세,12년) 2035년
2035년	신광수(66세,12년) 2053년	김장원(64세,26년) 2063년

전주고도소 (663-910) 경남 진양군 대곡면 광석리 700
서경원(60세, 8년) 55년

*연하장을 보내실 때 수번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단체에서 보낼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으로 보내야 합니다.

"비밀협조자를 활용하라"

이 자료는 11월 30일 'LG그룹 고발 공청회'에서 소개된 LG그룹의 노무관리 실태에 관한 대외비 문서에서 요약한 내용이다.<편집자주>

< LG그룹 대외비 문건에 나타난 노무관리 실태 >

-노무관리 자료집 머리말의 내용: "지난 87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그 어느 때보다 극렬했던 노사분규의 주동세력 내지는 주동인물이 대부분 위장취업자로서 배후에 좌경의식화된 운동권이 세력이 있었다" "좌경 의식화 운동권의 기본 노선이 우리를 전술케 하는 것은 바로 북괴 혁명노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업원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그룹별 인사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A그룹: 상사의 지시에 순종적인 자, 직업의식, 기업의식이 확고한 자(애사대로 활용)

B그룹: 무관심형, 방관형, 추종형, 설득 가능한 자

C그룹: 비판적, 부정적인 자

◎관리방안

A그룹: 부서장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 비밀협조자로 활용, '애사대'로의 전환 멤버로 활용, 인센티브 부여시 가급적 고려

B그룹: 일상적으로 관리(상담 등)하여 긍정적 사고로의 전환, A그룹 사원과의 연계화 추진

C그룹: 의도적 집중적으로 개별 상담실시, 비밀협조자를 활용하여 연계

주기적으로 인사부서장과 소속 부서장이 협의하여 등급 재분류한다.

◎이밖에 스캐용시 추천자가 확실한 자만 채용 △개인별로 설득 가능한 파악 및 명단 관리(인연, 지연, 학연 등 감안하여 최대한 복수 유지) △부모, 출신교 교사의 활용방안을 강구

제1회
인권영화제가
춘천에서 열립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경희대생 수사도중 분신기도 수배자로 오인...강제연행, 구타등 가혹행위

수배자로 오인되어 강제연행된 대학생이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항의, 분신기도로 하반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입원치료중이다.

김형관(26·수원 경희대 유전공학과 90학번) 씨는 5일 오후 2시 신당 6동에 있는 후배 자취방에서 생명불상(김 실장의 3명) 경기도경 수사관들에게 불법연행되었다. 연행당시 경기도경 수사관들은 김 씨를 이계규(경기동부총련의장 직무대행, 용인 외대 총학생회장) 씨로 오인, 그가 수차례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연행했다. 또 연행 당시 후배 자취방에 있었던 노트북 컴퓨터, 컴퓨터디스크, 카세트테이프를 압수했다. 한편 김 씨에 의하면 2주 전부터 미행을 당했는데, 김

씨는 이계규 씨와 인상착의 등이 매우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3-4시간동안 전신 구타

김 씨는 경기도경 수사관들에 의해 신당 6동 파출소 2층방으로 연행되어 3-4시간 동안 구타당했다. 당시 그는 수사관들에게 주먹으로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고, 바닥에 엎어진 상태에서 수차례 발길질을 당했다. 더욱이 김 실장이라는 수사관은 "경기도경 보안수사대로 넘기면 엄청나게 당할 것"이라며 위협을 가했다. 또한 수사관들은 수사과정에서 김 씨가 군 도피중이며, 주민등록증 이 위조된 점을 들어 공문서위조혐의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포감 속 분신기도

오후 7시30분경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도착한 뒤 수사관들이 압수한 물건 자료를 분석한다며 나가자, 김 씨는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사무실 안에 있던 석유난로에 불붙은 종이를 넣고 난로를 들어올려 분신을 기도했다. 분신된 동수원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6일 새벽 0시 30분경 대치동 순화병원으로 이송돼 입원치료 중이다. 그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해 두려움과 공포감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법적대응 준비

6일 오전 12시경 이계명 변호사가 접견을 했는데, 이 변호사는 "김 씨의 왼쪽 얼굴부위가 부어있었고, 오른쪽 눈이 충혈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에 경희대 총학생회와 민주운동회, 가족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불법연행,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윤경씨 재판 연기

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예정이었던 함윤경(국보법상 불고지 혐

의) 씨 재판이 1월14일 오후 2시로 연기되었다. 이날 재판에는 간첩 김동식 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양심수와 함께하는 천주교 인권주일

천주교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인권위)는 8일 인권주일을 맞아 이장형, 박노해, 강희철, 김성만 씨 등 4명을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하고 '양심수의 고통과 하나되는 인권주일'이라는 제목으로 양심수 석방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7일 명동성당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고통받는 양심수 가족들과 함께 '인권을 위한 기도회'를 연다.

교회협, 인권주간 선포 1만2천여 교회 행사진행

한국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제48주년을 맞아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를 '96 인권주간'으로 정하고, 교회협 소속 1만2천여 교회와 지역 인권위원회를 단위로 기념예배와 강연, 문화행사 등을 다양하게 벌인다.

서울·경기지역에서는 12일 오후 6시 기독교회관에서 '96 인권상 수상식 및 인권선언문 발표와 함께 한국교회 인권센터 창립축하회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대전·전주·대백·제주 등 전국적으로 인권주간 행사가 이어진다.

전배우자 가족구성원에 포함해야 가정폭력방지법 올해안 제정될 듯

가정폭력방지법의 연내 제정을 앞두고 막바지 절충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3당안을 보면 몇 가지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3당의 가정폭력방지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일단 외형면에서 국민운동본부안과 자민련, 국민회의 안은 단일한 가정폭력방지특별법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신한국당은 처벌법과 방지 및 보호법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범국민운동본부는 "가정폭력방지법은 처벌과 보호, 예방적인 사전적 조치와 사후처방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며 신한국당이 내놓은 두 법안 중 하나만 통과된다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의미를 크게 축소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누구나 신고 가능해야

법안 중 문제로 지적된 세무 항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가족구성원의 정의' 부분을 들 수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또는 세대구성원 간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국민운동본부만이 전배우자(이혼자)를 가족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정서상 아이들 아버지를 형사고소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가족구성원에 전배우자가 포함되어 처벌·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가정폭력에 있어 조기발견은 가정폭력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다. 따라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제정 취지를

계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신한국당은 시설의 장이나 보조자만이고 발의무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회장) 씨는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폭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의사나 교사들에게 신고의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호처분기간에도 지원 마땅 신한국당안에는 보호처분기간을 1년 범위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양육비, 생활비의 지급이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따른 벌칙 조항을 명시해 가정폭력 발생시 사법경찰관리가 반드시 출동하도록 법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민운동본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과 단일한 조정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문제라는 시각을 벗어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법제화하게 된 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은 큰 의미를 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마무리 작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미륵정사 압수수색 진관스님 자각시 압수

광주지검 공안부(박준성 검사)는 5일 이날 새벽 3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

속·기소된 진관스님이 주지로 있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 미륵정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자각시 1백78편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사를 벌여 이적성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미륵정사와 한 대문을 쓰고 주변 사람에 의하면,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번과 달리 대문과 현관문은 물론 자료가 있는 방문을 들고 벌였다고 한다.

부정부패방지법 제정을 사회원으로 1백명 성명

이효재(정대협 회장)·한완상(방송통신대 총장) 씨 등 각계각층 사회원인사 1백2명은 6일 오전 반부패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시국성명을 통해 이들은

"현정부의 부패추방 노력은 부정부패를 근절할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대안으로까지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며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기본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반부패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원로 1백인 시국성명'은 참여연대 맑은 사회만들기본부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다.

전국연합, 노동법 개악반대

전국연합은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소한 국제수준에 맞는 노동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6일 발표된 성명에서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철회를 주장하며, 노사관계 개악취지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간행물○

- 세상열기 12월호-청년정보문화센터(516-1542)
 - 주요내용:기획특집-청년정보문화센터의 시대인식과 청사진:한국 사회운동 어디로 갈 것인가?등 110쪽
- LG해고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LG그룹 고발 공청회 자료집-전해투지원대책위(744-7437)
 - 주요내용:LG 그룹내 노동탄압, 해고자문제/LG 그룹노동탄압사례 등 96쪽
- 인권주일자료집 '교회와 인권'-천주교인권위(777-0643)
 - 주요내용:인권주일 강론/심포지엄 「인권과 교회」/초청강연 '제3천년기를 맞으며 생각하는 교회와 인권의 문제'/95년 인권상황 개관/박노해 신작시 7편 등 89쪽
-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및 대책-성폭력상담소(576-5513)
 - 주요내용: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상담동계를 통해 본 청소년 성폭력 실태/청소년 성문화의 현실/청소년 시기의 특성과 성문화/건강한 청소년 성문화를 위한 대책 등 1백쪽
- 자료집: 아동의 권리와 법-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 주요내용:아동의 권리협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가정폭력특별법안의 고찰/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련법 고찰 등 109쪽
- 산재노동자소식-소식지 공동발행위(868-2379)
 - 주요내용:기획글-96 노동법 개정투쟁·외국인 산재노동자의 현실·공고실습생의 현실/특집기사-산재피해자들의 역할과 전망·전국산재, 직업병 피해자 단체 대표자 연석회의/96년 10, 11월 산재동향 등 72쪽
- 토론회: 안기부법 개정논의와 인권-대한변협
 - 주요내용:안기부법 개정논의의 문제점 23쪽

제1회
인권영화제가
춘천·대전·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경찰 폭력진압 '여학생 뇌수술' 허가받은 학내집회에 곤봉으로 무자비 진압

시위에 참가한 여학생이 경찰의 폭력 진압 과정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뇌수술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오후 3시경 고려대 교내에서는 고려대, 동국대, 수원대 등 수도권지역 대학교 학생 2백여 명이 모여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청년학생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어 학생들이 교문앞으로 나가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며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흉아무개(고려대 91학번) 씨가 머리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다. 흉 씨는 고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이대 목동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수술을 받았으며 10일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흉 씨 외에도 코뼈가 부러진 학생, 턱뼈에 금이 간 학생 등 고대생 3명이 고대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고대 총학생회측은 밝혔다. 고대 총학생회는 "이미 집회신고를 해 놓은 상황이었으나, 쇠파이프나 돌맹이 등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에서 흉아무개(고려대 91학번) 씨가 머리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다. 흉 씨는 고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학교안 까지 들어와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하며 연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성북경찰서장이 직접 진압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20명의 학생들을 연행했다. 김원정(고려대 94학번) 씨 등 연행자들은 즉시 구급차에 탑승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혼방, 불구속입건 조치 등을 받은 뒤 8일 모두 석방되었다. 고대 총학생회측은 이날 경찰의 폭력진압과 학원난입, 학생부상 등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공판안내○

- 10일(화)
 - 임상규·변선보·송중호(국보법 위반)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진
 - 11일(수)
 - 이원구(국보법위반), 오후2시 합의2부, 302호, 재계 여성오(화염병처벌법)오전10시, 합의2부, 418호, 선고이원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 12일(목)
 - 김계규(국보법 위반)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원용호의 1인(국보법), 오전10시, 합의6부, 424호, 선고 정수일(국보법 위반),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윤석진(국보법위반) 오전10시, 4단독, 524호, 신진
 - 13일(금)
 - 김용지·백주선(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신진 강병연(국보법 위반) 오후2시, 합의23부, 311호, 신진 이승구(국보법 위반)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김진명(국보법 위반)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황윤미(국보법 위반) 오전11시, 5단독, 519호, 속행
- 이상 서울지법 형사부

대법원에 상고심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11월 12일 이들이 낸 항소를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재진 판사)가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에 의해 형기를 다 마치고도 보안감호처분을 받아 89년 그 법이 폐지되기 까지 10-16년간의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들 뿐 아니라 무려 1백50여 명의 장기수들이 사회안전법에 의해 옥살이를 했고, 이중 16명은 옥사했다.

60-80세의 출소장기수들은 개인당 45만원씩, 모두 8백10만원이 드는 상고심의 인지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민가협·교회협 정의와 인권위원회·천주교 장기수가 즉후원회·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등 인권단체에서 도움을 주었고, 여기에 출소장기수들이 얼마간씩을 부담해서 힘겹게 인지도가 마련됐다.

장기수, 대법원 상고 사회안전법 손해소송 인권단체 인지대 모금

한백렬·이종 씨 등 출소장기수 18명은 지난 7일 구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 처분을 받았다며

진보정치연합 주소변경
전화: 661-8033
전송: 661-8032
주소: 강서구 내발산동 678-2 2층(157-280)

도시빈민운동가 김홍겸 씨의 케유틀 바라는 작은 음악회

1부-작은 음악회/2부-동문 송년 다과회

때: 96년 12월 11일(수) 오후 6시30분
곳: 연세대 동문회관 지하 영화관(361-4760)
만든이:연세민동, 81학번동기회, 신과대동문일동

LG 해고자, 30일째 단식농성 인간다운 삶 위해 "절대 굴복 않겠다"

LG해고자 이동렬, 성한기 씨의 단식투쟁이 9일째로써 30일이 경과됐다. 이미 지난 4일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된 바 있던 두 사람이지만, 의식이 회복되자마자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식농성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동렬 씨의 몸 상태는 최악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씨는 9일 또 한차례 실신해 여의도 성모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갔다. 이 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속에서도 의식이 회복되자마자 단식농성 합류를 고집하며 병원에서 퇴원했다.

이 씨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체력이 남아 있는 성한기 씨도 "LG그룹 15만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이대로 굴복할 수는 없다"며 살신투쟁의 결의를 버리지 않고 있다. 성 씨는 "LG가 손쉽게 복직을 시켜 주리라고 생각지는 않는다"면서도 "노동자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LG그룹과의 협상을 제안한 데 이어, 오늘 낮 1시30분 여의도 LG빌딩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기로 했다. 오늘 집회에는 2천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보법·사형제도 폐지 AI, 세계인권선언 성명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제 48주년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한국정부에 △사형제도 폐지 △국민인권기구 설치, 국민인권교육 실시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조약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각국 정부들에게 인권침해 중식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을 비준·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AI 한국지부는 60여 개국에서 보고되는 고문사례, 남북한을 포함해 1백 개국에서 자행되는 양심수에 대한 임의구금, 94개국에서 시행되는 사형제도, 2천8백 만 명의 난민 등 암울한 현실을 지적하며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이 각국 정부와 비정부집단들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총 상경 투쟁

민주노총 소속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1천여 명은 9일 오후 2시 서울상경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10일 오후 1시까지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폐기 및 강행통과 저지를 위한 농성을 벌인다.

'96 국감자료 제작·판매

96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법사, 내무, 외무, 보건복지, 노동환경위원회의 주요 자료와 데이터를 자료집으로 묶어 판매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만 한정·제작해 드립니다(문의: 715-9185 인권정보자료실)

* 자료 분량은 법사(754쪽), 내무(231쪽), 외무(101쪽), 보건복지(163쪽), 노동환경위원회(778쪽)입니다.
** '96 국정감사심사위원회 자료 목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통신 ID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주간/인권/호/름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

서울지법 민사65단독, 시사저널 이고관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신한국당, 안기부법 개정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금융노련 준법투쟁 시작/충북지방경찰청, 국보법 위반 혐의로 충북총련 조봉위 정책실장 김봉수 씨 구속/교육부, 특수교육발전방안 확정/약 5만명의 세르비아 학생들과 야당 지지자들 14일째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대통령 규탄시위/일본 우익지식인들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발족

<3일>

내년부터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 확정/정부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고용제도 폐지 방침 전면 보류/안기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총련 집회의 폭력성등을 주제로한 비디오에이프 상영/미안마 경찰, 반정부시위를 벌인 약 3백명 학생 구금/미국 법무부, 일본인 전범 가운데 16명 입국금지조치

<4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12단독 이호두 판사, 외국인노동자 모하메드 압둘 칼락 씨가 (주)서안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대한사립중등법인 연합회 대전시지회, 소속 재단 이사장과 교장들에게 교육부 등에 '교원단결권 인정'에 항의하는 전화를 걸도록 요청한 것 밝혀져/전농 이수금 의장 7일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농성/녹색연합등 전국 11기 지역 30여 개 미군기지를 대상으로 한 환경조사 결과 발표/서울고법 형사2부,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이윤화(28) 씨 항소심에서 증거불충분하다며 살인·방화혐의에 무죄선고

<5일>

서울시의회 의원 1백명 내무고발자 보호조례안 공동발의/민변·전국연합 등 안기부법 개정 반대시위/경계 5단체, 노동계 총파업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촉구/녹색연합 등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관한 공개질의서 전달/방송법 개악관련해 방송4사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부산고법 제1형사부, 14년간 폭행과 학대를 가해온 남편을 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옥이(41) 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유 5년 선고/미국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CIA가 91년 콜롬비아학살에 개입했다고 보도

<6일>

수배자로 오인돼 강제연행된 김형찬(26·경희대 유전공학과 재적) 씨 경찰의 강압수사에 항의, 경기도경에서 분신기도

<7일>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출소한 장기수 중 18명 사회안전법 위반 소송 항소기각된 뒤 헌법재판소에 상고

<8일>

<한겨레신문> 보도, 정부가 노동계 분업공작한 문건 입수/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 금아무개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청구소송에 국과수와 관한 경찰서 경찰관들의 과실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광주지검 공안부, 남총련 산하 민족해방군에 가입해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조선대생 김영철 씨등 5명에 대해 27일간이나 구속했다가 기소유예 결정/사법시험에서 2차까지 합격한 오기형 씨 대학시절 시국관련 전과로 인해 3차 시험에서 낙방 위기/<아시아신문> 일본군의 37년 중국 난징학살을 증명하는 독일인 보고서 발견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김해성 목사(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소장, 한국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일전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다. 필리핀을 방문하던 한국인 사업가 두 사람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의 트랩을 내려서는 순간,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내리는 필리핀 청년 여섯 명에게 둘러 싸여 물매를 맞았다. 즉시 공항경찰대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들에게 연행된 필리핀 청년들은 한국에서의 취업기간중에 당한 학대와 모욕을 이야기했고 이에 흥분한 경찰들이 합세하여 채자 폭행을 했다고 한다. 이들은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결국 강제추출을 당하고 말았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한 봉변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놈 개새끼』라는 책이 출간되어 불타나게 팔린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다. 그 모든 봉변의 이유인 즉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봉변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중국교포나 외국인노동자를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언어나 문화의 차이, 불법체류, 불법취업이라는 신분상의 약점들 속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여러 가지의 사건과 사고, 생활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겪는 문제와 고통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해야 할 문제이다.

작년 한껏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13일 건축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져 3일만에 사망한 중국 내몽고에서 온 교포 유영희(49·남) 씨는 국립의료원 영안실에서 2백35일간 방치되다가 약 8개월만에 장례를 치르고 화장되었다. 그것도 몽고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의 비보를 접하고 한국에 온 아들 유성호(18)군이 부친에서 공장을 다녀 벌은 돈 1백만 원을 가지고 병원측에 사정을 하여 서두른 결과였다.

8개월만에 겨우 장례식 치러 방글라데시인 3명 모타레브, 굴짜르,

화록 씨는 플라스틱 사출공장의 천장 지붕 속에, 창문 하나없는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발생한 화재와 유독가스를 피하지 못하고 온통 숯덩이처럼 타버렸다. 하루에 4구의 장례를 치러 시신을 방글라데시로 보내고자 비행기를 기다리며 김포공항 화물청사에서 새찬 눈발 속에서 허무하게 허공을 응시하던 방글라데시 대사관의 공사 바다차야 씨와 그 직원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무엇일까? 과연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숯덩이로 변한 방글라데시 노동자

한국 정부는 지난 8월말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18만3천 명이 넘어섰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인력의 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들의 대부분이 소위 3D 업종으로 분류되어지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임금과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해 주고는 있지만 일한 만큼의 대가나 최소한도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다. 작업장 이탈을 위한 정보교환을 차단하고자 전화통화 금지, 편지 금지, 외출금지, 여권압수 등을 일상적으로 당하고 있다. 또한 고의적으로 5-6개월씩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붙잡아 두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결국 이러한 결과가 작년 1월 9일부터 17일까지 전 국민을 충격 속에 몰아넣었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사건이었다.

외국인노동자 18만3천 명 육박

우리나라는 범지구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를 보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됨을 알리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법은 '인간의 사회, 문화, 경제적 기본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금지는 헌법에 명시된

현재 김영삼 대통령은 '세계화' '국가 경쟁력 강화'를 부르짖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이같이 행하면서 어떻게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국가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우리는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안타까와하면서도 국가 위신이나 국가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안타까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비근한 예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대학졸업자 이상의 고학력자들이며 장차 그 나라의 지도자로 살아 갈 사람들이다. "이들이 한국에 와서 이처럼 수모와 천대를 당하고서도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이며,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도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우호적일 것인가?"하는 중장기적인 긴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유엔은 97년을 '이주 노동자의 해'로 선포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의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이자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과거 '자본'은 이동하지만 '노동력'은 고정되어 있다는 학설이 무너지고 '자본'도 이동하지만 '노동력'도 이동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WTO협정에 이은 블루라운드의 논의도 그 연장선이다. 우리 정부도 당장 그 하반기에도 3만여 명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이미 결정된 상태이며 이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은 첫째, 통일시대를 대비한 외국인력 도입정책의 수립 둘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사면조치 셋째, 산업기술연수제도 철폐 넷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등이다. 이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외국인노동자보호법에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1회
인권영화제가
광주·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서준식 씨 돌연 출국금지 당국 '보안관찰법' 이유...영화제 폐شم죄 추측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씨(48) 대표에게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29일 '보안관찰처분 위반에 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서준식 씨를 97년 2월말까지 출국금지한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서 대표를 출국금지시킨 것은 인권영화제 개최 등 최근 활동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 유력

한 해석이다. 이미 당국은 세 차례에 걸쳐 서준식 씨의 출국을 허가한 바 있다. 서 씨는 93년 오스트리아, 95년 미국 그리고 올 3월에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당국은 수년간 아무말 없다가 돌연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것이다. 출국금지가 '해외도피의 우려가 있는 수사대상자'에

대해 취해지는 조치라고 할 때, 서 씨가 해외도피를 시도할 만한 새로운 정황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최근 특기할 사항이라면 서 씨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 전심의 거부를 내걸고 인권영화제를 개최했다는 점 뿐이다. 따라서 당국은 영화제 개최를 금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사후에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서 씨는 신병치료를 미국에 남아 있던 딸(6)과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 오는 17일 출국한 뒤, 1월 12일 아시아 항공편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출국금지조치는 11월말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건수사보다 서 씨의 미국행을 막는 데 목적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지난 91년에도 서 씨에겐 한차례 보복성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89년 보안관찰법이 생긴 이래, 줄곧 보안관찰법의 인권제한조치를 거부해 오던 서준식 씨는 91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감작스럽게 구속되었다. 당시 서 씨가 구속된 것은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 이후 서 씨는 92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에 있다.

한편, 서준식 씨는 10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소송과 출국금지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현장스케치> 여의도의 두 단식농성장을 찾아

LG그룹, 해고자 정말 죽이려나 이동렬·성한기 LG해고자

우뚝 선 LG쌍둥이 빌딩의 위용 아래로 낮은 트럭 한 대의 모습이 초라하기만 하다. 검은 만장을 둘러친 트럭 안에는 하얀 한복 차림의 두 사나이가 힘없이 누워 있다. 벌써 31일째, 이동렬·성한기 씨는 이른바 아사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다.

하지만 회사측의 입장은 확고부동. LG그룹 회장실측은 '각 계열사별로 해결할 문제'라며 '간섭불가' 입장. 성한기 씨가 다녔던 LG전자에서는 "해고된 것은 본인 잘못이므로 복직시킬 수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래도 목숨은 살려야 하지 않냐"는 물음엔 "우리도 안타깝다"는 의례적 대답뿐이다. LG전자측은 9일 성 씨의 가족을 찾아갔다. 가족에게 전한 말은 "일단 단식을 끝내게 하고 대화로 풀어보자"는 것이었다. 언제나 듣던 말, 낮은 수법의 되풀이로 사태 해결이 난망해 보인다.

이제 앉아 있기도 어려운 두 사람을 대신해서 동료 해고자 세 명이 수의를 입고 쇠사슬을 몸에 건 채 도로한복판에 나 앉았다. 동료들의 등 뒤에서 이동렬·성한기 씨는 골고러미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차마 마주대하기 어려운 시선으로...

의장 쓰러지고 이제는 부의장이... 전능 부의장 이장호

사람보다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국회의사당 정문앞. 그 담벼락 한 쪽에서 13일째 단식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추곡수매가 12.3% 인상과 의료보험 통합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단의 단식투쟁이다.

11월 28일 단식을 시작한 이수금(57) 의장이 열흘만에 쓰러졌고, 이 의장의 뒤를 이어 이장호(58) 부의장이 3일째 단식을 진행했다. 말이 좋아 농성장이지 농성장소에는 아무런 방한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마분지 몇 장으로 바닥 한기를 가리고 바람이나 좀 막아보는 게 그나마 전부이다. 조만간 정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지만, 농림수산부(장관 강운태)는 수매가 3% 인상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만 더하고 있다.

96년 한해도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결산으로
시원하게
마무리합시다
지로번호:7618848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는 지난 7일 연구소 창립 9주년을 맞아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어떻게 달라졌나'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가졌다. 김영삼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4년을 평가하고 이후 과제를 세워본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발표된 김정열 소장의 주제발제를 요약·정리한다.<편집자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혹은 복지서비스의 확대로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국제선언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의제를 보면 장애인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해결의 출발점을 인권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욕구와 서비스의 관계는 변화하기 때문이다. 복지서비스의 확대에 장애인 문제의 본질적인 의미를 두게 된다면 장애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불만족 상태가 될 것이다. 다시말해서 국제적 추세는 인권 회복을 서비스의 확대에 앞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삼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절대적 평가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실현해야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은 다음의 틀로 평가될 수 있다.

(1)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한다 -> 문명정부 출범이후 많은 장애인 관련 대책들이 쏟아

져 나왔다. 그러나 중장기 대책안을 만들면서 정책방향을 밝히는 서문을 보면 장애인문제를 인권차원으로 보지 않고 있다. 결국 김영삼정부도 장애인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다만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장애인에 관한 모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통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 김영삼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은 오히려 분리고용정책으로 후퇴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 관련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개선은 의미있는 정책의 변화라고 보여진다.

(3) 장애인복지정책은 지역사회중심으로 그 원칙을 충실히 해야 한다 -> 전반면 욕구와 서비스의 관계는 변화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도화 함으로써 앞으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마련이 가능하게 되었다.

(4) 정책결정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반영은 장애인복지정책이 만들어지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 ->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5)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국가책임주의는 중요하다 -> 그렇지 못하다. 아직도 여전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에 보면 법조항이 임의적이어서 정부가 임의취지에 따른 정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고용 5개년 계획을 집행하는데 드는 예산이 3천8백억 원인데 재원조달의 99%가 민간기업에서

거둬들인 고용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소독보장책에 있어서는 국가책임주의가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연금, 각종 장애수당제도는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다만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의 교육에 있어서 제도권교육에 있는 장애아동인 경우 무상교육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의무교육권이 지난 94년부터 확보됨에 따라 초중등인 경우는 교육받을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교육받아야 할 아동 중 70%가 넘는 아동은 아직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선진국과는 비교하기가 힘든 정도이다.

(6) 장애인복지정책은 명시적이어야 한다 -> 명시적 정책이란 명확히 법제도를 세우고, 장애인 정책을 세움에 있어 국가책임주의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형식적으로는 명시적 복지정책을 쓰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회적인 가치전통과 종교적인 자선에 의지하는 잠재적, 다른 행정 시행령 등에 의해서 해석이 유추될 수 있는 암시적인 방법으로 장애인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다.

(7) 장애인복지정책이 당사자에게까지 전달될 때라야 의미가 있다 -> 그렇지 못하다. 장애인에 위한 복지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당사자에게는 별의미있지 않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결론
-장애인들의 괴리감 여전
김영삼정부는 장애인복지

에 있어서 전보다 장애인의 교육·재활·복지수준이 현저하게 향상되고, 장애인의 교육·고용 등을 통한 사회참여를 기하는 주요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며, 헌법재판소장에 장애인을 임용하는 등 장애인 사회통합에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전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 자신들은 생활이 전보다 나아졌다는 피부에 와닿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괴리감이 생기는 원인, 바로 오늘날 장애인복지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김형찬씨 불법수사 안기부법 개악반대 신한국당 항의방문

10일 오후 1시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1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안기부법 개악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5일 안기부는 수사권이 없는 가운데 김형찬(26·경희대생) 씨를 영장도 없이 불법연행하고 김 씨에게 3시간 동안 구타와 가혹행위를 자행했다"며 "아직도 불법수사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는 안기부에게 수사권을 확대시키는 안기부법 개악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참석자들은 "김형찬 씨 사건의 책임을 지고 안기부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제1회
인권영화제가
광주·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경원대 총장 '추모비' 공식사과 학원민주화·징계학생 문제 여전히 불씨

지난 9월 22일 발생한 송광영 추모비 탈취 사건에 대해 경원대학교 김원섭 총장이 공식 사과한다. 11일 「송광영영사 추모비 탈취 대책위원회」 측과의 합의에 따라 김 총장은

한편 김 총장의 공식사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원대의 민주적 운영과 징계·재적·수배중인 학생들의 원상회복 문제 등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지난해 장현구 씨의 분신 이후 학원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징계를 당한 학생은 19명이며, 이중 11명이 재적되었다. 또, 학교측의 고소·고발 조치에 따라 4명이 구속되었고, 10명이 수배중인 상황이다. 현재 명동성당에선 위영석(96년 총학생회장) 씨 등 3명이 학원민주화 및 징계철회 등을 요구하며 45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장기수 송환 올해도 넘기려나 AI 김대통령에게 복송 촉구 서신보내

탈북 일가의 45년만의 상봉 소식으로 메스컴이 떠들썩한 가운데 한편에서는 전쟁포로 장기수 김인서·김영태·함세환 씨의 복송문제가 또 한 해를 넘기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한국교회 인권센터 등 국내 인권단체들은 몇 해 전부터 이들 장기수의 복송추진운동을 벌여왔으며, 국제 엠네스티(AI) 역시 이들의 복송을 촉구하는 편지를 한국정부에 보내왔다. AI 사무부총장 데릴 에반스 씨는 지난 11월 21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이들 장기수의 복송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 사실은 한국교회 인권센터 앞으로 보내온 AI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 씨의 편지를 통해 뒤늦게 확인되었다. 맥베이 씨는 지난 9월 한국 인권상황 보고서 작업을 위해 한국을 방문해, 김인서 씨를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13일 오후 1시부터 송광영 영사 추모비 재건립식과 고 장현구 씨 1주기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다. 장현구 씨는 지난해 12월 4일 분신하여 14일 사망했고, 장 씨의 죽음은 경원대 학원민주화 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광주고법, 영광핵발전소 위험성 인정 박재완 신부 등 집행유예 선고

11일 광주고법 형사부는 영광핵발전소 5·6호기 추가건설 반대활동과 관련해 지난 4월 26일 구속된 박재완 신부 외 5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서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실행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참작할 때 영광이 핵발전소 입지로 부적합함이 일부 보이며, 한 곳에 핵발전소가 밀집됨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등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 점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1심 선고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위법 요소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재판부가 1심 선고 내용을 파기하고 집유를 선고하면서도 형기감량이 없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핵발전소 전문가들이 국내 원자력법의 위법사항들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이 주민들의 생명보다 우선한 재판결과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외신 '안기부법 개정' 대서특필 LA타임즈, 박총렬 씨 사건 등 인용

<LA 타임즈>는 지난 11월 30일 최근 국내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안기부법 개정에 관한 기사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테레사 와파나베 기자는 "김영삼 문민정부 들어 고문동 가혹수사가 종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기부 요원들에 의한 고문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 예로 전국연합 전 사무차장 박총렬 씨 사건을 상세히 보도했다.

'무장공비' 글 첫 공판 검찰, 엉뚱한 전력 시비

11일 오전 11시 서울지법에서는 컴퓨터 통신에 글을 띄워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윤석진(27) 씨의 첫 공판이 형사4단독(조병훈 판사) 심리로 열렸다. 윤 씨는 지난 9월 19일 컴퓨터통신 천리안의 시사비평 동호회 「회담터」에 '그들이 무장공비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띄웠고, 검·경은 이 글을 문제삼아 10월 31일 윤 씨를 국가보안법 상의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측 논지는 '윤 씨가 과거부터 반국가적 사고와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윤 씨의 글은 북한을 고무·찬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측은 윤 씨의 고무·찬양 혐의 입증 을 위해 그의 과거 전력과 그가 가지고 있던 책 등을 문제로 들었는데, 검찰은 "『세계철학사』 『역사적유물론』 『레닌저작선』 등의 서적을 탐독한 윤 씨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할 의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검찰측은 고무·찬양 혐의가 입증되지 못하더라도, 이적표현물로서 안기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씨는 89년 이적표현물

탐독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91년에 민간자당 정거농성으로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구독료 결산으로
한해를 시원하게>
지로번호:7618848

행사와 동정

- '96 인권시상식·한국교회 인권센터 창립축하회
·일시: 12월 12일(목) 오후 6시
·장소: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주최: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764-0203)
- 대천여성의 현실과 사회복귀를 위한 토론회
·일시: 12월 12일(목) 오후 2시-5시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
·주최: 한국교회여성연합회(708-4181)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총회 및 송년회
·일시: 12월 13일(금) 오후 2시-7시
·장소: 3차 대의원대회-종로성당 3층 강당(765-6105)
송년회-장안옥(763-7024)
·주최: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745-5872)
- 윤한봉 망명수기 <운동화와 똥가방> 출판기념회
·일시: 12월 13일(금) 저녁 7시 ·회비: 3만원
·장소: 경북국립 출판문화회관 3층(735-2701)
- 백기완 선생 시집 <아, 나에게도> 출판기념회
·일시: 12월 13일(금) 저녁 7시
·장소: 연세대 동문회관 3층 대회의실(361-4760)
·문의: 백기완 선생 시집 출판기념회 준비위(762-0017)
- 학술단체협의회 학술토론회 「국가보안법, 필요한가?」
·일시: 12월 14일(토) 오후 2-6시
·장소: 서초동 변호사회관
·주최: 학술단체협의회(771-0491)
- 제6회 박성희 학우를 돕기위한 일일주점
·일시: 12월 14일(토) 오후 1시-밤 12시
·장소: 회기 사거리 아기들리호프(962-0212)
·주최: 경희대 민주동문회(960-5650)
- 연극 <한 가족에 대한 보고서 2>
·일시: 12월 14일(토)-15일(일) 오후 3시, 6시 4회 공연
·장소: 노동선교 문화원 소극장
·주최: 인천 노동선교 문화원 극회 승결 (032-518-5944)
- 전국연합 인권위 12월 월례회의 및 송년의 밤
·일시: 12월 16일(월) 오후 6시30분
·장소: 이기욱 인권위원장 사무실(593-6501)
·주최: 전국연합 인권위(921-4090)
- 조광희 변호사와 배승현·정연순 변호사가 지난 7일부터 함께 새길합동법률사무소를 개소했다.
·주소: 서초구 서초동 1554-14 영웅빌딩 3층
·전화: 3471-4004/ 전송: 3471-2234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카드 판매
국제 엠네스티는 인권보호를 위한 캠페인 기금마련을 위해 연말카드를 판매한다. 카드는 모두 12종이며 가격은 5백원-9백원선. 문의: 053-426-2533
- 노인 자원봉사 전문교육교재 및 상담사례분석집 판매
한국노인의 전화에서는 노인복지관련 전문가 17명이 집필한 자원봉사 전문교육 교재와 한국노인의 전화 및 지지회에서 1년동안 상담한 내용을 통계처리하여 그 결과를 연구·분석한 상담사례분석집 1·2권을 판매하고 있다. 자원봉사 전문교육 교재는 7천원, 상담사례집은 3천원. 문의: 722-8007

제1회
인권영화제가
광주·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매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천주교 사제단 안기부법 개악 반대 신한국당 여론 무시한 채 법안 상정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이 마침내 국가보
안법 7조와 10조에 대한 대
공수사건 부활을 골자로 하
는 안기부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상정했다. 이 속에
서 천주교계가 안기부법 개
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
를 표명하고 나섰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
단(대표 장용주, 문규현) 소
속 4백52명의 사제들은 12
일 성명을 발표해 "정부가
안기부법을 개정하려는 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
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이
날 성명서를 다음주간 각
천주교 본당에서 신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으며, 국
회의원들에게도 이같은 입
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이날 성명을 통
해 "정부가 안기부 권한 확
대를 주장하는 것은 조직이
기주의의 발상이거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조성 여
건에 필요한 통제수단을 확
보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새로운 인권
탄압을 걱정케 하는 안기부
법 개정의도를 즉시 철회하
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
제단은 "안기부법 개악 철
화를 위해 양심적 인사 및
사회·시민단체들과 계속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시대국민회의(상
임대표 김상근 등)도 12일
성명을 발표해 "신한국당이
국민여론의 반대가 명확함

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을 강
행하려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기부법
개정 국회상정안을 즉각 철
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기부의 수사권 남
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형찬(26) 씨 사건과 관련
해 경기동부지역 대학생 13
명이 11일 새정치국민회의
당사에서 농성을 준비하던
중 전원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입건처리된 것
으로 알려졌다.

KNCC 10회 인권상 고나카지마 목사 수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의와 인권위원회는 12일 오후
6시 기독교회관에서 올해
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로 열번째를 맞는 인
권상 수상자로는 74년 '한
국문제 기독교인권회의'를
구성, 91년까지 17년동안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힘써
온 고나카지마 마사아키
목사가 선정되었다.

민변, 노동자 공동변호인단 구성 노동법 개정안 철회 거듭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노동법 개정투쟁
과정에서 구속 또는 민사상 피해를 입게 될 노동자들의 공동변호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전국의 변호사 1백64명은 12일 「노동법 개정에 즈음한
노동자 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고 정부가 노동자들을 탄압할 경
우, 이들을 위한 법적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법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가 근
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노동법의 개악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의견을 표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가로막는 사회는 이미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다. 정
부가 노동계의 당연한 의견표출을 설득력 없는 형식적 실정법 논리로 가두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이를
강경진압하여 노동자들이 대량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변호인단은 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면서 그 피해를 수습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변은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
보다 노동법 개정의 출발점이었던 '개혁'이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어 급기야 실종된
것에 기인한다"며 "다시 한번 정부에 대하여 노동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방침의 철회
를 요구하고, 노사관계법이 개혁의 관점에서 노동법 원리와 국제적 기준 및 규범에
적합하게 개정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정부가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
을 의결한 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국내 노동계가 총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오
늘 민주노총은 시한부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탄압일변의 강경
대응방침을 공언하고 있어 대규모 구속과 손해배상소송 제기 등 노동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96년 한해도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결산으로
시원하게
마무리합시다
지로번호:7618848

환자 1천 명당 의사수 1.2명 OECD 국가와 우리나라 복지수준 비교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바
에 따르면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작년 경제성
장률은 9%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의료 등 사회복지 측
면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번
통계청 발표는 OECD 가
입국중 일부 선진국가와만
비교하고 있어 전체 가입국
에서 어느 수준인지는 알수
없었다.

제조업 근로시간 여전히 높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나라 제조업 주당 평균근
로시간은 90년 49.8시간, 94
년 48.7시간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OECD국가
대부분이 주 40시간 전후의
근로시간을 보이고 있는 것
에 비해 여전히 근로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의 경우 94년 42시간, 일
본 37.6시간, 프랑스는 38.7
시간이었다.

1천 명당 병상수 4.1개
인구 1천 명당 병상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84년 2.3
개이던 것이 94년 4.1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다른 국
가들은 우리보다 높은 병상
수를 기록했다. 일본은 15.6
개(93년) 프랑스 9개(94년)
스위스 20.8개(91년) 등이
다. 또한 인구 1천 명당 의
사수는 94년 1.2명인데 비
해 일본은 1.8명, 프랑스
2.9명, 스웨덴 3명으로 조사
된 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35.9명으로 비교
국 중 가장 높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 32명
교사 1인당 고등교육학생
수를 보면 96년 현재 32명
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
들보다 교육여건이 뒤지고
있었다. 이탈리아 28명(93

년), 영국 17명(92년), 미국
17명(93년), 일본 16명(91
년), 오스트리아 9명(93년)
이다.

국내총생산 상위,
GDP 대비 교육비 지출 하위
국내총생산(GDP)은 94년
현재 우리나라가 9위인 것
으로 나타났으나 GDP 대
비 교육비 지출은 선진국보
다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
다. 93년 기준으로 캐나
다 7.3%, 미국이 6.8%, 일
본이 4.9%, 프랑스가 6.1%
등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3%(95년)로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94년 11월 삼성경제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OECD 가입국 25개국과 비
교할 때 1인당 공교육비는
23달러로 23위, 교사 1인당
학생수 25명으로 26위, 환
자 1천명당 의사수는 0.73
명으로 꼴찌인 26위를 차지
했다.

민가협 창립 11주년 기념 목요일집회 열려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
법 철폐를 위한 제162회 목
요일집회가 12일 오후 2시 탑
골공원 앞에서 열렸다.

이번 목요일집회는 민가협
창립 11주년 기념 집회로
송갑석(전대협 4기 의장)
씨는 "지금도 감옥에는 39
년째 수감중인 우용각(68)
씨를 비롯해 60여 명의 장
기구금 양심수들이 각종 절
명과 싸우며 자유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양업(민가협 상임
의장) 씨는 "민가협은 이땅
의 양심수가 모두 자유로워
지는 날까지, 인권이 바로
서는 날까지 계속해 싸우나
가겠다"고 약속했다.

<인터뷰>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기도 김형찬씨 변호인접견권 요청하자, "웃기지 말라"

지난 5일 안기부의 불법연행·가혹수사에 항의해 분신
을 기도한 김형찬(26·수원 경희대 유전공학과 90) 씨
사건은 안기부 불법수사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
었다. 현행 안기부법상 병역법 위반, 국가보안법 제7조
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거침없
이 불법수사를 벌였다. 현재 김 씨와 그의 가족은 안기
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또한 전국연합
등 인권단체들도 권한남용죄, 불법체포, 감금죄등의 형
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12일 오전 대치동 순화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김형
찬 씨를 만나 보았다. 두팔과 허반신 전체에 3도 화상
을 입은 그는 고열과 통증으로 밤에 거의 잠을 못이룰
정도라고 한다.

- 연행 당시 정황을 다시한번 말해주었으면
= 후배 자취방에 있는데 안기부 직원이라고 밝힌 4명
의 사람들이 다짜고짜 수갑을 채웠다. 항의하자, 때리면
서 곧바로 신당 6동 파출소로 끌고갔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내밀며 "너, 이제규(경인총련 의장 직무대행)
맞지 않나!"며 다시 구타를 했다. 수사관은 왼쪽눈 옆
한부위를 주먹으로 10차례나 때렸는데 너무 아파 입이
벌어질 정도였다.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수하게 발길질하면서 '무조건 불라'고 말했다. 목비권
을 행사하자 억지로 지문을 찍더니 '지문조회를 했으니
다 나올꺼다. 빨리 불어라'고 다시 협박했다. 지문조회
를 통해 군도피 증인게 밝혀졌는데, 그것을 꼬투리잡아
'1년간 뒤 했냐, 복에 갔다왔지? 간첩아냐'고 했다.

-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옮겨져 안기부 직원에게 변호
인접견을 요청하며 들어주지 않으면 분신하겠다고 말했
다고 하던데

= 3층 여자피의자실로 옮겨져 빨리 불라는 협박에 '변
호사를 내달라. 그전에는 아무말도 않겠다'고 하자 '웃기
지 말라'고 반응했다.

- 당시 심정은 어땠나. 분신을 하면서 죽을지도 모른
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그 방법 밖에 없었나

=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사진 한 장 갖고 오인
해 무고한 사람을 때리고, 다시 꼬투리를 잡아 간첩으
로까지 몰고가는 것이 그렇게 억울할 수 없었다. 그래
서 어떻게든지 사실을 알려주겠다고 생각했다. 많은 생
각을 했다. 창밖으로 뛰어내릴까 생각도 했지만 석창살
이 쳐져있어 불가능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 최근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안기부
법 개악 움직임에 대해 드는 생각은

=누구나 그걸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나서질 못했다.
진짜 막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꼭 같이 막았으
면 한다.

김 씨의 가정형편은 그다지 넉넉한 편이 아닌데다 8주
진단에 2-3차례 수술하게될 상황이어서 병원비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의료보혜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병원비만해도 월 1천2백만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희대 총학생회, 동문회를 중심으로 모금운동에
나섰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제1회 인권영화제가 광주·부산·구리·고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 14일 국보법 관련 학술토론회 열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국보법)을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무수할 뿐 현실적인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보법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고, 김영삼 정권하에서 관계는 어떠한가를 짚어보고, 현실적인 폐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오후 2시부터 학술단체협의회는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국가보안법, 필요인가?"라는 주제 아래 학술토론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국보법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김영규, 인하대) '자유민주주의와 국보법'(이창호, 경성대) '문민정부하에서의 국보법 남용사례'(한택근, 민변)가 발표된다.

시민·사회단체 한자리에 1부가 국보법은 과연 필요인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짚어보는 자리라면, 2부는 국보법 폐지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보는 자리로 이어진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국보법,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는 제목 아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의 기조발제 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토론으로 이어진다.

그는 발제문에서 90년대의 국보법 철폐운동이 상설적 연대기구운동의 결성으로 계속되어 왔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남겼다고 지적한다. 첫째, 국보법 폐지운동의 광범위한 연대와 중심점이 형성되어 있지 못했고 둘째, 국보법 폐지운동에 일반국민을 끌어들이지 못했으며 셋째, 국보법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전문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90년대 철폐운동 비판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철폐운동을 제안하면서 우선적으로 지적한 것은 "국보법 문제는 철저히 '인권'의 언어를 갖고 '인권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인식 아래 "철폐를 주장하는 단민운동권뿐만 아니라 개정을 주장하는 세력까지를 전략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단위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학자들을 중심으로한 국보법 연구팀 구성 △활동가·변호사·학자들로 국제로비단을 구성하여 UN과 외국 인권단체들에 대한 로비 진행 △상설적 국보법 소송추진단 구성 등을 꼽았다. 또한 피해사례를 널리 수집하면서 끊임 없이 헌법소원, 제심, 손해배상소송, 고소·고발 등 업무를 체계적·일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씨는 이러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보법 철폐만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운동단체가 필요하다고, 전담체 구성을 제기할 예정이 다.

의미있는 승리, 풀리지 않은 과제 경원대 송광영 추모비 재건립

13일 오후 경원대학교에서는 의미있는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오후 2시부터 전국유가협 회원과 성남지역 민주인사, 경원대생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광영 열사 추모비 재건립식과 장현구 씨의 1주기 추모식이 열린 것이다. 송광영 추모비 재건립식은 80여일 간의 투쟁을 승리로 마감하는 자축의 장이었다. 특히 추모비 탈취 직후부터 81일간 밤샘농성을 벌였던 박정기 회장 등 유가협 회원들의 노력이 이번 승리의 밑거름이었다는 데 대해 참석자들은 뜻을 같이했다. 이날 재건립된 추모비는 기존의 추모비에 '이 추모비는 탈취 61일 만에 되찾은 것입니다'는 문구를 새로이 새겨 넣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추모비가 개막되는 순간 감격이런 표정으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추모비 건립식에 이어 장현구 씨 1주기 추모식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앞서 추모비 건립식의 자축 분위기와 달리, 장현구 씨 1주기를 맞는 경원대생들의 표정은 착잡하기만 했다.

추모비는 원상복구됐지만 징계와 고소·고발당한 학생들의 원상회복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고, 장 씨 분신 이후의 학원민주화투쟁도 별다른 성과없이 1년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유원목 부총학생회장은 "추모비 원상복구투쟁에서 보여준 유가협 어른들의 노력을 귀감 삼아 학원민주화투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후고꾸, 징계·탄압 여전 조합원 하루종일 청소·유리창 닦기

한국후고꾸(사장 권순목)에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와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후고꾸는 지난 9일 조합원 지은경(25·점사반) 씨를 해고하는 등 8명을 징계 조치했다. 이번 징계는 9월 20일 이후 다섯번째 징계이며, 이로써 현재까지 해고 6명을 포함해 총 40명(중복자 포함)이 징계를 당했다.

한광수 노조 사무장은 "회사측이 지은경 씨가 롯데케논이라는 회사에 다녔던 경력을 은폐했다는 사유로 해고했다"며 "사상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징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측은 10월 14일부터 현재까지 핵심조합원 40명의 공장출입과 작업참여를 막고 있는데, 회사는 이들에게 유리창닦이나 건물주변 청소, 불량품 선별 작업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용역회사 출신 경비들에 의한 통제가 계속 되고 있으며, 사측은 노골적으로 조합원들의 사직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철·김성만 씨 등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 세계인권선언일과 인권주일에 맞아 벌인 이번 서명작업에는 김수환 추기경(서울대교구장), 윤공희 대주교(광주대교구장)를 비롯해 전국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참여했다.

천주교인권위는 무고하게 갇힌 양심수들이 성탄절 전에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13일 양심수 석방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천주교 인권위는 "박노해 씨를 포함한 4명의 무기수들을 비롯한 황대권(20년), 조상록(무기), 손유희(20년), 서경원(10년) 씨등 양심수들이 석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

여성임금 남자의 59.9% 대졸임금, 고졸의 약 1.5배

통계청은 최근 『생활 속의 통계』 시리즈중 '인구·노동·가계'를 발간했다. 노동편을 보면 15세이상 인구중 경제활동인구는 85년 15,592천명에서 33.4%가 증가한 20,797천명(95년)이고, 청소년층은 85년 17.5%에서 95년 현재 11.9%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고령자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9.1%로 85년에 비해 9.8% 늘어났다.

근로자의 전 산업 주당평균근로시간은 44.7시간(제조업 49.2시간)으로 85년에

비해 4.2시간(제조업 4.6시간) 줄어들었다. 또한 여성 평균근로시간은 85년 52.8시간(남자 50.5시간)으로 95년 47.1시간(남자 47.9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남녀별 임금격차는 85년 남자 32만8천원, 여자 15만8천원으로 여자임금은 남자임금의 48.2% 수준이었으나 95년 현재 남자 105만원, 여자 62만8천원으로

남자임금의 59.9%로 남녀간 임금격차가 11.7% 정도 줄어들었다.

학력별 임금격차는 고졸 임금을 100으로 할 경우 중졸이하가 85년 79.3% 수준에서 95년 현재 90.9%이었고, 초대졸은 129.5%에서 108.7%, 대졸이상은 214.7%에서 146.8%로 학력간 임금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간행물○

-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한국인권단체협의회(522-7284)**
· 주요내용: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개발독재와 인권/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등 240쪽
- **현장에서 미래를 12월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874-2933)**
· 주요내용:평온했지만 오산한 승리-미국 '96년 대선/노동운동가평전(2)-베르너 포미/울산지역 노동운동의 현주소/독일의 뜨거운 가을 등 170쪽
- **민족예술 12월호-민예총(743-5872)**
· 주요내용:정기국회 문제공위 국정감사/윌러스타인의 세계제론/동성애자인권운동, 그 불가능한 현실의 가능성에 대하여 등
- **자료집:매춘여성의 현실과 사회복귀를 위한 토론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743-5872)**
· 주요내용:매춘여성의 현실과 사회복귀를 위한 대안책/매춘여성을 위한 정부, 민간단체의 현실과 전망/청소년 가출예방과 사회의 책임 등 86쪽
- **한울노동법강좌 18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
· 주요내용: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판례1- 과로인한 뇌출혈, 근로강요 없으면 책임 없어 등 65쪽
- **노동운동과 정치-현장에서 미래를(874-2933)**
· 주요내용:노동자 정치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80년대 이후 한국의 노동자 정치운동/노동자 정치운동의 과제와 전망 등 232쪽
- **이문옥 감사관의 의로운 투쟁-참여연대(797-7413)**
· 주요내용:계별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폭로/이문옥의 사회활동 등 353쪽
- **열사희보 제2호-민족민주열사 추모연대회의(742-3180)**
· 주요내용:OECD가입과 과거청산/문민정부시대에 탈취당한 열사의 추모비/연대회의 4차 총회 등 27쪽
- **나눔의 집 제9호-나눔의 집(0347-64-0064)**
· 주요내용:원당리 가셋골 1주기/할머니 동정/이름을 바르 쓰자-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등 8쪽
- **함께가는여성 12월호-한국여성민우회(269-5763)**
· 주요내용:윤락행위방지법의 실효성에 관하여 등 20쪽
- **철도노조민주화 지원연대 제10호-철도노조민주화 지원연대(835-2793)**
· 주요내용:지원연대 창립 1주년 정기총회 등 2쪽

· 많은 사람들이 추위 속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후원바랍니다.
· LG 해고자 심한기, 이동열 단식농성 35일째
· 전농 부의장 이장호 단식농성 6일째
· 권보조 정태숙 등 29명 단식농성 4일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 8

일시: 12월 15일(일) 오후 5시
주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한양대총학생회
주최:한겨레신문사 문의: 763-2606

제1회
인권영화제가
18-22일 제주에서
열립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침해 진상규명운동 첫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민변등 15개 단체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화살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16일 오전, 한편에서는 진정한 과거청산과 인권신장을 위한 국민위원회가 발족을 알렸다.

민변·인권운동사랑방·한국교회 인권센터 등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과거청산 국민위, 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목사 등)는 △인권침해 진상규명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요구 운

동 △과거 부정적인 제도와 법령에 대한 개폐운동 등을 골간사업으로 잡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18 재판과 관련한 재판모니터링, 사면반대운동, 인권피해자 신고센터 개설, 5·6공 피해자 배상입법운동 및 집단소송제기 등이 있다. 또한 5·18특별위원회와 의문사등 과거 인권유린 사건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등을 조직할 예정이다.

상설기구인 과거청산국민위는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국, 각 소위원회, 후원회를 두고 있다. 아직까지 집

행위원장, 사무국장은 선임되지 않았으나 97년초 열리게 될 총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근간사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임시적으로 한국교회 인권센터 안에 있다.

과거청산국민위는 이날 발족선언문을 통해 "과거 독재정권 아래 저질러진 모든 불의를 철저히 파헤치고 이를 바탕으로 무너진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인권유린의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심판하고 이들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추진하며, 이러한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는 과거청산국민위로 합류되었다.

주요공판안내

- 17일(화) 고대규,국보법(찬양·고무등),오전10시,합의21부,311호, 선고 김영,국보법(장입·탈출등),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강형식,국보법(찬양·고무등),오전10시,합의21부,311호, 신진 송민규, 국보법, 오후2시, 9단독, 317호, 신진 권영길, 제3자개입등, 오후2시, 3단독, 320호, 속행
- 18일(수) 서형준, 국보법, 오후4시, 4단독, 524호, 속행 이세휘,국보법(찬양·고무등),오전10시,합의22부,319호, 선고 성두현, 김우용, 정성우, 문용주(이상 노건주), 국보법(찬양·고무 등),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신진 윤석진, 국보법, 오전11시, 4단독, 524호, 속행
- 20일(금) 백주선,국보법(찬양·고무등),오전10시,합의23부,311호, 속행 문숙희, 국보법(편의제공), 오후2시, 합의23부, 311호, 신진 실증호의 10인(이상 한총련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오후2시, 23부, 311호, 속행 박병철·김미정·유현수, 국보법,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속행·신승우, 국보법, 오후2시, 5단독, 519호, 신진 윤용배,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오후2시, 10단독, 525호, 속행 -이상 서울지법 형사부

민주노총 17명 식발농성 사회개혁범국민대책위 비상시국농성 돌입

권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 17명이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해 16일

17일 현재 LG 해고노동자 이동렬, 성한기 38일째 단식농성

머리를 삭발하고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안 강행통과를 시도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각 사업장에서 매일 중식집회를 개최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명동농성 돌입에 이어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태등, 범국민대책위)도 16-18일까지 명동성당에서 '노동법 개악저지 및 민주기본권 수호를 위한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했다.

5·18재판 결과 납득안가 전국연합 성명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6일 전두환 씨 무기감형 등 12·12, 5·18 내란화살 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고 국민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양형"이라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내란목적살인을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판결이지만, 우리 역사에서 벗어난 참상과 비극, 국민들의 역사청산을 향한 끈질기고 힘겨운 노력, 참회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피고인들의 파렴치한 행태 등을 감안할 때,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모든 매체물 심의·규제 97년 7월 문체부 내 청소년보호위 설치

영화법 위헌판결에 환호했던 문화예술계가 다시한번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다. "영화·음반·비디오·만화·방송·소설·광고 등 모든 형태의 매체물을 심의"(청소년 보호법 7조) "그 심의결과에 따라 매체물의 판매·대여·방송·공연·전시 등 모든 유통수단을 규제"(동법 14조-20조) "이 모든 사항을 문화체육부장관 소속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담당"(동법 27조)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보호법)이 지난 11일 국회 문체공위의 의결을 거쳐 오늘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기부법·노동법 개악이라는 거대 쟁점에 묻혀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창작·표현의 자유를 또다시 유보·규제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신한국당안과 국민회의안을 통합·절충하여 마련한 이번 청소년보호법안(대안)의 주요조항은 다음과 같다.

·서화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 ⑧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을 대상으로 두고 있다.

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 기준 자의적 규제가능 또한 보호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음란물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이 법안은 음란문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모든 창작물을 심의·자의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1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는 ④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⑤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등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인 사전심의 부활 우려 실질적으로 보호법은 행정기관의 사전심의를 부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결정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12조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기기기관(오락기·편집자주) ③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④음성정보·영상정보·문자정보 ⑤방송프로그램중 교육·음악·오락·연예물 ⑥신문, 잡지, 만화·사진첩

주간/인권/호/름 (96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 <9일>(월) 민주노총 1천여 명 9, 10일 서울 상경투쟁/한국후고부, 조합원 지은경 씨(해고)등 8명 징계/일본군의 독가스탄에 의한 중국인 사상자와 유족 13명, 일본에 손해배상 제기
- <10일>(화) 전국연합, 민변등 20개 단체 회원 신한국당사 앞에서 안기부법 개정 반대시위/경실련등 4개 시민단체, 정부의 노동법 졸속처리 반대입장 밝혀/정부, 노동법안 의결/한겨레21 조사, 노동법 개정안에 국민의 62.9% 반대의사/한국노총·민주노총,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저지 연대투쟁키로/국민회의, 영화진흥법 개정법률안등 3개 영상관련법 개정안 국회제출/보안관찰자 조사이유로 출국금지명령 받은 서준식 씨 법무부장관 상대로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소송등 신청/48차 세계인권선언일/군대위안부 한 한국할머니가 아시아평화기금 2백만원 받을 의사 밝혀
- <11일>(수) 광고규법 형사부, 영광해발전소 5·6호기 추가건설 반대로 구속된 박재환 신부등 6명에게 8월-1년6월 선고/통계청 발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 OECD 29개 회원국중 하위/전교조, 고원지위법 입법철폐 요구/경인총련 소속 대학생 13명 여의도 국민회의 중앙당사 앞에서 안기부장 사퇴등을 요구시 위중 연행, 이중 김기창(31·경기 성남시) 씨 13일 집시법 위반등으로 구속/보건복지부 96년 보건복지통계연감 중 전염병 통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유엔아동기금 보고, 전세계 어린이 20%가 미취학, 대부분 노동에 종사/세르비아의 반정부 시위사태 23일째 맞아 노동자들의 가세로 더욱 확대/일본 자민당등 3당, 시민활동촉진법안 마련해 국회 제출
- <12일>(목)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 간첩혐의로 구속된 정수일(62) 씨에게 징역15년 선고/서울지법 북부지청, 한총련 연세대 시위로 불구속 기소된 정우영(22·광운대 전기공4) 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KNCC, 10회 유엔인권행방해치사등의 혐의를 추가 선정/한국교회 인권센터 창립식/통계청 발표, 여자임금 남자임금에 비해 59.9%/YMCA 여당의 영화진흥법 개정안 영화사전심의 위헌결정에 위배된다고 지적
- <13일>(금) 전국농민 2천여 명 여의도광장에서 쌀 수매가 인상과 의료보험제 통합을 위한 농민대회 열어/경찰, 신영복 교수의 「나무야 나무야」 출판기념회 놓고 정보사찰/노동부 천안 지방노동사무소, 노조설립에 나선 근로자 10여 명을 부당 해고한 혐의로 천안시 우성택시 대표이사 박철 씨 구속/민주노총, 13일 갖기로한 시한부 총파업을 유보하고 노조별로 점심시간에 노동법 개악구탄 집회 열어/한국경영자총협회 발표, 금융업 퇴직금 제조업의 2배/법무부, 정부 98년경 헌법기관으로 국가인권위를 설치예정/일본 고베시, 직원채용시험의 국적조항을 내년부터 거의 전면 폐지키로
- <14일>(토) 학술단체협의회등 국가보안법 학술토론회
- <15일>(일) 제8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한양대 종합체육관에서 열려/대법원, 전국 각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전담 법관 22명 확정/법무부, 형사소송법 규정에 '미란다 원칙'을 준수등 조항 신설/코피 아난 현 유엔 평화유지활동 담당 사무차장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확정

제1회
인권영화제가
18-22일 제주에서
열립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국제기준 거스르는 한국노동법

휴먼라이츠워치 97년 인권보고서 지적

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위치)는 최근 발표한 「97년 세계인권보고서」 한국편을 통해 「한국정부의 억압적인 노동법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등 국제인권기준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엔 표현과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권을 부정하는 4개의 주요 법률이 남아 있다」며 복수노조금지, 제3자 개입금지, 교사 노조결성권 금지,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강제조정명령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또 불교인권위 공동의장인 진관 스님의 구속을 예로 들며 「국가보안법과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인권활동을 제약하는데 이용되어 왔다」고 보고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7월 한총련 연세대 사태와 두 전직대통령의 재판이 96년 한해동안의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고 소개했다. 보고

서는 「학생들의 폭력이나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 모두 비난받아야 한다」며, 「평화 시위일 수 있었던 것을 불법화한 김영삼 대통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전직대통령의 재판의 경우, 「전 씨 사형선고나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 여부, 검찰 독립성의 침해 등은 문제점으로 제기된다」고 평가했다.

부당하고 항의 분신 하청업체 노동자 1명

전남 광양제철 협력업체인 전남기업 소속 노동자 정성철(26) 씨가 회사측의 부당하고 항의하며 16일 오전 분신해 현재 광양 조선탄 부속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다. 정 씨는 평소 노조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는데, 회사측은 정 씨를 지시불이행과 현장이탈 등의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의 분신에 따라 금

속연맹 광주전남지부 등 지역 노동단체들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안기부법 개악 반대 실천불교승가회

실천불교승가회(공동 의장 청화·지선스님)는 17일 안기부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성명을 발표했다. 실천불교승가회는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통해 전국민은 또다시 정치사찰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내년 대선에 있는 상황에서 현정부가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법 개악을 강행하려는 것은 과거 독재권력과 전혀 차별성이 없는 반국민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매매춘 최소화 방안 마련 토론회

매매춘 여성 4천9백여명...정부·민간단체 연대 필요

매매춘은 없앨 수 없는 것인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지난 12일 오후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매매춘 여성의 현실과 사회복귀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했다.

동두천지역에서 매매춘 여성 1백29명과 함께 9년째 생활해 온 전우섭(다비타의 집 대표) 목사는 「매매춘은 없애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매춘을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매매춘 정책이 실패한 대표적 사례 중에서 95년 5월 방화사건으로 53명의 사상자를 낸 매매춘 여성 수용시설인 경기도 여자 기술학원을 들었다.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해야 할 매매춘 방지대책안을 제시했다.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의 문제점은 다른 매매춘 여성 수용시설에서도 한결같이 나타나는데 이는 97년 전북 남원에 신축될 매매춘 여성 선도 보호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전 목사가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조직체계의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은 직원 중 사회사업을 전공한 인력과 프로그램 내용은 빈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시설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현장에 있는 민간단체들이 연대해 매매춘 전문위원회 구성, 전문가 양성 등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밖에도 향락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호가 필요한 여성은 매매춘 여성 4천9백2명, 가출여성 3천5백89명, 미혼모 1천7백60명, 모자 가정 5만4천19명 등 모두 6만4천2백7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부녀직업보호소는 전국 22곳인데 이중 매매춘 여성만을 수용하거나 상대하는 직업보호소는 전국에 2곳 뿐이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저항정신 아쉬워

장호순(언론학 박사,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연구원)

최근 밀가루 복송보도와 관련한 시사저널 기자의 구속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다시한번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장호순 씨가 느낀 우리언론의 자화상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지난 해 10월, 8명의 지역신문 편집자 및 기자들과 함께 수도 워싱턴의 흑인거주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간 신문인 Washington Informer를 방문했다. 빈민가 상가지역에 위치한 이 신문사의 사무실은 그곳 바로 전에 방문했던 Freedom Forum의 호화스러운 옹집실과는 전혀 판판이었다. 우리 일행이 앉을 공간도 없어 기자들 책상사이에 선 채로 대화를 나누어야 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지와 같은 큰 신문이 외면하는 가난한 흑인들의 건강한 삶을 보도한다는 자부심을 그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Washington Informer의 좁은 사무실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남아공의 흑인지도자 넬슨 만델라의 사진 밑에 걸려있는 "Freedom is not free"라는 구절이었다. 60년대 인종평등을 외치며 싸웠던 민권운동가들이 동료 흑인들에게 참여를 권유하며 사용한 구호였다. 워싱턴 다음에 도착한 버지니아 주 산악지대 타즈웰 카운티의 리치랜드라는 작은 도시의 한 신문사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구호가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영어가 서투른 일행 중 한 명이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한 듯 그 뜻을 확인하기 위해 필자에게 물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유는 싸워서 얻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자유란 얻기 위해 그리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구호였다.

자유는 싸워서 얻는 것

우리 현대사에도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발자취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언론계에서는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의지가 실종되고,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팽배해졌다. 그렇다고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단지 군사독재 시절의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탄압이 사라졌을 뿐 언론의 진실보도를 방해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무인정찰기 부대 창설"과 관련된 보도에 대한 기무사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기자에 대한 수사, "분유 발암물질" 보도와 관련한 SBS 기자의 수사, 그리고 밀가루 계공실과 관련한 시사저널 기자에 대한 수사 등은 새삼 우리가 현재 누리는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데에만 적극적일 뿐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한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최근의 언론보도와 관련한 검찰수사에 대해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은 최소한의 사실보도에만 그치고 적극적인 논평을 삼가했다. 시사저널 기자의 불구속 결정 직후 비교적 적극적인 논평과 해설이 게재되었지만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장단을 맞추는 정도에 불과했다. 군사독재가 사라진 마당에 모든 언론에 동시적으로 재

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흔치 않을 것이다. 대신 언론 통제는 각계전투의 양상을 띤다. 가장 허약한 상대를 표본으로 골라 본대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정 언론에 대한 위협은 특정 언론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진실보도를 두려워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피해자는 특정 언론인이나 언론사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알권리가 제약받는 모든 국민이 궁극적인 피해자인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는 언론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할 임무만큼이나 국민의 알권리가 위협당할 때 앞장서 싸워야 할 의무가 있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때 침묵하고 외면하는 언론은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이다.

침묵하는 언론 만들기 작전

언론자유 침해에 대해 여태껏 우리 언론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사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개별 언론사에 대한 억압과 규제를 언론자유 원칙에 대한 도전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회사가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외면해왔다. 당사자들도 나만 살면 된다는 식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무마해왔다. 언론 자유의 영역이 확장되기는커녕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권수호를 위한 연대의 중요성은 2차대전중 나치수용소에서 사망한 한 목사의 시귀절 속에 잘 담겨져 있다.

먼저 그들이 유대인을 잡으려왔을 때/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었다.//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려 왔을 때에도/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었다.//그들이 노조원을 잡으려왔을 때에도/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나는 노조원이 아니기 때문이었다.//결국 그들이 나를 잡으려왔을 때에는/아무도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없었다.

이제 우리 언론계도 "Freedom is not free"라는 각오를 다지며 진정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그리고 독재정권에 저항하여 희생당한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상호 연대하고 협조하여 언론자유를 제도화하는 법정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끝)

김형찬씨 불법수사 관련해 인권단체등 안기부 고발

이동균(경희대민동 회장) 씨와 이기욱(전국연합 인권위원장) 변호사등 6개 인권단체 대표등 7명은 지난 5일 안기부의 가혹수사에 항의해 분신을 기도한 김형찬(26·경희대 수원캠퍼스 유전학과 4년) 씨 사건과 관련해 권영해 안기부장과 김 씨를 연행·조사한 안기부 직원 4명, 수사지휘 책임자등 6명을 16일 오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동균 씨는 고발장에서 "이들은 김 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안기부법상의 권한남용죄, 형법상의 불법체포, 감금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기부장의 경우 이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범죄행위에 대한 묵인·방조 혐의를 밝혀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18일 현재 LG 해고노동자 이동렬, 성한기 39일째 단식농성

'96 인권 10대 뉴스 선정에 여러분의 참여를

여러분이 선정하는 인권 10대 뉴스는 올해 인권지표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96 인권 10대 뉴스 선정은 설문지(별지)를 참고하십시오. 마감은 20일 오전입니다.

제1회
인권영화제가
18-22일 제주에서
열립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안기부의 신원조치를 빌미로 여권발급이 늦어 피해를 입었다며 화가 홍성담(41) 씨가 제기한 "출국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홍성담 씨는 지난 8월 국제 엠네스티(AI)의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안기부가 신원조치를 이유로 여권발급을 할당이념도록 지연시켜 출국하지 못하여, 8월 12일 영국에 건너 버려 국제 페스티벌에서 열린 그의 전시회와 스포츠랜드 글래스고우시의 환영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홍성담 씨의 여권은 행사가 다 끝난 8월 20일에야 발급되었다.

행사 끝난 뒤 여권발급 이번 사건의 원고측 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해외여행의 자유를 박탈당할 근거는 없다"며, 안기부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이라는 직무(국가안전기획부법 제3조 제1항 제5호)가 과연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여행의 자유를 침해해도 좋은 것인지에 대해 의

문을 제기했다. 또한 "출입국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신원조치를 빙자해서 고의로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검찰청 공무부(공의법무관 김성수)측은 "원고의 경우 89년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죄로 구속되어 유죄 선고를 받은 전력자이기 때문에 여권발급시 안기부의 신원조사는 당연하다. 이같은 신원특이자에 대해 신원조사기관이 최소한 경찰청과 안기부 두 곳 모두일 수 밖에 없으므로 60일 이내 신원조사결과를 통보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여권발급신청서등에는 신청인의 출국예정시기를 기재하지 않았기에 그 시기를 알 수도 없으며 굳이 알 필요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신원특이자 신원조사 60일 한편, 홍 씨측이 영국에서 받은 공식 초청장과 서신, 영국 현지 언론보도 등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법 민사42부(민사합의 42부 부장판사 정은환)는 출입국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AI

의 초청장이나 글래스고우시의회 서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공식초청 의사를 무엇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AI의 동아시아 담당자 클레어 맥베이 씨는 재판부의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AI가 홍 씨를 공식초청했음을 재확인 하는 AI 사무총장 명의의 서한을 17일자로 보내왔다.

재판은 20일(금) 오전 10시 서울지법 민사법원 562호에서 속행된다.

과천시청 뇌물사건 무죄 수사과정 가혹행위 인정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성환(58) 과천시청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심리로 열린 과천시 뇌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23시

간 이상 잠을 재우지 않은 채 무리하게 조사하는 등 가혹행위가 인정된다"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시장과 징역 2년에서 3년이 선고된 하기동(43·과천시 건설과 직원), 손성오(40·과천시 건설과장), 유철중(50·과천시민회관 서무과장)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기부법·노동법 개악저지 민주노총·전국연합 집회

신한국당의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강행통과방지에 맞서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은 공동으로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가졌다. 두 단체 회원 5백여 명은 이날 낮 12시 여의도 대림대지니언어빌딩 앞에서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40여 분간 가진 뒤, 신한국당 당사 앞으로 이동해 1시간 여 동안 항의시위를 벌였다. 신한국당은 출입문을 봉쇄하고 진경들을 동원해 당사 주변을 차단했다.

한편, 안기부 수사요원에 끌려가 폭행수사를 받던 중 분신한 김형찬(경희대 수원 캠퍼스 유전공학 4년) 씨 사건 해결을 촉구하며, 대학생 등 2백여 명이 명동성당 농성에 들어갔다.

인권 10대 뉴스는 올해 인권지표입니다.
서두르십시오. 96 인권 10대 뉴스 선정은 설문지(별지)를 참고하십시오. 마감은 20일 오전.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706-6175
통신: rights(천, 하) 인권사랑(나우누리)

**18일 현재 LG 해고노동자
이동철, 성한기 40일째 단식농성**

<출소 장기수 김인서씨의 북한 딸 편지> 일흔돌 생일상만은 차려 드리리라 기대했건만...

재일한국인인권협회 운동원 씨는 지난 주 인권운동 사랑방 앞으로 출소장기수 김인서 씨의 만딸 김희심 씨가 김인서·함세환·김영태 송환추진위원회 앞으로 보내온 편지(복사본)를 우편으로 보내왔다. 11월18일은 김인서 씨의 일흔번째 생일이었는데, 단 한번도 생일상을 차려주지 못한 딸의 마음이 잘 담겨있다. 맞춤법만 수정했다<편집자주>.

인도주의를 귀중히 여기는 귀 단체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 김인서의 만딸 김희심입니다. 지난 여름 뇌출혈로 사경에 처하셨던 저의 아버님이 선생님들과 남녘 동포들의 따뜻한 보살핌에 의하여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다니 그 고마움에 무슨 말로 어떻게 감사드렸으면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선생님들의 그 노고를 언젠가까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들, 오늘 11월 18일은 저의 아버님의 일흔돌 생신날입니다. 평생을 고생 속에 살아오신 아버님이, 더 우기 긴긴 세월을 옥중에서 고독하게 보내신 아버님이 자식들이 차려올리는 일흔돌 생일상이야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버님께 일흔돌 생일상만은 우리 자식들이 차려 드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던 것이 성의껏 준비해

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도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이 한시바빠 실현되어야 할 초미의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데 왜 남조선 당국자들은 저의 아버님의 귀향길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해외동포들의 초청으로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남쪽의 불교인권위원장인 진관스님이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문제를 하여 남조선 당국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포들은 물론 독일의 교인들까지도 그에 격분을 금치 못해 하였습니다.

어제는 뇌출혈로 중태에 빠져있는 아버지를 구원하러 나가겠다는 자식들의 남행길을 가로막고 오늘은 또 동족의 불행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는 교인들까지 구속하는 남조선 당국의 행위가 말로 고금동서에 없는 비인도주의적인 처사입니다.

선생님들, 오늘 11월 18일은 저의 아버님의 일흔돌 생신날입니다. 평생을 고생 속에 살아오신 아버님이, 더 우기 긴긴 세월을 옥중에서 고독하게 보내신 아버님이 자식들이 차려올리는 일흔돌 생일상이야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버님께 일흔돌 생일상만은 우리 자식들이 차려 드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던 것이 성의껏 준비해

그런데 그날이 다 된 오늘에도 아버님은 저희들의 결으로 오지 못하시고 의연히 일점혈육도 없는 남조선에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저의 아버님은 예순돌 생일은 고사하고 자식들이 지어올린 새 옷 한 벌 받지 못한 채 차디찬 감방안에서 생일 예순돌을 맞으신 불우한 사람입니다. 단 하루도 자식들의 따뜻한 부양을 받아보지 못한 아버님께 자식들이 성의껏 준비한 일흔돌 생일상마저 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터지는 것만 같습니다.

날개라도 있다면 분단의 장벽을 넘어 남쪽으로 단숨에 날아가 아버님을 모셔오고 일흔돌 생일상을 받게 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저와 저의 동생은 지금 이 시각에도 연로하고 병약한 아버님의 신상에 예상치

않던 일이 생길까봐 가슴을 조이며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간이 당하는 불행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귀 단체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저의 아버님은 반드시 자식들이 기다리는 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인생말년이나마 단란한 가정에서 마음 편히 살아갈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남조선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하여,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의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 귀 단체 선생님들이 우리 아버님의 송환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끝까지 힘써 주실 것을 다시금 요청하면서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귀 단체들의 앞으로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96년 11월 18일

○행사와 동정○

- 토론회-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방안
 - 일시:12월 20일(금) 오후2-5시
 - 장소: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3층)
 - 주최: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725-5828)
- 제2회 딸들을 위한 캠프
 - 일시:97년 1월 27일(월)-1월29일(수) 2박3일
 - 장소:마석 감리교 교육원
 - 내용: 중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간관계와 이성관, 성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비 10만원
 - 주최:한국여성의 전화(☎269-2965)
- 이우정(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이사장) 씨가 일본 「아시아인권기금」이 수여하는 제1회 아시아인권상을 수상했다. 12월 20일 낮 1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알프스홀에서 수상을 기념하는 모임을 갖는다. 참가비 2만원. 문의: 275-4860/273-9535
- 문익환목사기념회·통일맞이 칠천만 겨레모임은 「통일달력」과 「겨레사랑실천 인사장」을 제작·판매하고 있다. 통일달력은 2천원(단체주문시 1천원), 인사장은 5백원(단체주문시 3백원) 문의: 762-8201

인권운동사랑방 송년회
· 일시: 12월 23일(월) 오후6시30분
· 장소: 사무실 부근 진미식당(☎ 713-2161)
· 회비: 1만원 · 문의: ☎715-9185

제1회
인권영화제가
18-22일 제주에서
열립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LG제품 불매운동 뜻을 올린다

오늘 여의도 발대식, 노조·사회단체 중심으로 본격화

LG그룹 해고자 이동렬(37·LG전선), 성한기(42·LG전자) 씨의 단식투쟁이 41일째를 맞은 오늘 낮 12시 여의도 LG 쌍둥이빌딩 앞에서 [LG(럭키금성)제품 불매운동본부] 발대식이 열린다.

LG제품 불매운동본부에는 현재까지 민주노총, 전국연합, 민교협, 지식인연대, 「안양·군포·의왕 시민·노동자 연대회의」 등 3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각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단체와 인원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불매운동본부는 발대식 이후 민주노총 산하 단위사업장과 각 대학 및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확산시키나가고, 각종 스티커와 포스터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오늘 발대식에서는 LG그룹에 대한 규탄 연설에 이어 불매운동 결의문이 채택되며, 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LG제품 불매운동이 펼쳐지게 된다. 발대식이 끝난후 참석자들은 부천 LG백화점과 용산전자상가 LG매장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전물 배포와 피켓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흑한 속에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동렬·성한기 씨는 주변의 단식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측

의 태도변화가 있기 전까지 단식을 그만둘 수 없다"며 결사투쟁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은 인간이 물과 소금만으로 지탱할 수 있는 한계점에 다른 상황이어서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윤석진 씨, 정역1년6월 구형 PC통신 무장공비 글 게재

컴퓨터 통신에 '무장공비' 관련 글을 띄웠다가 국보법상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진(27) 씨에게 정역 1년6월형이 구형됐다.

18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4단독(조병훈 판사) 심리로 열린 2차공판에서 검찰은 "윤 피고인의 글이 북한잠수함이 발견된 다음날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씌어진 글이라는 점과 피고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 나선 윤 씨는 "컴퓨터 통신의 자정능력을 무시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서적까지 문제삼아 억압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대응하고 싶지 않다"며 "내가 한 행동이 진정 처벌받아야 할 행동이라면 기꺼이 책임 지겠다"고 말했다.

윤 씨는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즉각 항소할 뜻을 가

족을 통해 밝혔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7일.

이성환 의혹 규명하라

이성환 과천시장의 무죄

<인권하루소식> 담당자

안녕하십니까? 인권유린을 예사로 아는 나라에 태어나서 늘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H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내 주신 설문지를 읽다가 속이 답답하고 울적하여 편지드립니다. 인권 10대 뉴스를 뽑아 보려고 앞에서 읽어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치고 또 동그라미를 치고, 그러다 보니 47개 모두 동그라미를 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10개만 뽑을 수 없었지요. 저로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가슴 아파도 큰 것 10개만 선정해야겠지요. 뽑지 않은 37개 하나 하나에도 모두 피눈물이 담겨 있을 텐데... '10대 뉴스'에 묻혀 조명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젊은이와 더불어 사니까요. 그러면서 한 편으로 두렵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가, 무슨 일로 땀땀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저는 인권옹호자, 인권침해자만 대답할합니다.
○인권옹호자: 김영삼(자칭)
○인권침해자: 김영삼
개가 개박지 속에 숨듯, 소시명인 저는 용기가 없어 숨죽여 삽니다. 그래도 인권운동의 맨 앞에 서신 '사랑방 가족' 때문에 그나마 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좋은 세상을 낳을 기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1996. 12. 17

96 인권 10대 뉴스 선정에 참여 하십시오

여러분이 선정하는 인권 10대 뉴스는 올해 인권지표입니다. 96 인권 10대 뉴스 선정은 설문지(별지)를 참고하십시오. 서둘러 주십시오.
전송:715-9185 팩스:715-9186/706-6175/통신 천리안, 하이텔: rights 나우누리: 인권사랑

선고와 관련, 전국연합은 19일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고위층의 이권척박 거절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의혹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구타·잠안제우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검찰 책임자를 가려내어 엄중하게 처벌 하라고 주장했다.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 <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 선회

안기부법 개정 강행을 위한 안기부의 로비와 언론의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다. 안기부법 개정을 통한 수사권 확대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헌정권에 비판적인 재야인사, 학생, 일부 정치인의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동시에 색깔 논쟁을 불러일으켜 보수 성향의 표를 모으려는 의도라는게 설득력있는 주장이다.

주요 보수 언론들은 안기부법 개정을 적극 거두고 나섰는데, 이들은 바로 3년 전 안기부법 개정 당시에는 현행 안기부법을 찬양하는 태도를 보였다. 언론의 임무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확성과 공정성이다. 대세에 따라 카멜레온이기를 마다하지 않는 오늘날 언론에게서 국민들은 어떠한 진실과 사실을 접할 수 있을 것인지 회의스럽지 않을 수 없다. 조선·동아·한국일보의 3년전 사실과 올해의 사실을 나란히 소개한다<편집자주>.

"국가안전기획부는 이제 명실공히 21세기 한국을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과학적 정보기능 및 순수 대공기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안기부안의 정치관련기구나 부서들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고, 안기부 고유업무의 범위도 새로이 재조정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기부를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의 도구로 사용해 오던 그간의 발상과

관행을 철저히 불식하는 일이다..."(92. 9. 27. 조선일보 사실 "안기부법 개정해야" 증)
"...94년과 95년 두 차례에 걸쳐 여-야 합의로 안기부법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적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 및 불고지죄등을 검찰로 넘기게 됨에 따라 사실상 대공수사에 대가 조직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빚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다...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 안기부가 대공수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불구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96. 12.17. 조선일보 사실 "안기부법과 대공수사" 중)

"...안기부법은 제 2조 3항에서 형법중 내란의죄, 외환의죄, 군형법중 반란의죄, 이적의 죄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등의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수사는 공소제기의 준비가 본질이므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88년 대한헌법의 의견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시대 안기부의 위상으로서 안기부를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편하거나 보안범죄를 다루게는 하되 검찰의 수사지휘아래 두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93. 1. 16. 동아일보 사실 "안기부는 개편되어야 할

다" 중)
"안기부법의 재개정은 ... 국가의 체제수호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치적 힘겨루기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의안이다."(96. 12.19. 동아일보 사실 "파행으로 막내린 정기국회" 중)

"... 우리는 오랫동안 공작정치의 본산으로 국민에게 각인된 안기부의 지난날 오명을 씻기 위해서도 안기부예산의 국회통제가 필수적이며, 수사권의 경우는 간첩과 그에 관련된 죄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93. 11. 18. 한국일보 사실 "안기부 예산의 통제" 중)

"국회는 3년전 ...안기부를 창설 32년만에 민주화 추세에 따라 대수술을 단행했다. 당시 안기부의 기능 개혁의 요체는 정치 개입과 직권남용 금지였으며 여야가 정치적 절충으로 대공수사권을 축소시킨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 수사권 회복을 위한 안기부법 개정은 당락을 초월, 국가 수호와 국익확보의 차원에서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시켜야 할 것이다"(96. 12.16 한국일보 사실 "안기부법, 「국가수호」차원서" 중)

국가파행책임은 신한국당 임시국회 소집 철회해야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9일 안기부법 강행처리 무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기부법 개정을 전제로한 임시국회 소집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연합은 "신한국당은 노동법 등을 강행처리하려 했고, 개혁입법으로 자화자찬했던 안기부법을 개악하려 했다"며 국가파행과 정국 불안정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한국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기부법 개악을 단호히 반대하며, 임시국회를 소집해 강행통과를 기도한다면 신한국당에 대한 전국민적인 반대투쟁과 함께 김영삼대통령 규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재 교수 장대협 의장에

장애인단체들의 상설협의체인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장대협)는 17일 96년 정기총회를 갖고 제2대 의장에 김성재(49·한신대 교수) 장우권의문제연구소 이사장을 선출했다.

"무죄받은 양심, 유죄받은 권력" (개정증보판)

<국가보안법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주요사건> 2차자료집 발간. 2차자료집에는 이창복·박충렬 씨 무죄판결 자료를 비롯해 새롭게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허인희 씨 사건 및 부록으로 국보법 합헌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국보법 제7조 1·3·5항에 대한 현재의 합헌결정문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정보자료실

인권운동사랑방 송년회

- 일시: 12월 23일(월) 오후6시30분
- 장소: 사무실 부근 진미식당(☎ 713-2161)
- 회비: 1만원 • 문의: ☎715-9185

제1회
인권영화제가
18-22일 제주에서
열립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신한국당-범민주진영 한판승부

신한국당 23일 안기부·노동법 강행통과에 연일 투쟁

신한국당이 23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노동법과 안기부법 통과를 강행처리하려는 가운데,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운동진영의 투쟁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악 저지 운동'에는 민주노총을 선두로 한 민주노조진영과 전국연합 등의 재야단체는 물론, 학자·변호사 등의 지식인 단체, 노동·빈민·학생 등 기층민중단체 등 전체 민주운동 진영이 총망라되고 있다. 이들은 각종 집회 및 농성, 선전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한국당의 악법강행통과를 총력 저지할 태세이다. 지난 14일 서울역 집회에

이어 오늘 낮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는 민주노총과 전국연합,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상곤, 김용태, 김태진 등)가 주최하는 '안기부법·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가 개최된다. 또한 노동자·빈민·학생 등 기층민중운동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총파업 노동자와 함께하는 민중연대 투쟁위원회」(고문 계훈제, 백기완)는 현재 명동성당에서 쇠사슬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공단과 서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법 개악의 부당성을 선전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기부 수사요원의 김형찬(경희대생) 씨 불법 연행 폭력수사를 계기로 구성된 「안기부의 김형찬 불법연행 폭력수사 책임자 처벌과 안기부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김형찬대책위)도 명동성당 농성장과 경기동부지역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형찬대책위는 수도권지역 재야·청년단체 및 경기동부지역 총학생회 등이 모여 구성됐으며, 안기부법 개악반대 선전활동 외에 김형찬 씨 불법수사 책임자인 안기부장 사퇴촉구, 김형찬 씨 치료비 모금 활동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이동열·성한기 씨가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두 해고노동자는 20일 낮 여의도 LG빌딩 앞에서 열린 「LG제품 불매운동본부」발족식을 통해 "아무런 조건없이 단식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며칠전부터 동료와 선배들의 만류를 받아들인 두 사람은 'LG제품 불매운동'을 열심히 벌이겠다는 동료들의 약속과 함께 단식을 해제하고 건강 회복에 힘쓰기로 했다<관련기사 2면>.

한편, 이날 「LG제품 불매운동본부 발대식」에는 2백여 시민·학생·노동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강추위 속에서도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서는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장창원 영등포산업선교회 목사, 배옥병 서울지역여성노동자회 회장, 윤명래(산본지역 주민) 씨 등이 나와 LG그룹에 대한 규탄과 함께 소속 단체와 지역에서 LG제품 불매운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동열·성한기 씨 단식 중단 LG 불매운동본부 발족

영하의 혹한 속에서 장장 41일간 단식투쟁을 벌여온

기사제보
전화 715-9185
전송 715-9186

「무죄받은 양심, 유죄받은 권력」 (개정중보판)

<국가보안법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주요사건> 2차자료집 발간. 2차자료집에는 이창복·박종철 씨 무죄판결 자료를 비롯해 새롭게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최인희 씨 사건 및 부록으로 국보법 합헌 결정에 대한 판례명석, 국보법 제7조 1·3·5항에 대한 현재의 합헌결정문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정보자료실

96년 여성운동 10대뉴스

한국여성단체연합 선정

- 1.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청원
- 2.유엔 인권위, 쿠마라스와미 유엔특별보고관의 일련된 '위안부'에 대한 법적 사과·배상을 촉구하는 보고서 채택
- 3.공권력에 의한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고소·고발
- 4.여성발전 기금 조성 및 성차별개선위원회 구성
- 5.이효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가 5공인사와 함께 선정된 「여성발전과 지위향상 유공자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을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거부
- 6.인위적인 성비파괴에 경종을 울린 태아성감별 의사 구속
- 7.공무원 5, 7급 채용목표제 실시
- 8.농협법 개정으로 여성농민들의 농협조합원 가입 가능
- 9.고용불안, 정신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제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개최
- 10.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난 여성문제에 관한 「한국-중국-베트남 심포지움」 및 현장방문 프로그램 개최

<자료>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매년 세계각국의 인권침해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휴먼라이츠워치가 3년만에 한국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3년전보다도 오히려 후퇴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휴먼라이츠워치 인권 보고서를 두 차례로 나누어 소개한다<편집자주>.

96년의 세 가지 의미심장한 사건은 마침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국제인권기준 옹호에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이 국제인권기준을 손상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금지된 통일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대량구속하고 기소한 것, 정부가 억압적인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는 비난하였다. 95년 10월까지 김영삼은 재판을 기피하면서, 전직대통령에 관한 사건은 역사에 심판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미 조사를 종결하고 기소증지를 했던 검사들이었지만, 김영삼이 입장을 바꾸었다고 공식선언했을 때, 당장 사건에 재착수하여 재빠르게 기소하기에 이르렀다.<중략>

매년 해왔던 것처럼 7월말, 대한민국 정부는 범민족대회를 금지시켰다.<중략> 경찰은 5천8백48명의 학생을 구금했고, 9월 17일에 그들중 4백38명을 기소하였다. 이들 4백38명중 38명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나머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또다른 27명이 구속된 가운데, 나머지 학생들은 석방되었다. 기소된 학생들 중에 51명은 10월말까지, 8개월에서 3년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폭력행위를 선동하고 동조했다고 진술하라고 학생들에게 거짓자백을 요구하며 경찰이 학생들을 구타했다고 보고하였다. 학생들의 폭력이나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이 비난받아야 하는 한편, 평화적인 시위일 수 있었던 것을 "폭력혁명의 성격을 띤 친북계 한국이 전두환 독재로부터 얼마만큼 놀랄만한 민주화를 이뤄왔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사형제도의 사용과 판결차와 관련해서는 우려할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측 증인의 채택을 다수 거절하였다. 또한, 검사들이 김영삼 대통령에게서 나온 정치적 동기의 증거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부 방청객들

41일째의 단식 농성을 정리하면서... LG 해고노동자 이동열, 성한기 씨의 편지

지난 여름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어느 주간지와 인터넷에서 "세상에 태어나 보람된 일, 성취감을 느끼는 일들을 많이 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런 꿈들을 다 접어두고 장렬히 산화하고 싶은 충동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이 황폐화되고 가정까지 황폐화되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막다른 낭떠러지에 서있는 해고자의 절박한 심정을 밝힌지 4개월만인 지난 11월 10일부터 해고자 문제를 위한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지 41일째 60여 Kg의 몸무게가 45Kg으로 줄어든 만큼이나 꽤나 시간이 흐르긴 흐른 것 같습니다.

여러 어르신들과 수많은 동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이후 싸움의 몫은 우리 것이네, 이 정도면 목숨을 바친 바 진배없네..."라는 눈물어린 요청에 해고자 문제대들의 짐을 남겨둔채 단식을 중단하자니가 아쉬움과 함께 온갖 만감이 교차합니다.

단식 기간중 힘들었던 것은 결코 굶주림이 아니었습니다. 노동법 개악을 한다고 난리를 쳐대는 김영삼이도 과거에 23일을 단식하였다 하고, 살인마 전두환이도 감옥에서 정치보복이라며 23일을 단식하는 열성을 보였는데, 이까지 굶주림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힘들었던 것은 LG자본의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복직이 안된다면 정말 이 한 많은 세상 죽음으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단식을 한다 해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놈들을 보니 더욱 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다시는 단식을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결의로 죽기로 단식을 지속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실신하여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약착같이 다시 나왔던 것입니다. 결코 두 번 다시 LG자본에 지기가 싫었습니다. 진정 우리가 바랐던 것은 목숨을 거는 단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이지 이 지긋지긋한 복직투쟁을 장렬히 산화함으로써 끝내고만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어르신들이 그리고 전해투쟁자들이 왜 LG때문에 죽느냐 이 지긋한 LG때문에 목숨을 던진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큰 투쟁으로 LG를 박살내자고 설득하였습니다. 니가 죽으면 LG만 타격받는 것이 아니라 니 죽음을 옆에서 방관한 우리가 더 나쁜 사람이 된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른들, 선배님들을 욕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단식으로 LG자본이 얼마나 잔악한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하나로 뭉쳐 LG자본을 응징하겠다고 하니 그것을 믿고 단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측에 이야기합니다. 아무 조건없이 단식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싸움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에는 단식과 같은 느슨한 방법은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1996년 12월 20일

96 인권 10대 뉴스 선정 설문조사서를 오늘까지 보내주시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제1회 인권영화제를
성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대법, 이창복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23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국보법의 적용범위를 엄격화하고자 했던 서울지법 재판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엎은 것으로서, 박종철 씨 사건을 비롯해 향후 국보법 판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영 충북대 교수(법학과)는 "심증을 가지고 유추하는 것은 법 원칙상으로도 금지해야 하는데, 양심의 자유를 유추해석해서 처벌

하는 것은 수십년을 후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공안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예비검속에 면죄부를 부여해 사회전반에 공포분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기본권에 족쇄 채워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보법 제7조 5항(이적 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목적은 적을 이롭게 하겠다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표현물 내용에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활동에 동조하는 이적 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95년 4월 서울지법 형사합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보법

제7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등)는 넓게 해석·적용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90년 헌법재판소의 국보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결정을 인용하며,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반국가 활동성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기부법 개악반대 한목소리 전국 교수 545명 반대성명 발표

임시국회 개원일인 23일에도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사회각계의 집회와 기자회견이 줄을 이었다.

김승훈 신부등 사회각계 인사 2백7명은 오후 2시 기독교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적인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안기부법 개악기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표인사에 나선 최영도 민변회장은 "안기부는 군사정권 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정치공작과 불법 연행·감금·고문을 자행한 기구였다"며 "안기부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민적 동참"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전국 34개 대학 교수 5백45명은 '안기부법 개악과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오후 1시

종로성당에서 이를 발표했다. 서명교수들은 "정부의 안기부법 개정안의 취지가 사상과 언론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데 있다"며 개정안을 무조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낮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및 사회단체 회원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안 강행처리 결사반대 결의대회가 열렸다.

또한 오는 27일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안기부법, 노동법 개악 반대'를 위한 '안기부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민적 동참'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전국 34개 대학 교수 5백45명은 '안기부법 개악과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오후 1시

<하루소식> 25일자는 휴일관계로 쉽니다.

<한 양심수의 겨울편지> "겨울을 봄의 희망으로 이겨냅니다"

겨울은 어느 새 생활 속으로 들어 왔네요. 옛사람은 '견빙수지동 지천하지한'(見瓶水之凍, 知天下之寒)이라고 했지만 우린 일이 있는 병 속의 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움츠러드는 어깨, 성에건 창문, 두툼한 솜이불이 생활이 될 때 '우리들의 겨울'임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운동장 한 칸에 만들어 놓은 텃밭에 잔반(殘飯; 먹고남은 밥)을 거름으로 묻는 중인데 삼갈은 연장도 없이 플라스틱 밥주걱으로 하다 보니 잔반 구덩이에 흙 덮는 일도 땅이 얼면 힘들게 됩니다. 얼마나 살려고 밭에다 그렇게 거름을 하느냐는 농담을 듣다가 언뜻 언뜻 내년에 텃밭에 심어먹을 상추, 쪽파, 케일, 깻잎 따위를 생각하며 잔반을 묻는데 벌써 땅파기가 어려운 걸 보면 겨울은 진즉 왔나 봅니다. 이미 생활이 되어 버린 겨울을 봄의 희망으로 이겨냅니다. (중략) 봄을 기다리는 희망만이 아니라 겨울 그것이 봄을 잉태하고 만드는 과정이라는 깨달음으로 '곱진역' 겨울나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는지요.

보내준 편지 잘 받았습시다. (중략) 옛날엔 '자유주의' 따위엔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데 어느 새 실천적 휴머니스트 비슷하게 되어 버린 자신을 보고 어떨 때 놀라기도 합니다만 세월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일테지요. 그런데 이 '변화'엔 좀 우스운 예기가 숨어 있습니다. 헌법소원 등의 합법투쟁을 이용한 '양심 지키기'라는 싸움을 할 때 '그들의 논리로 그들의 모순을 드러내고자' 양심과 사상의 자유니 관용이니 인권이니를 들먹였을 뿐이었

지요. 타방(他方; 상대방)을 더욱 효과적으로 공격하려니까 자유나 인권에 대해 이것 저것 뒤죽박죽이고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입에 올렸는데 언어가 갖고 있는 주술적인 힘이 작용한 탓이 있는지 몰라도 어느 새 그 개념,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 안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변화의 지점에서 내 감옥살이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양심지키기'라는 필부(匹夫)의 반항이 수호하려는 가치가 '개인적 가치'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만인공통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개인을 일으켜 세우'는 것임을 실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중략)

이처럼 반항은 처음엔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 어쩔 도리없는 저항이었던 것이 더 나아가 스스로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실천하고 그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선언하게 된다고 까워가 말했듯이 나 또한 전향 거부라는 반대, 소극적인 태서 양심의 자유라는 인류보편적 가치의 실현, 적극적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반항하는 개인은 자신이 의미부여했던 것이 공동선과 닮아 있고 자신의 행동은 만인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략) 존재하기 위하여 인간은 반항해야 하고 그 반항이 연대성 위에 자리잡을 때, 우리는 더불어 사는 인간으로 함께 존재하게 된다고 합니다.

안동에서 응우가 * 이글은 정태인 씨가 컴퓨터 통신에 올린 강우주(35·12년째 북역중) 씨의 답신에서 일부를 옮겼습니다.

주간/인권/호/름 (96년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16일> (월)
전남 광양제철 협력업체인 전남기업 노동자 정성철 씨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항의해 분신/민주노총 지도부 17명 노동법 개악저지 위해 삭발식 갖고, 명동성당서 무기항의농성 돌입/<한겨레> 여론조사팀 전국남녀 5백명 여론조사결과, 안기부법 개정에 50.9% 반대 보여/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심 부장판사) 12·12대 5·18사건 및 전·노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 함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씨에게 원심끼고 무기징역, 노 씨에게는 17년 선고/전국연합 등 15개 단체 참가하는 '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17일> (화)
(주)한보에너지 통보광업소 사고로 파문된 광원 15명 모두 숨겨/시민·사회단체 및 대학생 2백여 명 16, 17일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정안 철회요구 집회/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선고받은 이성환 과천시장 함소심에서 무죄선고/전국방영기로 했던 MBC 다큐드라마 <시민 윤상원> 일부지역에서 예고없이 방송안돼 항의소동/대법원 내년부터 새형사소송법 시행됨에 따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 제정·발표

<18일> (수)
신한국당 정기국회 마지막날 안기부 수사권 확대를 위한 안기부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했으나 국민회의 실력저지로 실패/안기부가 최근 정부. 여당의 안기부법 개정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원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인 로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나

<19일> (목)
안기부가 북한수재민들기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회원들에게 탈퇴압력 의혹/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정귀호 대법관) 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다친 변혁희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원고승소내린 원심끼고 환송/국민회의 노동법 개정대처 위해 당내 '노동법 관계 대책위원회' 구성

<20일> (금)
국민회의 안기부1차장으로 임명된 박일동경철청장의 사퇴촉구/노개위 일부 공익위원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반발/LG제품 불매운동본부 발대식' 갖고 불매운동 적극 벌이기로/41일간 단식투쟁 벌여온 LG해고노동자 이동열·성한기 씨 단식 풀어

<22일> (일)
처제와 큰딸동 친인척을 일삼아 성폭행해온 남편을 침부 살해한 혐의로 16일 구속된 임순란(44) 씨에 대해 임 씨의 시누이와 여성단체가 구명운동에 나서/민변, 전국연합등으로 구성된 '안기부법 개정반대 대책위원회' 회원들 중구 중앙극장 앞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안기부법 개정반대 거리캠페인'/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용삼 부장판사) 보안관찰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서준식(48·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낸 출금금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주요공판안내

- 24일(화) 여성오(집시법) 등, 오전10시, 합의4부, 418호, 선고 변선보, 임성규, 송중호, 국보법(찬양·고무 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에릭 스티븐 뮤니크(이기순씨 살인),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 26일(목) 강형식, 국보법(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김용기, 이철우,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강성모, 이지은, 이철희, 국보법(찬양·고무 등),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 27일(금) 송민규, 국보법, 오전10시, 9단독, 317호, 선고 문숙희, 국보법(편의제공),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명원창, 국보법, 오전11시, 합의3부, 421호, 신건 이원구,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선고 이상 서울지법 형사부

제1회 인권영화제를
성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국민여론 “안기부법 개악 반대” 김형찬 대책위 모금활동, 4일만에 1천3백만원 견혀

안기부법 개악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기대 이상으로 뜨겁다. 지난 21일부터 서울시내 곳곳에서 ‘안기부법 개악저지와 김형찬 씨 치료금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인 결과, 단 4일만에 1천3백만원이 견혀 것으로 드러났다.

사내 집회 보장·유인물 배포 보장 촉구 전남기업 정성철씨 분신기도 뒤 단식투쟁

전남 광양제철소 협력업체인 전남기업노조 부위원장 정성철(26) 씨가 ‘노조 탄압금지·해고철폐·노동법 개악저지’를 요구하며 지난 16일 분신을 기도한 이후 24일 현재까지 9일째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는 분신자살을 기도해 가슴, 배, 팔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광양 조대 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하남·용인 등 경기도 북부지역 청년단체 회원들은 매일 저녁 직장에서 퇴근한 뒤 1-2시간 쉼 서울 시내 지하철과 시장 등지에서 모금을 벌여왔으며, 22일엔 하루만에 4백여 만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광양제철소가 협력업체와 계약체결시 맺는 ‘협력업체 기본계약서’를 완전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광양제철 협력업체노조에 대한 탄압 금지와 노동3권 안전보장 △중식집회 보장과 사내 선전물배포 완전 보장 △해고자 원직복직과 조합원 탈퇴공작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하남시에 사는 이영록(29·학원강사) 씨는 “여러가지 모금운동을 벌여왔지만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기는 처음”이라며 “안기부법 개악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이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성탄 가석방 양심수 제외 장기수 60명 추운겨울

정부는 24일 성탄절을 맞아 7백78명의 수형자를 가석방했으나, 이번 가석방에서도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복역자 32명을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으나, 우용각(68·대전교도소, 39년 복역), 윤용기(71·대전교도소, 38년 복역) 씨 등 사상범들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법 양심의 자유 족쇄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상임대표 함세웅 등)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창복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은 광범위한 인권과 국민기본권인 사상·표현·양심의 자유에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헌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기부법 개악음모와 맞물려 국보법의 확대 적용 등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준식대표 출국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48) 씨가 24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서 씨는 지난 11월 20일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지난 21일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어렵게 출국길에 오르게 되었다. 서 씨는 내년 1월 12일 귀국할 예정이다.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②

표현의 자유 침해 수습건 국가보안법(국보법) 자체가 주요한 인권문제로 남아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에 관한 92년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에서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을 조약에서 보장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하는 주요한 장애물”이라고 일컫고 있다.

국보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장기복역중인 양심수는 현재 60명에 이르며, 이들 가운데 20년 이상 복역한 초장기수만도 24명에 달한다.

국보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장기복역중인 양심수는 현재 60명에 이르며, 이들 가운데 20년 이상 복역한 초장기수만도 24명에 달한다.

국보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장기복역중인 양심수는 현재 60명에 이르며, 이들 가운데 20년 이상 복역한 초장기수만도 24명에 달한다.

국보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장기복역중인 양심수는 현재 60명에 이르며, 이들 가운데 20년 이상 복역한 초장기수만도 24명에 달한다.

한적인 노래책을 배포하여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가수 이은진 씨와 출판인 원용호 씨가 체포되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수습 건의 이와 같은 유형의 구속은 95년 내내 벌어졌다.

노동법 여전히 존재 노동권 또한 지속되는 주요한 문제이다. 10월, 대한민국이 배타적인 27개 선진국의 조직인 경제사회개발협력회의(OECD)의 회원국이 되려 했을 때, 그 요건인 노동권의 증진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관례대로 한국의 노동관행을 체계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감시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표현·결사의 자유와 대표노조를 통한 단체협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4개의 주요법들이 법전에는 남아있다. △복수노조 금지 △제3자 개입금지 △교사의 노조결성금지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강제조정명령 등이다.

96년 1월 민주노총의 제소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민주노총 초대위원장 권영길 씨에 대한 기소증지를 정부에 권고하였다. 권영길 씨는 1년 반 전에 서울지법 철노조에서 연대사를 했다 는 이유로 95년 말에 구속되었다. 또한 제3자 개입금지(비노조의 활동 조직화를 금지하는)의 폐지와 노조 기금마련 활동, 자유로운 노조결성과 노조간부의 자유선거를 요구하였다.

국제사회의 역할 10월 OECD의 27개 회원국은 한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나, 한국의 노동권 관행을 정례적인 근거에 따라 감시할 것을 요구하였

다. 이 결정은 노동법과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안 때문에 얼마동안 연기되었다.

한국이 국제기준을 지키도록 하는데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특히 적극적이다. 한국에서 국회의원 대표가 10월에 브뤼셀을 방문했을 때, 유럽의회의 대외관계관 Leon Brittan) 씨는 “유럽연합은 한국의 회원국 가입에 우호적이라고 말했지만, 노동법 개정은 한국이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도

포철의 ‘협력업체기본계약서’와 노조활동탄압 사례 사내 노조활동 및 선전물배포 금지, 노조간부 출입증 뺏어

포철은 협력업체들(광양제철소의 52개를 포함해 약 1백여 개의 협력업체가 있음)과 작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협력약관에 ‘노조활동제재와 정의행위금지 조항’을 두고 노동3권을 압살하는 한편 협력업체 노조활동가들의 사내 출입증을 뺏는 방법 등으로 노조활동을 막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제철소가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협력업체기본계약서’ 중 일부조항에는 ‘수급인이 노동쟁의 등 기타 사정으로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기본계약서에는 정위행위 금지조항을 두고 있는데 ▲노사분규등으로 인해 해당 작업에 차질 등이 예상될 때는 도급인 또는 도급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작업을 대체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불법쟁의등으로 인한 도급인,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불리한 계약체결조건을 두고 있다. 이때문에 협력업체 회사 쪽에서는 노조에 대해 조합활동자재와 탄압을 일상적으로 저질러 왔으며, 정위행위를 하려할 경우 ‘협력약관을 지칭하며 회사가 망하니 정위행위를 말 것을 집요하게 주장한다’고 한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직접적으로도 노조활동가들이 사내 출입증을 뺏아 작업장인 제철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사내 유인물 배포 금지 등으로 협력업체들의 노조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 포철사장은 동료의 과로사 인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 중 조합원 7명을 업무방해 및 폭력으로 광양 경찰서에 고소하여 96년 7월 4일 구속 3명, 불구속 3명을 당하게 하였다. 결국 벌금형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출입증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출입할 수 없다(삼정강업).

그러한 포철의 노조탄압과 각 협력사들이 탄압이 맞물려 삼정강업(주)에서 조평훈 씨를 비롯해 3명이 해고되었고, 광영(주)에 오민기 씨 등이 해고 되는 등 최근들어 5명이 해고되었다. <금속연맹 광주전남지부 노개투 소식5에서>

제1회 인권영화제를
성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새벽날치기꾼 YS...민주주의 파괴 범민주진영, 정권퇴진운동 불사

양심적 진보 인사들의 호소와 각계각층의 민의를 깃잡으며,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26일 새벽 첩보작전을 방불케하는 신한국당의 날치기통과가 이뤄지자 전국민은 경악했으며, 분노한 노동·시민·종교·사회단체 등 제민주세력은 정권퇴진운동과 신한국당 해체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신한국당은 양대 개악안을 상정하면서 반개혁적 본색을 드러낸 것은 물론, 법안 처리과정에서도 비민주성과 불법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신한국당은 처음부터 민의수렴에는 관심이 없는 듯 토론 및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절차를 철저히 무시했다. 지난 11월 28일 대한변협이 주최한 '안기부법'

토론회에 불참한 것을 비롯해 안기부법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적 논의 요청을 모두 외면했다. 또한, 개악안으로 비판받은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안보다도 후퇴한 정부안을 내놓더니, 26일 날치기 통과 때 '복수노조 3년 유예' 조항마저 삽입하는 등 재계의 입장을 대변한 수정안을 번차례 통과시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 상의 기본적 절차마저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개의한다'지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국회법 72조)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은 야당의 누구와도 협의없이 새벽 6시에 본회의를 열어, 기습

날치기를 감행했다. 또 국회법 7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25일 자정까지도 의사일정은 전혀 작성·보고되지 않았다. 날치기 통과에 이어 곧바로 '불법파업' 운운하는 검찰발표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국회에서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단죄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빗발치는 규탄 성명 날치기 통과 사실이 알려진 뒤, 각계의 비난 및 규탄 성명이 줄을 이었으며, 규탄의 파고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대표 문규현 등),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김상

곤), 민주적노사관계와 사회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공동대표 김중배 등), 천주교인권위,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지선 등), 진보정치연합(대표 노희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정양업),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대표 함세웅 신부),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등은 잇따라 강도높은 규탄성명을 발표해 "신한국당의 날치기통과는 쿠데타적 폭거로서 원천무효"라며 "김영삼정권 퇴진운동을 불사하는 전국민적 총력기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노총·노총 총파업 또한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26일 오전을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이를 정권교체 투쟁까지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6일 현재까지 자동차, 조선, 중공업, 사무전문직 등 민주노총 산하 주요사업장이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참여 숫자는 1백개 노조에 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민주노총은 28일까지 1백46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도 오늘 오후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2면으로 계속

<인권하루소식> 12월27일자로 96년을 접습니다. 1년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97년엔 좀 더 열심히 발로 뛰는 <하루소식>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97년 첫호는 1월 7일자입니다.

<송년특집>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 10대 뉴스(3-5면)

-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 ◆고문방지조약등 최초보고서 심의
- ◆연세대생 노수석 씨 사망
- ◆외국인노동자보호법 국회청원
- ◆영화 사전심의 위한 결정
- ◆최대의 범죄, 최소의 처벌-12·12, 5·17
- ◆노동법 날치기 개악
- ◆박종철·허인회 씨 무죄판결
- ◆세계가 경악한 연세대 사태
- ◆안기부법 개악

<거리에서 드리는 성탄예배> 늘고, 상처받은 영혼들의 인간선언

지난 25일 청량리 쌍굴다리 아래에서는 다일공동체, 경실련, KNCC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조촐한 성탄예배가 열렸다. 굶기를 밥 먹듯 하는 무의탁 노인, 오갈데 없는 행려자, 윤락여성 등 상처받은 이웃들과 점심 한끼, 작은 선물 하나 나눠 가지는 소박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행려자 인권선언서"가 낭독되었다. 요약해서 실는다<편집자주>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다. 이 사실은 하늘 아래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인 진리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이러한 보편적 진리가 자주 무시되곤 한다.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원칙은 공공연히 깨어지고 대다수의 사람들도 이를 당연시한다.

특별히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면서도 정부와 사회에 대해 철저히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인간의 사각지대 청량리의 참혹한 현실을 호소하고자 한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평등권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면서도 법으로 보장된 생활보호대상의 혜택에서 무관심 속에 가리워져 있어야 할 존재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 아닌

사람인) 행려자는 전국에 무려 수만 명에 다다른다. 주로 역주변이나 지하도 등에서 살아가며 한겨울에도 거리에서 노숙하다 일어죽는 사람이 해마다 2천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한겨울의 노숙은 물론 굶기를 밥 먹듯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정부는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어 거리를 떠도는 행려자 및 노숙자에 대해 무성의한 시립병원과 갱생원 등을 대책으로 내세우지만 우리는 그곳이 보호기관이 아니라 감옥기관이며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속한 죽음을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중략> 국제화·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선진국 문턱에 섰다는 이 나라, 이 국민들 앞에서 한 인간이며 국민으로서의 동등한 가치와 정당한 권리로서 모든 행려자, 무의탁 노인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행려자, 부랑자도 인간이며, 국민의 한 사람이다. 정부는 행려자 복지법을 강화하고, 기본생존권을 보장하라.
2. 정부는 관변단체를 위해 불허하는 국유지 및 시유지에 행려자를 위한 무료숙소,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무료 식당을 지어 의지할 곳 없는 소외된 이웃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3. 행려자, 부랑자들의 시

신을 의학 해부용으로 팔아 넘겨 장례비 및 시신대금을 착복하는 시립병원은 행려자법에 따라 거리에서 연고 없이 죽어간 이들도 반드시 화장 또는 매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갖추라.

이와 같은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관계당국에 촉구하며 이를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한다.

1면에서 계속

28일 범국민총력기대회 민주적노사관계와 사회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범대위)는 26일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전면백지화 및 김영삼정권퇴진운동' 일정

을 발표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개신교 목사들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시에는 여의도에서 참여연대, 여연 등 시민단체 연대집회가 열리며, 같은 시간 성공회대성당에서는 '시국간담회'가 마련된다. 오후 3시 민주노총은 여의도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갖고, 4시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시국기도회, 6시 명동성당 집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이어 28일 낮 12시에 종로공원에서 민주노총과 범대위 주축로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만행 규탄 및 김영삼정권퇴진을 위한 범국민 총력기대회'가 개최된다. 또한 매일 낮 12시에 자동기부법 개악 전면백지화 및 김영삼정권퇴진운동' 일정

○인권간행물○

- 햇살한줄 제 6호-인권지기(062-529-7576)
 - 주요내용:1996 부산·광주 인권선언문/법률소개-노동법/장기수를 찾아서-황석영/이달의 책 '나비의 꿈' 등 19쪽
- 자료집: 국가보안법, 필요인가?-학술단체협의회
 - 주요내용: 국가보안법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국가보안법,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자유주의와 국가보안법/소위 문민정부하에서의 국가보안법 남용사례 등 46쪽
- 통일맞이 12월 서신-통일맞이 칠천만겨레모임
 - 주요내용:독수리훈련과 통일정세 읽기/통일일지/한권의 책 '평화만들기 통일이루기' /새해의 전망과 과제 등 26쪽
- 사월혁명회보 제46호-사월혁명연구소(888-3682)
 - 주요내용:한국노사관계의 민주화와 노동법 개정/21C와 자주관리에 대하여/역류하는 대북정책' 돌파구는 없는가 등 47쪽
- 평화와 인권 제60호-정의평화정보센터
 - 주요내용:구대의연한 교도행정, 군산교도소 '양심수 이동주 씨 실명위기'/안기부법 개악저지를 위한 전북공대위 공청회 열려/숫자로 보는 인권 등 4쪽
- 후원회소식 통권62호-민가협(763-2606)
 - 주요내용:출소장기수를 찾아서-김수룡 선생님/세계인권선언과 고난받는 양심수들 등 23쪽
-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제5호-한국여성단체연합
 - 주요내용:21세기를 준비하는 여성운동/학교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등 27쪽
- 우리네 아이들 12월호-지탁연(275-8505)
 - 주요내용:출발점 평등 원칙 구현을 위한 유아교육 체계 개혁/사진으로 보는 지탁연의 1996년 등 92쪽

사고당한 전교조 교사와 가족에 희망을!

11월 10일 전세버스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전교조 선생님과 그 가족들의 치료비가 아직 부족합니다. <후원구좌>농협 086-01-061598/문의 675-6181(전교조)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뉴스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12월17일부터 7일간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단체활동가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1백3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47개 문항 중에서 선정된 10대 사건들을 알아본다.

설문 응답자 분포

설문응답자 총수	130명
인권, 사회단체 활동가	66명
독자	40명
변호사(민변 소속)	24명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인식구속 완화 기대

대법원은 97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이다.

11월19일 대법관 회의를 통해 확정된 새로운 형사소송 규칙의 골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적용하며 △범죄의 경중보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영장심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결정대로라면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인식구속이 완화되는 등 인권신장면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룰 전망이다. 현재 연 13만명에 달하는 구속인원도 연 3만명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문방지조약등 최초보고서 심의

세계광장에서 진단한 한국인권

올초부터 한국의 인권을 진단한 국제사회의 권고안이 잇따랐다.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3월 유엔인권위원회, 6월 국제노동기구(ILO) 집행이사회, 11월 유엔고문방지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안이 그것들이다.

먼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과 '유엔고문방지조약'에 대한 한국정부 최초보고서의 검토가 있었다는 데서 이 분야의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짚어보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실시를 포함하여 32개항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안은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교육 실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쿠마라 스와 마 유엔특별보고관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보고서'가 채택되어 관련활동에 활력소

가 되었다.

연세대생 노수석 씨 사망

문민정부 폭력성 여지없이 드러나

4·11 총선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연세대 노수석(법학 2년) 씨가 3월 29일 종로 일대에서 '교육재정 확보와 대선자금 공개' 등을 주장하며 거리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의 토끼몰이식 진압으로 인해 숨진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밝힌 최종 사인은 '심장이상에 의한 돌연사'이다. 그러나 당시의 여러 정황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경찰이 '시위학생 전원검거' 지시하에 곤봉과 군화발을 동원한 폭력적 진압작전을 펼쳤음이 확인됐고, 그것이 노 씨를 죽음으로 몰고간 1차적 원인이었음이 드러났다. 특히 현장에 있던 경찰이 노 씨의 위독함을 호소하던 학생들을 연행하고 노 씨를 죽음 속에 방치한 사실은 문민정부 경찰의 비도덕성과 잔인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비록 언론의 축소왜곡 보도와 정치권의 냉대 속에 노 씨 사망사건은 국민의 관심권에서 사라져 갔지만, 문민정부의 도덕성에 커다란 흠집을 냈다. 한편, 노수석 씨의 사망 이후 황해인, 진철원, 박동학, 권희정 씨 등 대학생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어 잔인한 4월이 이어졌다.

외국인노동자보호법 국회청원

성남 외국인노동상담소 김해성목사 구속

외국인노동자들의 쇄사슬 농성이 95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차례 치뤄졌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의 보호자 역할을 해온 성남 외국인노동상담소의 김해성 목사와 양혜우 사무국장등이 이들의 연행을 온몸으로 저지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는 지난 8월말 현재 18만3천명을 넘어섰는데, 이중 60% 이상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보인다. 낮은 땅 낮은 사람들 속에서 이들은 대부분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최소한의 인건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노예의 삶에 살아가고 있다. 외국 노동자의 유입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정책은 아무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세계화, 국제화를 강조하는 정부도 내년이 유엔이 정한 '이주노동자의 해'임은 예씨 외면하는 듯하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동감한 5만6천5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입법청원이 이뤄졌다.

영화 사전심의 위헌 결정

사전심의 거부하고 열린 제1회 인권영화제

헌법재판소는 10월 4일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 상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왜곡된 형태로 지속될 것을 우려했다. 사전등급 심사에 대한 규제나 비디오매체에 대한 사전심의 등이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때를 같이해 11월 2-8일 제1회 인권영화제가 열렸다. 표현의 자유를 생명으로 하는 인권의 이름에 걸맞게 사전심의의 거부한 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와 인간성 회복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의지를 보여준 총 32편의 영화가 상영되었다. 영화제는 서울만이 아니라 14개 지역도시 순례를 통해 3만여 관객을 만났다.

최대의 범죄, 최소의 처벌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지난해 5·18 특별법 제정을 전후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씨등 16명의 12·12 군사반란, 5·17내란의 주범들이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같은 법정에서 나란히 선 채 재판을 받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 재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두환씨는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되었고, 노태우씨는 22년 6월에서 17년으로 감형되었다. 항소심 판결은 내란목적살인죄를 모두 인정하였고,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되어야 한다"는 사법판단을 명시한 점, 군사반란과 내란의 종료시점은 87년 6·29선언까지로 확대한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권을 단 1명만 인정한 반면 6·29 선언을 행한 전씨등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감형한 것은 정치적인 고려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5·18 광주 시민들에 대한 학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도 하지 못했으며, 현장 지휘 책임자들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점 등 불완전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12월 16일 발족한 과거청산국민위는 이번 재판에서 제외된 가해자들에 대한 추가기소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법 날치기 계약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등 노동자 압박

작년 11월 11일 민주노총 출범을 계기로 제3차 개입금지 철폐, 복수노조 허용,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등 노동관계법 개정요구가 올해들어 더욱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정부는 5월 8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

개혁을 앞세운 노개혁 구성은 계약으로 끝나고, 10월 노개혁은 노동법 개정안으로 정리해고제 도입과 복수노조 조항의 2천년까지 유보, 교직원 단결권 거부 등을 발표하였다. 이에 분노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대 파업 움직임, 전교조 선생들의 단식농성 등 항의가 쏟아져 나왔다. 밀고당기기 끝에 정기국회 기간을 넘기기가 싫더니 신한국당은 임시국회를 소집, 12월 26일 새벽 기습적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순식간에 통과시키는 개가(?)를 올렸다.

부여간첩 김동식사건 희생양

박총렬·허인희씨 무죄판결

안기부는 지난해 11월 부여간첩 김동식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전국연합 박총렬 사무차장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로 구속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은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인 허인희 씨등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침의로 긴급구속했다.

박총렬 씨는 안기부에서 22일의 수사기간 중 잠만재우기 고문은 물론 변호인접견을 불허당한 채 현장검증을 빌미로 야산등지를 끌려 다니며 집단구타등을 통해 자백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박 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국보법 제7조 1항(찬양, 고무) 5항(이적표현물 소지등)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른다. 그뒤 7월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은 증거불충분으로 박 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같은 재판부는 11월 허 씨에게도 무죄판결을 내렸다. 김동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허 씨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세계가 경악한 연세대 사태

최대 구속, 성추행 기록

연세대사태는 매년 되풀이되던 통일행사를 정부가 공안단압의 빌미로 활용하기 위해 강경진압에 나서고 이에 맞서 학생들이 행사를 강행함으로써 증폭되었다. 정부와 경찰은 학생들이 자진해산하겠다는 것도 막고, 한총련의 발본색원을 주장하며 봉쇄시켰다. 연세대 사태는 단일 시위 사건으로는 최대의 연행자를 낳았다. 이 사태로 연행자는 총 5천8백48명이었고, 이중 4백65명이 구속, 3천3백38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전 과정에서 폭행과 성추행, 강압수사 광범하게 자행되었음이 이후 인권단체들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10월 국민회의 추미애의원은 여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성추행을 폭로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학생들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정부는 안기부, 경찰 등 유관기관들로 '한총련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였고, 대학내의 문화집회마저 방해하는 등의 공안단압 정국을 조성해왔으며, 이런 추세는 내년도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유린 날개 단 안기부법 개악 불법수사 항의 김형찬씨 분신기도

연세대 사태, 간수 사건, 강릉 잠수정 침투사건 등을 계기로 안보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월부터 안기부법과 집시법의 개정 작업에 나섰다. 정기 국회에서 안기부법 개악을 기도했던 신한국당은 야당의 육탄 저지로 이를 처리하지 못하자 12월 23일 임시국회를 개최한 뒤 26일 새벽 6시경 여당 국회의원들만으로 단독 강행처리했다.

이번 안기부법 개정은 93년 안기부의 위상과 역할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안기부의 수사권에서 제외했던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죄)와 제10조(불고지죄)에 대해서 안기부가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충렬, 허인회씨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경희대생 김형찬씨 사건이 터지면서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에 대한 광범한 반대 여론이 일어났다.

안기부법의 개악으로 특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안기부에 의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인권의 후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 96년 인권침해자 >

* 모두 14명(수사기관 포함)의 이름이 거론되었으며, 가장 많이 지명된 이름은 다음과 같다.

- ① 김영삼 대통령
- ② 박일룡 전 경찰청장
- ③ 안기부

이밖에도 성추행사건으로 널리알려진 신양중학교 교장, 안기부법 개악에 앞장선 정형근 국회의원, 검찰·경찰등이 거론되었다.

< 96년 인권옹호자 >

* 18개 개인과 단체가 거론되었으며, 다수 지명된 이름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힘쓴 김해성 목사/박시환 판사 및 사법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정폭력방지법 제정에 힘쓴 이종걸·이찬진 변호사/추미애 의원

96년 인권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올 한해는 작년 연말 범민련 관련자들의 무더기 구속과 소위 간첩 김동식사건으로 인한 박충렬·허인회 씨들이 불고지혐의로 구속되는 등 공안판파를 호되게 맞으며 시작된다. 많은 사건들이 4월 국회의원 선거 속에 파묻혀 버렸고, 이수성 국무총리의 좌경임단 발언을 전후로 대규모 조직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그리고 한총련 사건, 그리고 하반기는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시도로 밀고당기는 긴장감 속에서 새벽 신한국당의 날치기 통과로 국민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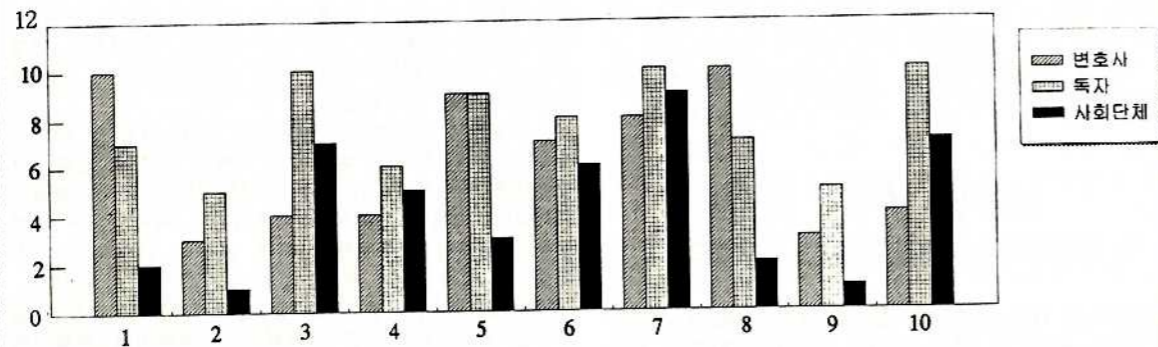
1백30명의 독자들이 가장 많은 표를 준 96년 톱뉴스는 '노동법 개악' 시도이다. 또한 비록 10대 뉴스에는 속하지 못했지만 정부의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방침에 맞서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정부통제 강화를 우려하는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과 8.15 특사에서 양심수 배제, 청와대 밀가루복숭사건으로 인한 시사저널 기자의 영장기각, 신양중 교장의 여학생성추행 사건, 가정폭력방지법 국회청원 등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변호사그룹의 경우 97년 1월부터 영장실질심사제 실시, 영화법 위헌결정 등에 가장 많은 표를 던졌으며, 인권·사회단체의 경우 안기부법 개악, 독자의 경우 노수석 사망, 연세대사태, 노동법 개악 등을 꼽았다.

다가올 97년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대선을 앞둔 시국·공안사건과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폭넓은 인권소식과 소외된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

-편집실에서-

도표로 본 설문대상별 10대 뉴스 반응도



①영장실질심사제 도입 ②유엔 고문방지위원회등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 발표 ③연세대생 노수석 씨 사망 ④김해성 목사 구속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국회청원 ⑤영화법 위헌 결정 및 제1회 인권영화제 개최 ⑥ 12·12, 5·18 재판 진행 ⑦노동법 개악 ⑧박충렬, 허인회 무죄판결 ⑨연세대 사태와 여학생 성추행 ⑩안기부법 개악

인권하루소식

합본 VII 색인

(제675호 - 제796호)